

RR 2019-04

# 교육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고등교육 정책 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김 병 주

2019년 10월



교육부 지정  
**고등교육정책연구소**  
Higher Educ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RR 2019-04

# 교육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고등교육 정책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김병주(영남대학교)  
공동연구자 : 박원혁(영남대학교)  
                  서화정(영남대학교)  
연구협력관 : 정상은(교육부)

2019년 10월



교육부 지정  
**고등교육정책연구소**  
Higher Educ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이 연구는 교육부의 중점연구소지원사업비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 연구결과 요약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고등교육이 장기적 안목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관계자, 전문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한 정책결정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교육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 수립·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고등교육 관련 부처 및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고등교육 관련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함

### □ 교육정책 모형과 형성과정

- 교육정책은 사회적 공공적 조직적 활동으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국가와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관련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적으로 제시하며,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행성을 가지는 기본방침 내지 지침을 의미함
- 교육정책 결정모형은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쓰레기통 모형, 최적모형, 공공선택 모형, 체제분석 모형이 있음
- 교육정책의 형성과정은 일반적으로 정책결정단계, 집행단계, 집행 후 평가단계를 거침. 사회나 국민이 교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인식하는 단계부터 교육정책형성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음. 사회에서 교육이 문제가 되고 확산이 되면 정부나 연구기관, 학자들이 이를 문제화하여 교육정책으로 채택하고 이를 여러 경로와 과정을 거쳐 결정하여 정책으로 입안함
- 정책결정은 누가 주도적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이를 대체로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이 있음. 외부주도형은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정부 밖에서 하는 유형임.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문제가 국민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을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선택을 하는 모형임. 동원형은 사회문제를 바로 정부의제로 선택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유형임. 내부접근형은 사회문제를 바로 정책의제로 선택하여 실행하는 데 국민의 저항이 없이 그대로 시행하는 정책결정의 유형임.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국민, 이익집단, 언론, 연구소 및 학자, 정책결정자임
- 교육정책의 효과는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의 교육을 연계시켜 정책의 목적

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관련 당사자로 구성된 협력체를 중심으로한 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교육정책형성의 연계성과 상황적응성이 크게 증진시킬 것임.

- 교육정책 형성의 제약 요인은 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음. 인적 요인은 정책결정자나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 지식과 기술 및 경험, 가치관과 태도 등 개인적 요인이 합리적인 교육정책의 수립을 제약함. 조직적 요인은 중앙집권적인 조직 구조와 관료제적 특성, 의사 소통체제의 미비, 자원 정보, 시간의 부족과 조직과 관련된 제약요인이 합리적 정책 결정을 제약함. 환경적 요인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풍토, 문화적 배경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침

#### □ 고등교육정책 공동 태스크포스(TF) 운영

- 정부-대학-고등교육전문가 공동 태스크포스(TF)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정책 형성 및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실시함
-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은 대교협 회장(위원장), 부회장, 사무총장, 대학관계자,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국장, 과장, 고등교육전문가 등으로 함
- 본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의 내용에 따라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분과위원회를 구성함. 본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인 대학재정, 평가 일원화, 규제개선 및 대학미래비전의 3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함. 각 분과위원회에는 대학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하고 분과 총괄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함
- 회의 회의록 공유: 회의록은 회의 종료후 1~2일 내에 대교협에서 작성하여 교육부와 상호 확인한 후 TF 위원들에게 메일로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이를 배포하기로 함
- 회의자료 사전 제공: 대교협과 교육부는 각각 차기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TF위원들에게 회의 전에 제공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함
- 회의진행 방법: 마이크로 방식으로 회의 안건을 세부화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자료를 숙지한 후 토론 위주로 TF회의를 진행하기로 함
- 회의록 작성자 및 회의 자료 공유 담당자를 명시하여 TF위원에게 공유 및 컨택 포인트를 일원화하기로 함
- 회의 일정 : 격주 목요일 오후 4시 정기적으로 TF회의를 진행하기로 함
- 차수별 회의 주요내용
  - 1차 전체 회의 내용: 교육부와 대학의 공동 주체가 되어 제도와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진단하기 위해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회의를 개최

하기로 합의함

- 2차 전체회의 내용: 교육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신규 재정지업 사업 발굴(안)에 대해 교육부, 대학 관계자, 고등교육 전문 위원 등이 질의·응답과정을 통해 논의함
- 3차 전체 회의 내용: 고등교육 공동 TF 운영 관련하여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2일 내에 TF 위원들에게 메일로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이를 배포하기로 함. 대교협과 교육부는 각각 차기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TF위원들에게 회의 전에 제공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함. 마이크로 방식으로 회의 안건을 세부화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자료를 숙지한 후 토론 위주로 TF회의를 진행하기로 함. 고등교육재정 투자 확대 방안으로는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대학 재정 문제의 현실을 설명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규모 확대를 통한 재정 확충을, 중장기적으로는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지속적 재정 확보 방안을 제안함. 고등교육재정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함. 규제개선을 통한 간접적 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등록금 동결·인하, 교내장학금 유지·확충을 국가장학금 2유형의 수혜 조건으로 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안, 사립대학의 국가유공자 학비 면제분 국고 전액 보전 문제의 해결안, 사립대에 대한 세제 적용을 국립대와 동등하게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4차 전체 회의 내용: 대학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관인증평가 중심의 대학평가 일원화'의 필요성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3주기 기본역량진단과 기관평가인증을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함.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은 비용 절감 및 수익 창출 방안, 신규 재정지원사업 검토함.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차기 진단의 운영 연계를 위해 기관평가인증과 기본역량진단의 평가지표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함.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중·단기 과제를 설정함. 단기과제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사업비)의 규모 확대,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함. 중장기 과제로는 고등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법률(안), 고등교육재정을 OECD평균(GDP 대비 1.1%)에 해당하는 내국세의 8.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논의함
- 5차 전체 회의 내용: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차기 진단의 운영 연계를 위해 평가방식,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함. 일반재정지원사업 재정확충을 위하여 교육부

와 대교협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6차 전체 회의 내용: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차기 진단의 운영 연계 방안은 교육부와 대교협은 논의를 통해 진전된 협의 성과를 도출하기로 함.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 조건 및 적용 산식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2유형 개선(안)을 대교협과 논의하여 진전된 성과를 도출하기로 함. 산학협력 규제 개선 건의안, 대학정원 관련 개선 건의안, 대학인사 관련 개선 건의안, 대학설립운영/시설 관련 개선 건의안 검토함
- 7차 전체 회의 내용: 교육부 소관 대학 평가 중 개선 필요 사항(지표 간소화 등)에 대한 대학의 의견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함. 기본역량진단의 개선 방안,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안함. 규제개선 건의 28과제 검토함. 미래대학 혁신과제로 디지털형 교육으로의 전환, 교원 충원 및 대학 목적별 특화, 대학운영의 자율성 및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제안함
- 8차 전체 회의 내용: 공동 TF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대학혁신방안으로는 기초학문 분야 및 실용학문 분야 육성 제안, 대학 간 연계 플랫폼 구축,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사후평가제도 도입, 다빈치형 인재양성,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사감사 지양에 대해 논의함
- 9차 전체 회의 내용: 대학 규제개선 22건 과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함. 산학협력 5건, 대학설립 운영/시설 10건, 대학 행·재정 제도 개선 3건, 대학정원 2건, 대학인사 2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함. 추가 발굴한 대학 규제개선 과제는 관련부처와 검토하여 협의하기로 함.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의 국회 및 대정부 건의, 정책제안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대학 혁신 장애요인으로 전공, 강사법, 교육플랫폼,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 등록금 등과 관련한 문제를 제시하고 논의함

□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논의 쟁점

-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개선과제는 재정규모의 단계적 확충, 지출규모 축소를 통한 재정 확충,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재정 확충, 국가장학금 개선,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을 제안함
- 재정규모의 단계적 확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대학 일반지원사업비(대학혁신지원사업비)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법적 기반 구



축으로 안정적 규모 확대 방안을 제안함

- 지출규모 축소를 통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국가유공자 학비 면제분 전액 보전, 국가적 차원의 학술정보자료 지원체계의 확충, 전기·가스 등 비용 감축, 사립대에 대한 세제 적용을 국립대와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개편 안을 제안함
-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마련, 교육 교류망 구축 사업, 대학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대학생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기초학문분야 역량강화 사업을 제안함
-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하고 1유형으로 통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동결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고용보험기금의 일부를 대학에 투자, 민간자원의 대학 유입경로 확대 방안을 제안함
- 대학평가 부담 완화하기 위해서는 진단·인증의 정량적 정성 지표 중 동일·유사한 하위요소에 대한 보고서 작성 서식 등을 통일하여 공통으로 활용하고 진단·인증 간 일치하지 않는 지표 및 하위요소의 경우에는 진단·인증 모두 지표 및 하위요소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지표를 간소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단·인증 지표 간 연계 가능성을 검토함
- TF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한 결과는 조치완료 3건, 수용 19건, 일부수용 6건, 신중검토 20건, 현행유지 2건임. (조치완료) 3건 : 후생복지시설 설치 시 용도변경 절차 면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범위 확대, 산학협력중점 교수 겸직 허용 등, (수용) 19건 : 대학 산학협력 관련(교육부 수용이나 관련 부처 협의 필요), 사립대학 임면보고개선,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시 처분 조건 개선 및 완화 등, (일부수용) 6건 : 대학·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 요건 개선안, 교육부의 행정 제재와 전문대학원개설 불가를 연계한 규제, 국립대학 공용차량 교체 제도 개선 등, (신중검토) 20건 : 국립대학 교직원 인사제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대학시설조직 확충 등, (현행유지) 2건 : 교육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 후생복지시설 사용목적으로 부동산임대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부과 기준 등
- 미래대학 혁신과제는 디지털형 교육으로의 전환, (교원 충원 및 대학목적별 특화,

대학운영의 자율성 및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대학의 자율적, 탄력적 구조조정 등을 제안함

□ 제언

- 공동TF 운영 성과는 국가장학금 2유형 개선 및 사립대학 국가유공자 등록금 보전을 통하여 대학재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하고, 기본역량진단과 기관평가인증의 정량·정성 지표 연계 방안 마련하기로 함. 또한 50여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는 조치완료 3건, 수용 19건, 일부수용 6건, 신중검토 20건, 현행유지 2건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필요성과 합의점에 이룸
- 대학혁신을 위한 규제 방안은 기초학문 분야 및 실용학문 분야 육성과 대학 간 연계 플랫폼 구축,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사후평가제도 도입, 다빈치형 인재양성,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사감사 지양, 대학혁신 의견 수렴 필요성을 제안함
  - 거점 국립대는 기초학문 분야를 육성하고, 사립대는 설립 목적 또는 특성화 방향에 따른 실용학문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제안함
  - 대학 간 연계 플랫폼은 복수전공 학생들의 학사관리를 위한 좋은 대안이므로 학생들의 수업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구축·운영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 학생 선발, 모집단위, 정원관리 등을 대학의 의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함
  - 미래사회에서는 다방면에 뛰어난 다빈치형 인재양성이 지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미래교육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 필요함

## 목 차

|   |     |
|---|-----|
| I. 서론 .....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1   |
| 2. 연구내용 .....                                 | 2   |
| 3. 연구방법 .....                                 | 2   |
| II. 교육정책 모형과 형성과정 .....                       | 3   |
| 1. 교육정책의 개념 및 모형 .....                        | 3   |
| 2. 교육정책의 형성과정 .....                           | 6   |
| III. 고등교육정책 공동 태스크포스(TF) 운영 .....             | 12  |
| 1. 고등교육정책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 .....               | 12  |
| 2.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운영내용 .....                    | 14  |
| IV.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논의 쟁점 .....                  | 20  |
| 1. 고등교육재정 .....                               | 20  |
| 2. 대학평가 부담 완화 .....                           | 40  |
| 3. 규제개선 및 대학미래비전 .....                        | 45  |
| V. 요약 및 제언 .....                              | 64  |
| 참고문헌 .....                                    | 69  |
| 부 록 .....                                     | 70  |
| 부록 1. 규제개선 관련 근거자료 .....                      | 70  |
| 부록 2. 대학혁신 장애요인 및 혁신안 .....                   | 112 |
| 부록 3. 대교협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차기 진단의 운영 연계(안) ..... | 132 |

## 표 목 차

|  |    |
|--|----|
| <표 III-1> 공동 태스크포스(TF) 조직 구성 .....                     | 13 |
| <표 III-2> 공동 태스크포스(TF) 분과위원회 .....                     | 14 |
| <표 III-3> TF 회의 차수별 참석자 현황 .....                       | 15 |
| <표 III-4> TF 전체 회의 차수별 주요내용 .....                      | 18 |
| <표 III-5> TF 운영위원회 회의 차수별 주요내용 .....                   | 19 |
| <표 IV-1>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중 .....                     | 20 |
| <표 IV-2>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투자현황 국제비교 .....                    | 21 |
| <표 IV-3>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규모 현황 .....                  | 22 |
| <표 IV-4> 교육부 소관 실질고등교육예산 규모 현황 .....                   | 24 |
| <표 IV-5> 연도별 재정지원사업 유형별 고등교육재정 규모 변화 .....             | 25 |
| <표 IV-6> 정부(중앙부처)의 사업목적별 일반지원사업비 규모(2016회계연도 기준) ..... | 26 |
| <표 IV-7> 설립유형별 연도별 평균 대학등록금 현황 .....                   | 27 |
| <표 IV-8> 사립대학교 교비회계 세입결산 현황(자금계산서) .....               | 28 |
| <표 IV-9> 연도별 사립대학 학부등록금 수입 결손액 추정 .....                | 29 |
| <표 IV-10> 사립대학교의 실질국고보조금 규모 .....                      | 29 |
| <표 IV-11> 2017년도 기준 대학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감소 규모 .....       | 30 |
| <표 IV-12> 교육여건 관련 재정 투자규모의 증감 현황 .....                 | 30 |
| <표 IV-13> 사립대학교 연도별 사용 대비 적립 현황 .....                  | 31 |
| <표 IV-14> 연도별 인건비 대비 등록금 비율 대학 현황 .....                | 31 |
| <표 IV-15> 연도별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                      | 32 |
| <표 IV-16> 사립대학의 연도별 교내장학금 배정 현황 .....                  | 33 |
| <표 IV-17>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 추계 2019~2023년 .....              | 34 |
| <표 IV-18> 전자저널 국가지원 해외 사례 .....                        | 35 |
| <표 IV-19> 교육부 소관 대학 대상 평가 .....                        | 41 |
| <표 IV-20> 진단·인증 정량·정량적 정성 지표 비교 .....                  | 42 |
| <표 IV-21> 진단·인증 정량적 정성 지표 중 유사 하위요소 .....              | 43 |
| <표 IV-22> 평가지표 연계(안) .....                             | 44 |
| <표 IV-23> 평가지표 연계에 따른 기능 구분(안) .....                   | 44 |
| <표 IV-24> 공통지표 운영(안) .....                             | 45 |
| <표 IV-25> 2019년 상반기 대학 규제개선 과제 검토 현황 .....             | 46 |
| <표 IV-26> 혁신과제 아이디어 및 제안 .....                         | 61 |

## 그 림 목 차

|   |    |
|---|----|
| [그림 II-1] 교육정책 과정과 환경 .....                                     | 6  |
| [그림 II-2] 한국 교육정책 형성과정모형 .....                                  | 9  |
| [그림 II-3] 한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 모형도 .....                               | 10 |
| [그림 III-1] TF팀의 단계별 진행내용 .....                                  | 12 |
| [그림 IV-1] 국민 1인당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중(2015 기준, 단위:%) ..       | 22 |
| [그림 IV-2]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비율 .....                   | 23 |
| [그림 IV-3] 국가경제성장 대비 사립대학교 적정 등록금 추정 .....                       | 23 |
| [그림 IV-4] QS 세계대학순위 500위권내 미국과 국내 대학의 예산 및 학생1인당 교육비 비교(2017) · | 26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빠른 사회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의 여건과 정책환경이 급진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고 대학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고등교육 정책 수립 요구가 증대됨
-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은 많은 이해집단이 관련된 매우 복잡한 현상임. 정책 형성의 결정은 대통령, 소관부처, 국회 등과 같은 공식적 참여자와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과 같은 비공식 참여자가 논의를 통해 이루어짐. 교육정책은 국가 주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회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음
  -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주요 정책 및 개선 과제를 모색해야 할 것임
- 중앙정부 중심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은 상의하달의 정책결정이 되어 정책의 집행을 강요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됨.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교육정책은 지역 및 대학의 교육상황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교육정책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상시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조정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교육정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조정을 통한 정책형성과정의 필요함
- 고등교육이 장기적 안목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관계자, 전문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정부는 대학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 대학을 파트너로 바라봐야 할 것임. 특히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규제 사항과 사각지대의 발굴을 통해 시의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고  
등교육 정책 수립.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교육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사회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의 여건과 정책환경이 변화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 수립.추진에 기여할 것임
  - 고등교육 정책을 계획 수립 단계 또는 시행 전 단계에서부터 고등교육 이해관계자와  
현장전문가 등이 정부와 함께 공동 주체가 되어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함

## 2. 연구내용

- 정부-대학-고등교육전문가 고등교육정책 공동 연구 모델 운영
  - 고등교육정책 공동 테스트포스(TF) 목표 및 조직 구성
  -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운영내용 분석
- 공동연구모델 운영을 통한 고등교육 정책 도출
  -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논의 쟁점 제시
  - 고등교육재정 확충/대학 평가 부담 완화/규제개선 및 대학미래비전 관련 정책 분석

## 3. 연구방법

- 고등교육 정책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연구
  - 고등교육재정 현황 분석
  - 대학평가 관련 정책의 현황 분석
- 보고회 및 회의, 간담회
  -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정부-대학-고등교육전문가 공동 회의를 통해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개선점과 향후 추진 방향 설정



## Ⅱ. 교육정책 모형과 형성과정

### 1. 교육정책의 개념 및 모형

- 교육정책은 사회적 공공적 조직적 활동으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국가와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관련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적으로 제시하며,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행성을 가지는 기본방침 내지 지침을 의미함
- 교육정책은 교육활동의 목표·수단·방법 등에 관한 최적의 대안을 의도적·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이며,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교육제도와 그 운영을 위한 대강을 제시하며 협의의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그 지침이 됨(최준렬, 2002)
  - 교육정책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봉사하는 수단적 성격을 가지며, 이때 교육은 사회적·공공적·조직적 활동에 국한됨
  - 교육정책의 주체는 정치체제를 이루는 국가와 공공단체에 국한되며 단위학교는 교육정책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교육정책은 국민과 주민의 동의를 기초로 하는 대표성과 공공의 일반이익을 전제로 하는 공익성의 토대 위에 강제성과 강행성을 가짐
  - 교육정책은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 대안의 선택을 의미하며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교육행정의 지침이 됨
- 교육정책 결정모형은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쓰레기통 모형, 최적모형, 공공선택 모형, 체제분석 모형이 있음
  - 합리성 모형은 인간의 과학적 지식과 이성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에 바탕을 두고 정책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임. 이 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합리성에 근거한 경제인과 같은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한 이론 모형이라 할 수 있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책결정자는 문제 확인→목표 설정→대안 탐색→결과 예측→비교 평가→대안 선택 등 일련의 문제해결 과정을 밟을 것이 권장되고 있음. 비판점은 ① 인간을 너무 합리적인 동물로만 파악한 나머지 감정을 가진 심리적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②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며, 문제분석능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③ 대안의 과학적인 비교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④ 합리성 모형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⑤ 합리성 모형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상황에서는 이 양자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만족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문제해결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시간, 자원, 비용 등도 제한되어 있다고 봄. 따라서 최선의 선택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합리성만을 추구 할 수밖에 없다고 봄. 즉, 결정은 이만하면 '만족한다' 또는 '충분하다'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임. 만족모형은 실제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적·실증적 모형으로서 가치를 지님. 비판점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책결정자마다 다를 수 있고 유동적이라는 점임
- 점증모형은 합리성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실제 정책 결정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함. 나아가 점증주의 모형은 정책이 실제 상황에서 점증적으로 결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모형이면서 동시에 규범적, 처방적 모형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 점증모형은 합리성 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최선의 정책대안을 합리적인 기준에 터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족모형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 점증주의 모형의 특이한 사항은 기존 정책이 관련 정치 집단 간의 정치적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 만큼,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부분적인 수정, 보완을 통해 정책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임. 따라서 합리성 모형에서처럼 광범위한 대안을 놓고 비교, 평가하기보다는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결과 예측을 통해 정책을 선택하게 됨. 비판점은 보수주의에 빠지기 쉬우며, 미국과 같이 안정되고 상대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적합하나, 근본적인 혁신을 필요로 하는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음. 무사안일과 타성에 빠지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기존 정책이 기득권층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는 경우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음
- 혼합모형은 합리성 모형의 현실 감각 부족과 점증주의 모형의 보수주의 지향이라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이 둘을 혼합한 것임. 이 모형은 정책결정을 기본적 결정과 세부 결정으로 나누고, 전자는 합리성모형을 후자는 점증주의 모형을 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함. 혼합모형은 모든 정책결정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지 않고 크게 두 수준으로 나누고 각각에 맞는 정책결정 모형을 제시하는 처방적 또는 규범적 모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새로울 것이 없는 모형, 특히 합리성 모형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를 전제로 하는 모형으로,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의 전형적인 예를 교육조직에서 찾고 있음. 특징으로는 ① 조직 목적의 불명확성 ② 조직기술의 불명료성, ③ 유동적인 조직에의 참가 등을 들고 있음. 조직에서의 정책결정은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우발성에 기초하고 있음. 이 모형에서는 교육 조직처럼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의 정책 결정은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그리고 참여자 등 네 요소의 흐름이 서로 다른 시간에 쓰레기통 안에 들어와서 우연히 동시에 모여지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 정책의 문제 제기가 반드시 해결책보다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해결책이 될 만한 것이 따로 있었고, 이것이 우연히 어떤 참여자에 의해 선택되어 어떤 문제의 해결과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것임. 이 모형은 일부 교육조직, 공공조직, 불법조직 등에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적용 될 수는 있으나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처방적 모형은 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음
  - 최적모형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치를 추구하는 규범적 모형임. 때때로 직관이나 초합리적인 생각도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 하지만 창의적인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지만, 너무 이상에만 치우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음
  - 공공선택 모형은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정부기관이 산출해내는 공공재화와 용역을 중시하고 사적 부분에서의 그것과는 구분하는 것으로, 정책의 파급효과를 강조하며, 정책 결정자로서의 개인을 가정함
  - 체제분석 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모형으로서, 사회환경에서 정책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자원이 투입되며, 그것이 정치체제 속에서 전환과정을 통하여 사회환경으로 산출되는 것이 정책결정이며, 그것이 또한 정치체제에 대한 지운으로 환류된다는 것임
- 교육 정책은 정치적 관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며, 목적은 교육 목적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임. 특징은 행위적 측면, 형성 혹은 과정의 측면, 효과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행위의 측면은 의사 결정과정임. 교육정책은 본질적으로 합리적이고 목적 지향적이고,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과학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기반으로 함. 또한 교육정책은 최적의 대안을 채택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최적화를 지향하는 선택행위임

- 형성 혹은 과정의 측면은 정치적 과정임. 교육정책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과정 심의 합법화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형성과 추진은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 정치권력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권력의 속성과 그 행사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효과의 측면은 교육목적의 실현임. 교육정책의 효과성은 교육목적의 실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하는 점임. 교육정책은 교육의 외적 조건을 정비하고 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음. 교육정책의 성과를 교육의 국가 발전과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찾을 수 있음

## 2. 교육정책의 형성과정

- 교육정책의 형성과정은 일반적으로 정책결정단계, 집행단계, 집행 후 평가단계를 거침. 사회나 국민이 교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인식하는 단계부터 교육정책형성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음. 사회에서 교육이 문제가 되고 확산이 되면 정부나 연구기관, 학자들이 이를 문제화하여 교육정책으로 채택하고 이를 여러 경로와 과정을 거쳐 결정하여 정책으로 입안함(정일환, 2000)



[그림 II-1] 교육정책 과정과 환경

출처: 정일환(2000). 교육정책론-이론과 적용. 원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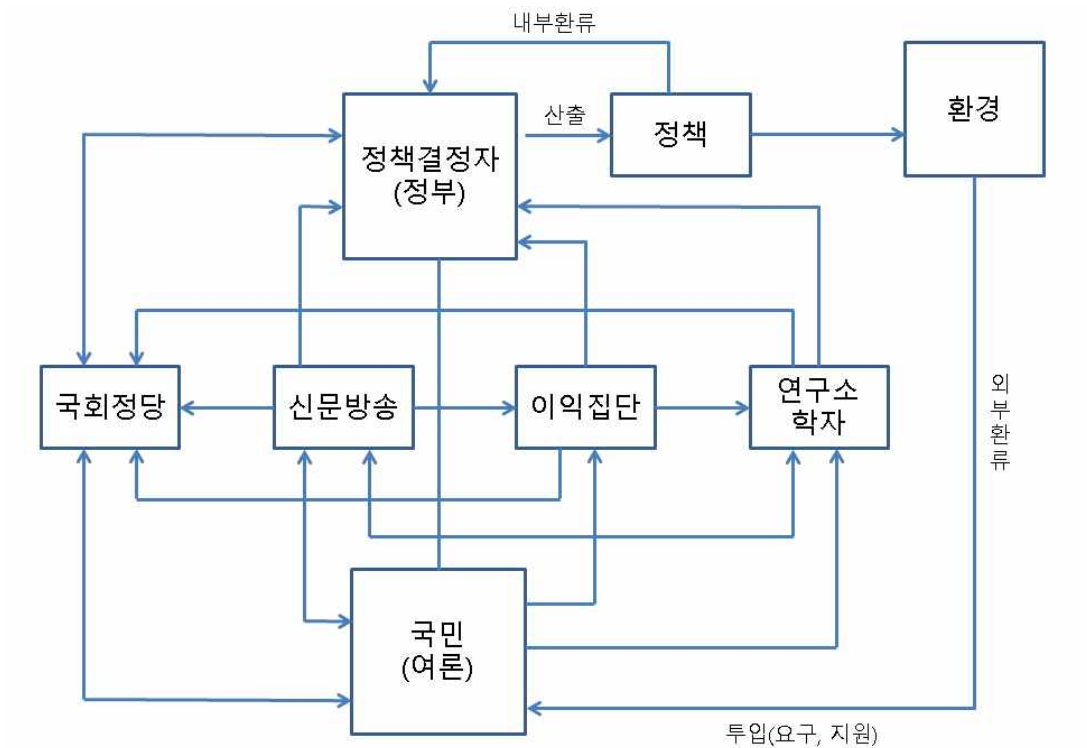
- 교육정책의 형성과정은 교육문제의 제기, 정부귀속과 교육정책 의제화, 교육정책의 목표 설정, 정책 대안의 탐색과 선택, 정책 대안의 심의 결정과 합법화단계를 거침
- 먼저 교육문제의 제기 단계는 교육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집단에게 불만족이나 갈등 혹은 불안정한 상환의 지속을 야기하는 상태나 조건을 의미함. 이러한 상태 조건은 교육에 관한 사회적 논점, 교육 활동의 장애물 혹은 극복해야 할 곤란, 교육에서 성취해야 할 미결의 과제, 연구와 검토의 대상이 되는 의문점 등이 있음
  - 정부귀속과 교육정책 의제화 단계는 사회 문제화된 교육문제가 본격적인 교육정책의 문제로서 인식되면, 그것은 정부의 문제로 귀속되고, 정책의제로 전환됨. 정부에 귀속되어 정책의제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정치 체제하에 의해 그 중요성이나 심각성이 인식되는 경우
    - 해결할 주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관련자 간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 문제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가 방대한 경우
    - 민간투자 유인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당면한 교육문제를 방치하는 경우 그것이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 교육정책의 목표 설정은 미래를 지향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 시함. 공식적으로 표방한 목표와 실제의 목표는 다를 수 있으며, 목표가 위장되거나 목표의 일부가 숨겨진 채 제시되는 경우임. 교육정책의 목표는 정책의 집행 후 평가의 중요한 준거가 됨
  - 정책 대안의 탐색과 선택은 여러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대안의 기술적 정치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대안의 탐색에 앞서 교육문제의 실태와 문제점과 미래의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대안의 작성 과정에는 정부 관료, 자문기구, 연구기관 여러 요소가 참여하여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정책 대안의 심의 결정과 합법화는 대안이 선택되면 이를 심의 평가하고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결정하여 합법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교육정책이 결정되고 교육인적 자원 방관이나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포되거나 국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관련 법률안이 정부의 이름으로 공포되면 교육정책의 합법성이 공인됨. 법률안의 공포는 교육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행정부 내의 결정도 합법적인 정부기능의 일환으로 정당성이 인정됨
- 정책결정단계에서 정책의제 설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정일환, 1996)
- 첫째, 정책의제 설정과정은 정책과정에 작용하는 정치세력들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국면임. 교육정책의 경우 무수히 존재하는 교육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요구 혹은

강구하려는 정책과정에서 처음으로 관련 집단이나 개인이 등장하는 국면이 됨. 따라서 해결 가능성과 함께 집단 간의 갈등 가능성도 시작되는 단계임

- 둘째, 정책의제 설정과정은 민주적 정치참여과정의 핵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교육 규정정책 결정체제 내외에서 어떠한 교육문제를 인지하고 그 해결책을 요구 또는 모색할 경우 집단적인 사고과정을 통해,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과 절차의 하나라는 것임
- 셋째, 정책의제는 정부의 정책결정체제에 의해 특정화된 정책문제이며, 따라서 정책의제 설정은 정책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성격을 지니게 함. 따라서 우선적인 정책의제로 선정된다면 다른 정책문제보다 좀 더 해결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넷째, 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는 다음 단계인 정책결정단계에서 찾아내어야 할 정책대안들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음. 정책문제의 선정에서도 암암리에 혹은 의도적으로 어떤 교육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가져올 긍정적, 부정적 파급효과와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정책대안을 비교·제시하게 됨
- 다섯째, 정책의제 설정단계는 정책의제화의 양상에 따라 후속 정책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교육정책과정은 의제 설정 이후에도 정책결정, 집행, 평가, 종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됨. 따라서 교육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 승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따라 그 이후 단계에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정책결정은 누가 주도적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이를 대체로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이 있음. 외부주도형은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정부 밖에서 하는 유형임.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문제가 국민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선택을 하는 모형임. 동원형은 사회문제를 바로 정부의제로 선택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유형임. 내부접근형은 사회문제를 바로 정책의제로 선택하여 실행하는 데 국민의 저항이 없이 그대로 시행하는 정책결정의 유형임.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국민, 이익집단, 언론, 연구소 및 학자, 정책결정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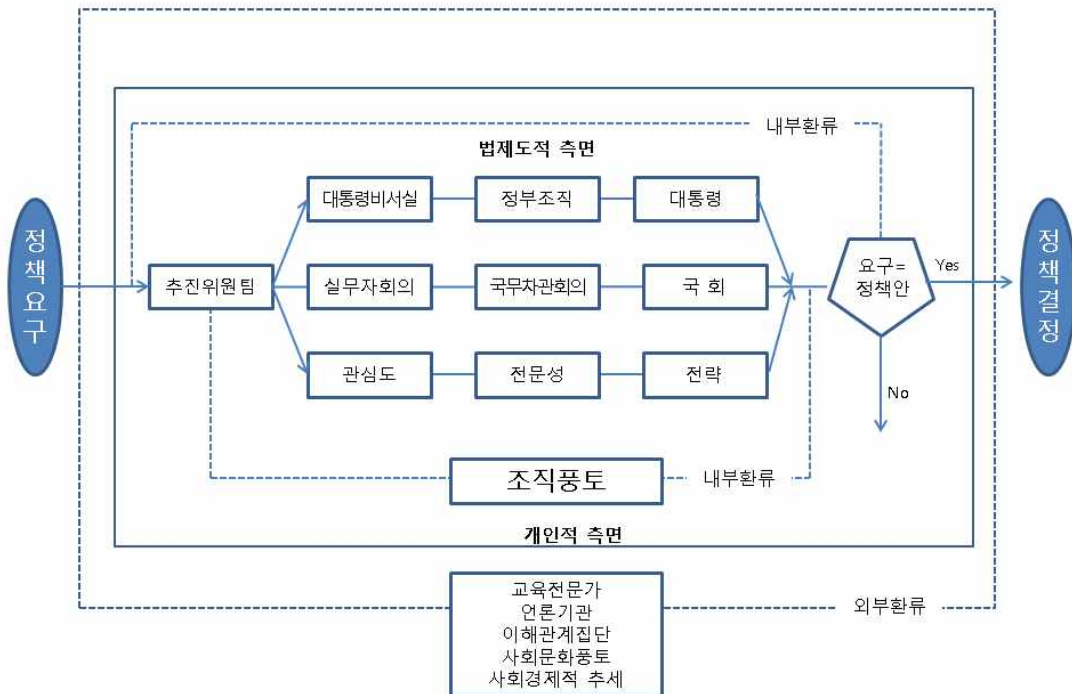
- 김윤태(2000)는 한국적 상황에서 정책 결정에 작용하는 변인을 정책 결정자, 국회와 정당, 이익집단, 연구소 및 학자, 국민여론, 신문방송 및 환경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권력 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책이 결정됨을 보여 주었음. 이 모형은 한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역동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틀의 추출을 최소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그림 II-2] 한국 교육정책 형성과정모형

출처: 김운태(2000).

- 이균현(1987)은 하나의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되기 까지에 작용하는 변인은 대개 정책 결정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법.제도적 측면, 개인적 측면, 조직의 풍토측면, 조직의 외적 측면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음. 이 네 가지 측면을 근간으로 하여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각 변인 간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였음
- 법제도적 측면은 대통령 비서실, 정부부처, 최고 정책 결정자인 대통령을 들 수 있음. 개인적 측면은 실무 추진단의 관심도, 전문성, 정책 결정에 대한 전략을 의미함. 조직풍토 측면은 추진 위원단이 실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조직의 분위기, 가치, 규범, 제도 및 각종 보상 등을 들 수 있음. 조직 외적 측면은 언론, 이해 관계 집단, 교육 전문가, 사회경제적 환경, 문화, 규범, 가치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II-3] 한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 모형도

- 교육정책의 형성과정에 크게 작용하는 변인으로서는 정치적 과정, 행정과정, 입법과정, 사법과정이 있음. 교육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시켜 주는 입법과정이 가장 중요하며, 이 네 가지 변인들은 하나의 독립적인 과정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형성하고 있음
- 정치적 과정이란 전문가집단, 교원집단, 학부모집단, 학생집단 등과 같은 교육에 관련 있는 이익집단들이 선거, 언론매체 및 지원체제를 이용하여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함
  - 행정과정은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역할 외에도 자료수집 및 분석, 각종 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지식의 창출, 그리고 과학적 방법에 의한 자료 분석을 하는 행정적 권한과 능력을 의미함
  - 입법과정은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부의 토의·비판·입법화의 과정을 의미함
  - 사법과정은 법원의 판례와 같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제적인 기능은 갖고 있지 않으나 사회적인 인식과 통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교육정책의 효과는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의 교육을 연계시켜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관련 당사자로 구성된 협력체를 중심으로 한 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교육정책형성의 연계성과 상황 적응성이 크게 증진시킬 것임
  
- 교육정책 형성의 제약 요인은 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음. 인적 요인은 정책결정자나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 지식과 기술 및 경험, 가치관과 태도 등 개인적 요인이 합리적인 교육정책의 수립을 제약함. 조직적 요인은 중앙집권적인 조직 구조와 관료제적 특성, 의사 소통체제의 미비, 자원 정보, 시간의 부족과 조직과 관련된 제약요인이 합리적 정책 결정을 제약함. 환경적 요인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풍토, 문화적 배경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침

### Ⅲ. 고등교육정책 공동 태스크포스(TF) 운영

#### 1. 고등교육정책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

- 정부-대학-고등교육전문가 등이 정책결정의 공동 주체자가 되어 고등교육과 관련한 사회 문제화된 교육문제를 정부 귀속 및 정책의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정부-대학-고등교육 전문가 공동 태스크포스(TF)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정책 형성 및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실시함. 이에 대한 단계별 주요 사항은 <그림 Ⅲ-1> 에서 제시함

| 단계     | 진행 내용   | 주요 논의 사항   |
|--------|---|--|
| 사전 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관련 정책 논의를 위한 정부-대학-고등교육전문가 구성</li> <li>- 교육부 고등교육정책 중간관리자</li> <li>-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중간관리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관련 문제에 대한 분류</li> <li>- 정부-대학-고등교육전문가 공동 협력을 위한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 필요 제기</li> <li>- 공동 TF 팀의 역할에 대한 구분</li> </ul> |
| TF팀 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9회 실시</li> <li>· 대교협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대학 관계자</li> <li>·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국장, 과장</li> <li>· 고등교육전문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정책 도출을 위한 정부-대학-고등교육전문가 협력 방안</li> <li>- 고등교육현안에 대한 논의</li> </ul>   |
| 보고서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TF 회의자료 및 회의록 작성</li> <li>- 공동 TF 연구 모형 도출</li> </ul>   |  |

[그림 Ⅲ-1] TF팀의 단계별 진행내용

#### 가.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 개괄

- 공동 태스크포스(TF) 목표
- 고등교육의 주요 정책 과제 및 미래교육혁신 방안 논의

□ 공동 태스크포스(TF) 조직 구성

- 고등교육 주요 정책에 대한 정부-대학-고등교육전문가 등이 공동 주체가 됨. 대교협 회장(위원장), 부회장, 사무총장, 대학관계자,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국장, 과장, 고등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표 III-1> 공동 태스크포스(TF) 조직 구성

| 구분      | 소속             | 직위       | 성명    |
|---------|----------------|----------|-------|
| 교육부     | 고등교육정책실        | 실 장      | 김 규 태 |
|         | 고등교육정책관        | 국장       | 최 은 옥 |
|         | 대학학술정책관        | 국장       | 이 승 복 |
|         | 직업교육정책관        | 국장       | 김 태 훈 |
|         | 고등교육정책과        | 과장       | 김 도 완 |
|         | 국립대학정책과        | 과장       | 최 수 진 |
|         | 사립대학정책과        | 과장       | 임 용 빈 |
|         | 대학재정장학과        | 과장       | 김 태 경 |
|         | 학술진흥과          | 과장       | 윤 소 영 |
|         | 대학학사제도과        | 과 장      | 구 영 실 |
|         | 교육일자리총괄과       | 과 장      | 천 범 산 |
|         | 산학협력정책과        | 과장       | 이 해 속 |
| 대교협     | 강원대학교(대교협 회장)  | 총장       | 김 헌 영 |
|         | 송실대학교(대교협 부회장) | 총장       | 황 준 성 |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사무총장     | 황 홍 규 |
|         | 강원대학교          | 기획처장     | 김 명 동 |
|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교무처장     | 전 종 섭 |
|         | 부경대학교          | 기획처장     | 정 근 주 |
|         | 송실대학교          | 교무처장     | 장 경 남 |
|         | 단국대학교          | 기획처장     | 박 범 조 |
|         | 한세대학교          | 기획처장     | 신 현 기 |
|         | 아주대학교          | 교무처장     | 장 우 진 |
|         | 충남대학교          | 교무처장     | 김 건 철 |
|         | 목포대학교          | 기획처장     | 송 하 철 |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고등교육연구소장 | 강 낙 원 |
| 고등교육전문가 | 성균관대학교         | 교수       | 최 재 봉 |
|         | 영남대학교          | 교수       | 김 병 주 |
|         | 중앙대학교          | 교수       | 박 상 규 |
|         | 충북대학교          | 교수       | 이 정 미 |
|         | 한양대학교          | 교수       | 박 주 호 |
|         | 한국교육개발원        | 본부장      | 임 후 남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본부장      | 채 창 균 |

## 나. 공동 태스크포스(TF) 분과위원회

- 본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의 내용에 따라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분과위원회를 구성함. 본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인 대학재정, 평가 일원화, 규제개선 및 대학미래비전의 3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함. 각 분과위원회에는 대학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하고 분과 총괄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함

<표 III-2> 공동 태스크포스(TF) 분과위원회

| 분야            | 소속        | 성명  | 비고    |
|---------------|-----------|-----|-------|
| 대학 재정         | 강원대학교     | 김명동 |       |
|               | 목포대학교     | 송하철 |       |
|               | 영남대학교     | 김병주 | 분과 총괄 |
|               | 중앙대학교     | 박상규 |       |
|               | 충북대학교     | 이정미 |       |
|               | 한국외국어대학교  | 전종섭 |       |
| 평가 부담완화       | 단국대학교     | 장세원 |       |
|               | 부경대학교     | 정근주 | 분과 총괄 |
|               | 성균관대학교    | 최재봉 |       |
|               | 한세대학교     | 신현기 |       |
|               | 한국교육개발원   | 임후남 |       |
| 규제개선 및 대학미래비전 | 송실대학교     | 장경남 | 분과 총괄 |
|               | 아주대학교     | 권용진 |       |
|               | 충남대학교     | 김건철 |       |
|               | 한양대학교     | 박주호 |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 |       |

## 2.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운영내용

- 공동 TF 내 '운영위원회'를 두고 TF 회의 의제를 선정하고 TF 회의에서 해결 및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운영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TF회의는 격주로 개최하기로 함
- 회의 회의록 공유: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2일 내에 대교협에서 작성하여 교육부와 상호 확인한 후 TF 위원들에게 메일로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이를 배포하기로 함

- 회의자료 사전 제공: 대교협과 교육부는 각각 차기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TF위원들에게 회의 전에 제공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함
- 회의진행 방법: 마이크로 방식으로 회의 안건을 세부화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자료를 숙지한 후 토론 위주로 TF회의를 진행하기로 함
- 회의록 작성자 및 회의 자료 공유 담당자(대교협 기획홍보팀장 임현창)를 명시하여 TF 위원에게 공유 및 컨택 포인트를 일원화하기로 함
- 회의 일정 : 격주 목요일 오후 4시 정기적으로 TF회의를 진행하기로 함
  - 회의 종료 후 일부 위원들은 수업 일정을 고려하여 금요일 진행을 제안함
- 차수별 회의 참석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Ⅲ-3> TF 회의 차수별 참석자 현황

| 회의 | 일자                  | 장소 | 참석자 |     |     |    |
|----|---------------------|----|-----|-----|-----|----|
|    |                     |    | 교육부 | 전문가 | 대교협 | 총  |
| 1차 | 2019.3.20.<br>운영위원회 | 서울 | 8   | -   | 9   | 17 |
| 2차 | 2019.5.27.<br>운영위원회 | 서울 | 5   | -   | 7   | 12 |
| 3차 | 2019.3.29.<br>전체회의  | 서울 | 13  | 4   | 17  | 34 |
| 4차 | 2019.4.11.<br>전체회의  | 서울 | 6   | 5   | 7   | 18 |
| 5차 | 2019.4.26.<br>전체회의  | 서울 | 6   | 5   | 16  | 27 |
| 6차 | 2019.5.10.<br>전체회의  | 서울 | 10  | 4   | 14  | 28 |
| 7차 | 2019.5.24.<br>전체회의  | 서울 | 6   | 6   | 16  | 28 |
| 8차 | 2019.6.14.<br>전체회의  | 서울 | -   | 3   | 14  | 17 |
| 9차 | 2019.7.12.<br>전체회의  | 서울 | 12  | 2   | 14  | 28 |

□ 차수별 회의 주요내용

○ 1차 전체 회의 내용

- 교육부와 대학의 공동 주체가 되어 제도와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진단하기 위해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2차 전체회의 내용

- 교육부, 대학 관계자, 고등교육 전문 위원 등이 공동 TF를 구성하여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교육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신규 재정지업 사업 발굴(안)에 대해 교육부, 대학 관계자, 고등교육 전문 위원 등이 질의·응답과정을 통해 논의함

○ 3차 전체 회의 내용

- 고등교육 공동 TF 운영 관련하여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2일 내에 TF 위원들에게 메일로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이를 배포하기로 함. 대교협과 교육부는 각각 차기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TF위원들에게 회의 전에 제공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함. 마이크로 방식으로 회의 안건을 세부화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자료를 숙지한 후 토론 위주로 TF회의를 진행하기로 함
- 고등교육재정 투자 확대 방안으로는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대학 재정 문제의 현실을 설명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규모 확대를 통한 재정 확충을, 중장기적으로는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지속적 재정 확보 방안을 제안함. 고등교육재정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함
- 규제개선을 통한 간접적 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등록금 동결·인하, 교내장학금 유지·확충을 국가장학금 2유형의 수혜 조건으로 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안, 사립대학의 국가유공자 학비 면제분 국고 전액 보전 문제의 해결안, 사립대에 대한 세제 적용을 국립대와 동등하게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4차 전체 회의 내용

- 대학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관인증평가 중심의 대학평가 일원화'의 필요성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3주기 기본역량진단과 기관평가인증을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함
-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은 비용 절감 및 수익 창출 방안, 신규 재정지원사업 검토함
-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차기 진단의 운영 연계를 위해 기관평가인증과 기본역량진단의 평가지표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함
-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중·단기 과제를 설정함. 단기과제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사업비)의 규모 확대,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함.

중장기 과제로는 고등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법률(안), 고등교육재정을 OECD평균(GDP 대비 1.1%)에 해당하는 내국세의 8.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논의함

○ 5차 전체 회의 내용

-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차기 진단의 운영 연계를 위해 평가방식,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함
- 일반재정지원사업 재정확충을 위하여 교육부와 대교협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6차 전체 회의 내용

-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차기 진단의 운영 연계 방안은 교육부와 대교협은 논의를 통해 진전된 협의 성과를 도출하기로 함
-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 조건 및 적용 산식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2유형 개선(안)을 대교협과 논의하여 진전된 성과를 도출하기로 함
- 산학협력 규제 개선 건의안, 대학정원 관련 개선 건의안, 대학인사 관련 개선 건의안, 대학설립운영/시설 관련 개선 건의안 검토함

○ 7차 전체 회의 내용

- 교육부 소관 대학 평가 중 개선 필요 사항(지표 간소화 등)에 대한 대학의 의견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함
- 기본역량진단의 개선 방안,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안함
- 규제개선 건의 28과제 검토함
- 미래대학 혁신과제로 디지털형 교육으로의 전환, 교원 충원 및 대학 목적별 특화, 대학운영의 자율성 및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제안함

○ 8차 전체 회의 내용

- 공동 TF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대학혁신방안으로는 기초학문 분야 및 실용학문 분야 육성 제안, 대학 간 연계 플랫폼 구축,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사후평가제도 도입, 다빈치형 인재양성,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사감사 지양에 대해 논의함

○ 9차 전체 회의 내용

- 대학 규제개선 22건 과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함. 산학협력 5건, 대학설립 운영/시설 10건, 대학 행·재정 제도 개선 3건, 대학정원 2건, 대학인사 2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 추가 발굴한 대학 규제개선 과제는 관련부처와 검토하여 협의하기로 함.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의 국회 및 대정부 건의, 정책제안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대학 혁신 장애요인으로 전공, 강사법, 교육플랫폼,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 등록금 등과 관련한 문제를 제시하고 논의함

<표 III-4> TF 전체 회의 차수별 주요내용

| 회의   | 일자                               | 장소 | 주요내용   |
|------|----------------------------------|----|--|
| 1.2차 | 2019.2.15.<br>2019.2.27.<br>전체회의 | 서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 주요 정책 주제, 고등교육혁신 정책과제, 대학의 건의사항 및 규제 개선과제 등 논의</li> </ul>  |
| 3차   | 2019.3.29.<br>전체회의               | 서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 공동TF 운영 관련</li> <li>○ 고등교육재정 투자 확대 방안</li> <li>○ 2020년 신규사업 발굴 관련</li> <li>○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규제 개선 관련, 향후 회의 진행 관련</li> </ul> </li> </ul> |
| 4차   | 2019.4.11.<br>전체회의               | 서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평가</li> <li>○ 고등교육 재정현황과 개선방안</li> </ul>  |
| 5차   | 2019.4.26.<br>전체회의               | 서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차기 진단의 운영 연계</li> <li>○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li> <li>○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과위원회</li> </ul> </li> </ul>  |
| 6차   | 2019.5.10.<br>전체회의               | 서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차기 진단의 운영 연계</li> <li>○ 국가장학금 개선</li> <li>○ 대학규제개선 요청 사항</li> </ul>   |
| 7차   | 2019.5.24.<br>전체회의               | 서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소관 대학 평가 현황</li> <li>○ 기본역량진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개선 방안</li> <li>○ 모집정원 유보제 도입 제안</li> <li>○ 규제개선 건의 과제 검토</li> </ul>  |
| 8차   | 2019.6.14.<br>전체회의               | 서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정책 공동TF 운영 중간보고 공유</li> <li>○ 대학혁신방안 제안 내용</li> </ul>   |



| 회의 | 일자                                      | 장소 | 주요내용   |
|----|---|----|--|
| -  | 2019.6.27.~28.<br>대교협 하계<br>대학총장<br>세미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규제 개선방안 발표 및 논의</li> <li>- (재정) 법정한도 내에서의 등록금 인상 건의, 국가장학금2 유형 개선을 통한 대학 재정부담 완화</li> <li>- (평가)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의 지표가 30개 정도이고, 진단 지표가 15개 정도임. 이 중 진단 기준 11개 지표가 통합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부담완화를 위해 공통 지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함. 소규모대학 평가문제, 교육혁신추진과 평가지표가 상충되는 부분 발생 시 예외 조정 문제 등도 논의 필요</li> <li>- (규제) 제도개선, 학사운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건의</li> </ul> |
| -  | 2019.7.8.<br>국회세미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의 역할과 개선방안」</li> </ul>   |
| 9차 | 2019.7.12.<br>전체회의                      | 서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규제개선 안건 검토</li> <li>○ 대학혁신방안 논의</li> </ul>  |

<표 III-5> TF 운영위원회 회의 차수별 주요내용

| 회의 | 일자                  | 장소 | 주요내용  |
|----|---------------------|----|---|
| 1차 | 2019.3.20.<br>운영위원회 | 서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정책 공동TF 구성 및 운영계획 협의</li> <li>○ 공동 TF 논의 과제 선정</li> </ul>              |
| 2차 | 2019.5.27.<br>운영위원회 | 서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논의성과 정리(대학평가, 재정확충, 규제개선) 및 향후 논의과제 선정 등(미래교육혁신 등)</li> </ul> |

## IV.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논의쟁점

### 1. 고등교육재정

#### 가.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성

- 국제비교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고 고등교육재정 중 민간의 비중이 높은 구조로서, 교육·연구 개선을 위한 실질적 투자에 한계
  - (낮은 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10,109 \$PPP)는 '15년 기준 OECD 평균(15,656 \$PPP)의 64.6% 수준, 32개국 중 26위로 낮은 편
  - (민간부담이 큰 구조)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고등교육재정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나, 민간부담은 크고 정부투자는 저조한 구조

<표 IV-1>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중

|         | 정부 재원 | 민간 재원 | 합 계  |
|---------|-------|-------|------|
| OECD 평균 | 1.1%  | 0.4%  | 1.5% |
| 우리나라    | 0.9%  | 0.9%  | 1.8% |

출처: '15, OECD 교육지표 2018

- (열악한 대학 여건) 낮은 교육 투자 및 대학의 재정난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여건 조성에 한계
  - 교수 1인당 학생 수(29.2명, '16)는 OECD 평균(15명, '16)에 비해 열악, 국립대 보유 기자재 중 내구연한(10년 이상) 초과 기자재 44.4%
  -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 폐지로 수입원은 감소하나, 물가상승 등으로 인건비·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가중
    - ※ 대학의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른 대학 세출액의 지속적인 감소는 시설비·연구비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대학의 혁신 역량 저해 우려

- 대학의 등록금 수입 감소
    - 4년제 : 10.3조원('10) → 10.0조원('17), 전문대학 : 2.9조원('10) → 2.6조원('17)
  - 대학의 세출 감소 (시설비 및 연구비)
    - 시설비 : 4년제 2.1조원('10) → 1.5조원('17), 전문대학 0.7조원('10) → 0.4조원('17)
    - 연구비 : 4년제 0.5조원('10) → 0.4조원('17), 전문대학 : 0.02조원('10) → 0.01조원('17)
- ※ 사립 4년제 150교(일반 148, 산업 2), 사립 전문대 124교 기준

## 나. 고등교육재정 투자 현황

### □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현황 비교

- 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수준은 OECD평균의 64.6%에 불과
-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수준은 OECD국가 35개국 중 29위

<표 IV-2>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투자현황 국제비교

(단위 : %, \$, PPP)

| 구 분                                | OECD평균 | 한국               | 미국     | 캐나다 | 영국     | 일본     | 프랑스    |
|------------------------------------|--------|------------------|--------|-----|--------|--------|--------|
|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 1.5    | 1.8(6위)          | 2.6    | 2.4 | 1.9    | 1.4    | 1.5    |
| - 공공재원                             | 1.0    | 0.7(29위)         | 0.9    | 1.2 | 0.5    | 0.4    | 1.1    |
| - 민간재원                             | 0.5    | 1.2(5위)          | 1.7    | 1.2 | 1.3    | 0.9    | 0.3    |
| ■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공공·민간투자 상대적 비중(%)* |        |                  |        |     |        |        |        |
| 공공재원                               | 66     | 36(31위/35개국)     | 35     | 49  | 25     | 32     | 78     |
| 민간재원                               | 31     | 64(4위/개35국)      | 65     | 51  | 71     | 68     | 20     |
| ■ 학생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 15,656 | 10,109(29위/35개국) | 30,003 | -   | 26,320 | 19,289 | 16,145 |
| - 학생1인당 공공재원 투입액                   | 10,333 | 3,639            | 10,501 | -   | 6,580  | 6,172  | 12,593 |

주.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는 해외재원이 제외되어 있어서 전체가 100과 다를 수 있음.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2017, 2018)

출처: 이성은(2018), 고등교육재정 및 대학재정 현황, 대교협 내부자료

-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정부투자 수준은 OECD 평균의 35.2% 수준에 불과
- 재원별 상대적 비중을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의존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재원의 투자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남
- ※ 공공재원의 비중 : OECD 평균의 35.2%
- ※ 민간재원의 비중 : OECD 평균의 133.3%

<표 IV-3>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규모 현황

(단위: %, PPP환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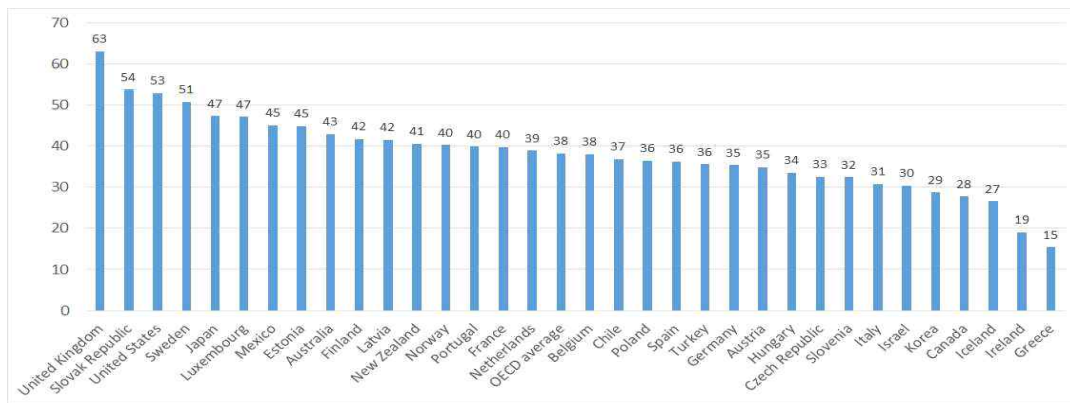
| 구분       | 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중 |       |       | 학생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              |                    |               |      |              |       |
|----------|-----------------|-------|-------|-----------------|--------------|--------------------|---------------|------|--------------|-------|
|          | 계               | 정부 부담 | 민간 부담 | 총액              |              | 재원별 금액(재원별 상대적 비중) |               |      |              |       |
|          |                 |       |       | 금액              | OECD평균 대비비율* | 공공재원               | OECD평균 대비비율*  | 민간재원 | OECD평균 대비비율* |       |
| 2011(14) | OECD평균          | 1.6   | 1.1   | 0.5             | 13,958       | 71.1               | 9,659 (69.2)  | 27.7 | 4,299 (30.8) | 168.6 |
|          | 한국              | 2.6   | 0.7   | 1.9             | 9,927        |                    | 2,680 (27.0)  |      | 7,247 (73.0) |       |
| 2012(15) | OECD평균          | 1.5   | 1.2   | 0.4             | 15,028       | 65.7               | 10,475 (69.7) | 27.6 | 4,553 (30.3) | 177.4 |
|          | 한국              | 2.3   | 0.8   | 1.5             | 9,866        |                    | 2,891 (29.3)  |      | 6,975 (70.7) |       |
| 2013(16) | OECD평균          | 1.6   | 1.1   | 0.5             | 15,772       | 59.1               | 11,119 (70.5) | 27.2 | 4,653 (29.5) | 135.3 |
|          | 한국              | 2.3   | 0.9   | 1.3             | 9,323        |                    | 3,030 (32.5)  |      | 6,293 (67.5) |       |
| 2014(17) | OECD평균          | 1.6   | 1.1   | 0.5             | 16,143       | 59.3               | 11,300 (70.0) | 28.8 | 4,843 (30.0) | 130.4 |
|          | 한국              | 2.3   | 1.0   | 1.2             | 9,570        |                    | 3,254 (34.0)  |      | 6,316 (66.0) |       |
| 2015(18) | OECD평균          | 1.5   | 1.0   | 0.5             | 15,656       | 64.6               | 10,333 (66.0) | 35.2 | 4,853 (31.0) | 133.3 |
|          | 한국              | 1.8   | 0.7   | 1.2             | 10,109       |                    | 3,639 (36.0)  |      | 6,470 (64.0) |       |

주 1) \*은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비율. 2) 연도는 자료 기준연도(OECD 발간연도)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2014, 2015, 2016, 2017, 2018)

출처: 이성은(2018), 고등교육재정 및 대학재정 현황, 대교협 내부자료

- 국가경제력 규모에 비해 고등교육재정의 투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 그침
  - OECD 국가들은 국민 1인당 GDP의 약 40% 수준에서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를 지출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30% 미만(29%)으로 크게 곤두박질하였으며, 이는 34개국 중 30위에 해당되는 수치임(김영철, 2019)



[그림 IV-1] 국민 1인당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중(2015 기준, 단위:%)

\*자료: OECD(2018), Education at a Glance.

\*출처: 김영철(2019), 대학재정 관점에서 본 학자금 제도, 한국장학재단 창립10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OECD 국가들의 1인당 지출 규모(달러, PPP)가 2000년 9,571달러에서 2014년 16,143달러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한 반면,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 6,118달러에서 2014년 9,570달러로 14년간 단 3천여 달러 증가하는데 그침(김영철 외,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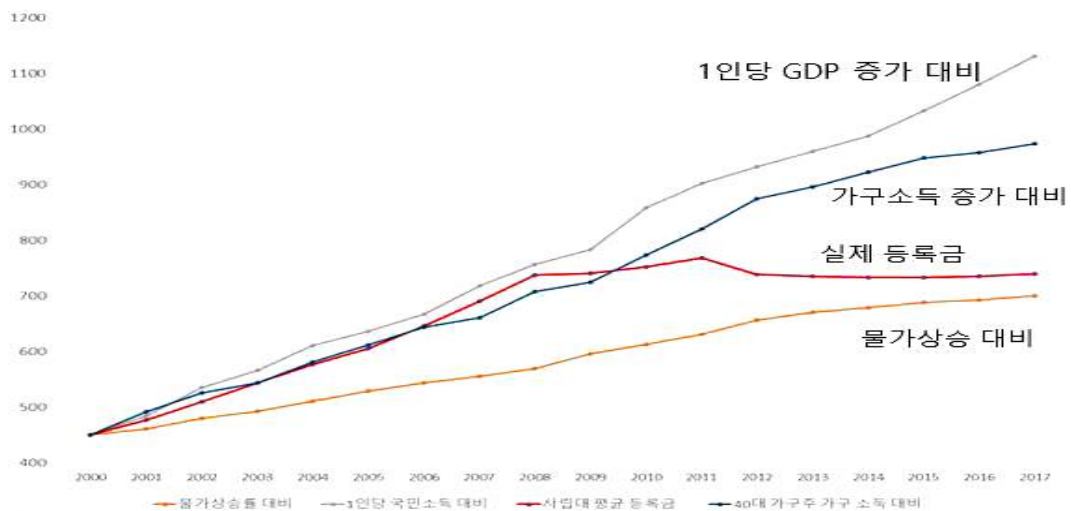
[그림 IV-2]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비율

\*자료: Education at a Glance, OECD 각연도

\*출처: 김영철 외(2018). 고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국가교육회의

- 국가경제력에 대비하여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에 상응하는 적정등록금과 국민 부담 능력인 가구소득 증가에 상응하는 적정등록금을 추정하여 실제 등록금 추이와 비교하면 해를 더할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김영철 외, 2018)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명목)은 통계청 추산 2,937만 7천원이고, 이를 활용해 2014년의 (경제력 대비) 적정 등록금을 추산하면 약 987만 8천이며, 1인당 국민소득(명목)이 3,363만원 6천원인 2017년의 (경제력 대비) 적정등록금을 추산해 보면 1,131만 1천원으로 나타남(김영철 외, 2018)



[그림 IV-3] 국가경제성장 대비 사립대학교 적정 등록금 추정

\*자료: 통계청 지표 및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출처: 김영철 외(2018). 고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국가교육회의

- 고등교육의 재정이 국가의 경제력 수준에 걸맞게 확충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 상태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 대학 등록금만 동결된다면 고등교육의 재정 위기는 보다 가속화될 것임

□ 고등교육예산 규모 증가 현황

-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고등교육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음
  - 2019년 고등교육예산은 교육예산의 14.2%(106,256억원/750,398억원)이나 개별 대 학생의 복지지원비인 국가장학금 예산을 제외한 실질고등교육예산은 교육예산의 8.5% (63,878억원/750,398억원)에 불과

<표 IV-4> 교육부 소관 실질고등교육예산 규모 현황

(단위: 조원)

(단위: 억원, %)

| 회계<br>연도  | GDP     | 정부<br>예산 | 교육<br>예산 | 고등교육    |         |         |          |        |           |        |           | 고등교육예산 비율<br>(실질고등교육예산 비율) |            |  |
|-----------|---------|----------|----------|---------|---------|---------|----------|--------|-----------|--------|-----------|----------------------------|------------|--|
|           |         |          |          | (D)     | 국가장학금   |         | 실질고등교육예산 |        |           |        | GDP<br>대비 | 정부예산<br>대비                 | 교육예산<br>대비 |  |
|           |         |          |          |         | (E)     | FD*100  | F=D-E    | FD*100 | 국립대학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G)       | GF*100 |           |                            |            |  |
| (A)       | (B)     | (C)      | (D)      | (E)     | FD*100  | F=D-E   | FD*100   | (G)    | GF*100    |        |           |                            |            |  |
| 2007      | 1,043.3 | 201.0    | 312,158  | 34,075  | 2,197   | (6.4)   | 31,878   | (93.6) | 19,774    | (62.0) | 0.3(0.3)  | 1.7(1.6)                   | 10.9(10.2) |  |
| 2008      | 1,104.5 | 220.0    | 360,435  | 45,487  | 4,982   | (11.0)  | 40,506   | (89.0) | 21,150    | (52.2) | 0.4(0.4)  | 2.1(1.8)                   | 12.6(11.2) |  |
| 2009      | 1,151.7 | 248.0    | 390,850  | 47,099  | 8,186   | (17.4)  | 38,913   | (82.6) | 22,655    | (58.2) | 0.4(0.3)  | 1.9(1.6)                   | 12.1(10.0) |  |
| 2010      | 1,265.3 | 255.3    | 381,158  | 50,809  | 10,627  | (20.9)  | 40,182   | (79.1) | 23,090    | (57.5) | 0.4(0.3)  | 2.0(1.6)                   | 13.3(10.5) |  |
| 2011      | 1,332.7 | 264.1    | 417,123  | 50,908  | 8,376   | (16.5)  | 42,532   | (83.5) | 23,504    | (55.3) | 0.4(0.3)  | 1.9(1.6)                   | 12.2(10.2) |  |
| 2012      | 1,377.5 | 282.7    | 453,273  | 58,833  | 17,935  | (30.5)  | 40,897   | (69.5) | 21,715    | (53.1) | 0.4(0.3)  | 2.1(1.4)                   | 13.0(9.0)  |  |
| 2013      | 1,429.4 | 298.4    | 494,675  | 73,060  | 27,710  | (37.9)  | 45,350   | (62.1) | 23,506    | (51.8) | 0.5(0.3)  | 2.4(1.5)                   | 14.8(9.2)  |  |
| 2014      | 1,486.1 | 309.7    | 509,676  | 85,350  | 37,858  | (44.4)  | 47,492   | (55.6) | 23,429    | (49.3) | 0.6(0.3)  | 2.8(1.5)                   | 16.7(9.3)  |  |
| 2015      | 1,564.1 | 322.8    | 513,085  | 109,628 | 41,810  | (38.1)  | 67,819   | (61.9) | 38,756    | (57.1) | 0.7(0.4)  | 3.4(2.1)                   | 21.4(13.2) |  |
| 2016      | 1,641.8 | 330.7    | 519,220  | 96,721  | 41,490  | (42.9)  | 55,232   | (57.1) | 22,331    | (40.4) | 0.6(0.3)  | 2.9(1.7)                   | 18.6(10.6) |  |
| 2017      | 1,730.4 | 339.7    | 569,107  | 98,728  | 41,966  | (42.5)  | 56,761   | (57.5) | 23,326    | (41.1) | 0.6(0.3)  | 2.9(1.7)                   | 17.3(10.0) |  |
| 2018      | 1,814.4 | 301.4    | 683,737  | 100,365 | 41,984  | (41.8)  | 58,381   | (58.2) | 24,533    | (42.0) | 0.6(0.3)  | 3.3(1.9)                   | 14.7(8.5)  |  |
| 2019      | 1,900.6 | 332.6    | 750,398  | 106,256 | 42,378  | (39.9)  | 63,878   | (60.1) | 31,907    | (50.0) | 0.6(0.3)  | 3.2(1.9)                   | 14.2(8.5)  |  |
| 2011년 대비  | 예산      | (179.9)  | (208.7)  | (505.9) | (150.2) | (135.8) | -        | -      | -         | -      | -         | -                          | -          |  |
| 2019년 증감률 | 비중      | -        | -        | 23.4%p  | △23.4%p | △5.3%p  | 0.2%p    | 1.3%p  | 2.0%p     |        |           |                            |            |  |

주 1) 2018, 2019년 GDP는 '국회예산정책처(2017).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의 잠재경제성장률에 따른 추정치임

2) 정부예산과 교육예산, 고등교육예산,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반 조성비, 국립대학 운영지원비는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예산안(총괄)에서 추출함

3) 교육예산과 고등교육예산은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금액임

4) 2015년도 고등교육예산과 실질고등교육예산은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1조3천억원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7).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연도별 예산안(총괄),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출처: 이성은(2018), 고등교육재정 및 대학재정 현황, 대교협 내부자료

- 학자금 지원사업(국가장학금)으로 인한 일반지원사업 규모 축소
  - 교육부의 고등교육예산 일반지원사업비 비중 감소('11년 59.1%→'17년 23.8%)
  - 일반사업비의 명목금액 감소('11년 3조 270억원→'17년 2조 2,050억원)

<표 IV-5> 연도별 재정지원사업 유형별 고등교육재정 규모 변화

(단위: 억원, %)

| 회계<br>연도 | 총액     |        | 총 사업비  |        |         |        | 교육부    |        |         |        | 타 부처   |        |         |       |
|----------|--------|--------|--------|--------|---------|--------|--------|--------|---------|--------|--------|--------|---------|-------|
|          |        |        | 일반지원사업 |        | 학자금지원사업 |        | 일반지원사업 |        | 학자금지원사업 |        | 일반지원사업 |        | 학자금지원사업 |       |
| 2011     | 51,259 | (1000) | 43,808 | (85.5) | 7,451   | (14.5) | 30,270 | (59.1) | 6,928   | (13.5) | 13,537 | (26.4) | 523     | (1.0) |
| 2012     | 64,068 | (1000) | 43,183 | (67.4) | 20,885  | (32.6) | 16,187 | (25.3) | 19,740  | (30.8) | 26,997 | (42.1) | 1,145   | (1.8) |
| 2013     | 70,052 | (1000) | 40,331 | (57.6) | 29,721  | (42.4) | 17,813 | (25.4) | 28,590  | (40.8) | 22,517 | (32.1) | 1,131   | (1.6) |
| 2014     | 79,835 | (1000) | 43,263 | (54.2) | 36,573  | (45.8) | 19,855 | (24.9) | 35,497  | (44.5) | 23,408 | (29.3) | 1,076   | (1.3) |
| 2015     | 95,525 | (1000) | 55,302 | (57.9) | 40,223  | (42.1) | 22,584 | (23.6) | 38,052  | (39.8) | 32,718 | (34.3) | 2,171   | (2.3) |
| 2016     | 94,892 | (1000) | 54,980 | (57.9) | 39,912  | (42.1) | 22,585 | (23.8) | 38,778  | (40.9) | 32,395 | (34.1) | 1,134   | (1.2) |
| 2017     | 92,780 | (1000) | 53,413 | (57.6) | 39,368  | (42.4) | 22,050 | (23.8) | 38,753  | (41.8) | 31,363 | (33.8) | 615     | (0.7) |

주 1) 2016회계연도까지는 고등교육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자료 추출(2016.12.29.과 2017.12.07. 시점 추출),

2) 2017회계연도는 대학재정알리미에서 자료 추출(2019.03.21. 시점 추출)

3) 국립대학 경상운영 지원사업비는 제외하였음

출처: 이성은(2018), 고등교육재정 및 대학재정 현황, 대교협 내부자료

- 타부처의 고등교육예산 중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원기관 편중
  - 교육부의 일반지원사업비 중 대학(기관) 지원 예산의 61.4%가 인력양성 목적으로 투자되는 반면, 타부처는 16.2%만이 인력양성 목적으로 투자됨
  - 타부처의 대학(기관) 지원 예산은 대부분은 R&D(연구개발) 사업비와 HRD 및 R&D(공통) 사업비이며, HRD 및 R&D(공통) 사업비의 98.6%는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의 연구운영비로 지원됨

<표 IV-6> 정부(중앙부처)의 사업목적별 일반지원사업비 규모(2016회계연도 기준)

(단위: 억원, %)

| 구분      | 사업목적      |         |           |         |               |         |       |        | 합계     |          | 총액<br>대비<br>비율 |
|---------|-----------|---------|-----------|---------|---------------|---------|-------|--------|--------|----------|----------------|
|         | HRD(인력양성) |         | R&D(연구개발) |         | HRD 및 R&D(공통) |         | 기타    |        |        |          |                |
|         | 금액        | (%)     | 금액        | (%)     | 금액            | (%)     | 금액    | (%)    | 금액     | (%)      |                |
| 합계      | 11,833    | (21.52) | 30,471    | (55.42) | 11,627        | (21.15) | 1,049 | (1.91) | 54,981 | (100.00) | (100.00)       |
| 대학      | 8,304     | (38.91) | 4,289     | (20.10) | 8,004         | (37.51) | 741   | (3.47) | 21,338 | (100.00) | (38.81)        |
| 교육부     | 6,587     | (61.37) | 87        | (0.81)  | 3,400         | (31.68) | 659   | (6.14) | 10,734 | (100.00) | (19.52)        |
| 타부처(14) | 1,717     | (16.19) | 4,202     | (39.62) | 4,604         | (43.41) | 82    | (0.78) | 10,605 | (100.00) | (19.29)        |
| 집단      | 3,269     | (16.40) | 13,030    | (65.39) | 3,322         | (16.67) | 307   | (1.54) | 19,927 | (100.00) | (36.24)        |
| 교육부     | 2,252     | (31.00) | 4,347     | (59.85) | 647           | (8.90)  | 17    | (0.24) | 7,263  | (100.00) | (13.21)        |
| 타부처(24) | 1,017     | (8.03)  | 8,682     | (68.56) | 2,675         | (21.12) | 289   | (2.29) | 12,664 | (100.00) | (23.03)        |
| 개인      | 261       | (1.91)  | 13,153    | (95.89) | 301           | (2.19)  | 1     | (0.01) | 13,716 | (100.00) | (24.95)        |
| 교육부     | 59        | (1.29)  | 4,273     | (93.12) | 256           | (5.59)  | 0     | (0.00) | 4,588  | (100.00) | (8.35)         |
| 타부처(13) | 202       | (2.21)  | 8,880     | (97.29) | 45            | (0.49)  | 1     | (0.01) | 9,127  | (100.00) | (16.60)        |

주. 1) 공시대학 기준(전문대학 포함, 대학원대학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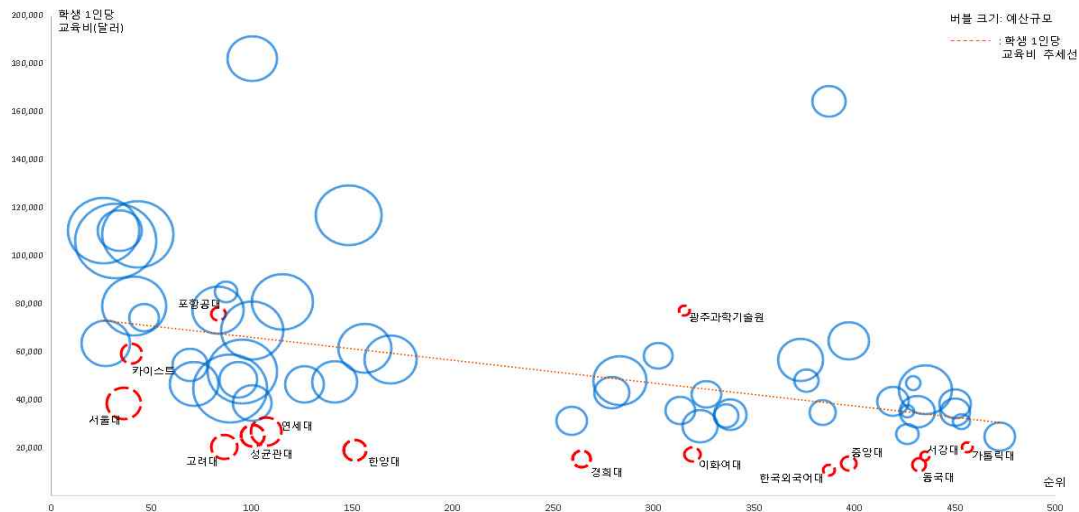
2) 대학에 실 지원된 일반지원사업비 금액기준임(지자체지원사업과 국·공립대학경상비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학자금지원사업 제외)

3) 2017회계연도의 경우 '대학재정알리미' 사이트 개편 후 지원대상별 지원액 구분이 불가능함

자료: 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http://hiedsupport.kedi.re.kr/>)에서 2018.03.19.에 추출함

#### □ QS 세계대학순위 500위권내 미국과 국내 대학의 예산 및 학생1인당 교육비 비교

- 추세선(점선)위에 위치한 포항공대와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비슷한 순위의 대학들 평균보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지만 예산규모를 나타내는 버블의 크기를 보면 비슷한 순위의 대학들보다 매우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반대로 서울대의 경우 예산 규모에 비해 비슷한 순위의 대학들 평균보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IV-4] QS 세계대학순위 500위권내 미국과 국내 대학의 예산 및 학생1인당 교육비 비교(2017)

\*자료: QS TOP UNIVERSITIES(2019), IPEDs(n.d), 대학알리미(2019) 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

\*출처: 김병주 외(2019).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등록금 인하·동결 현황

- '11년 대비 '18년 명목등록금(경상가) 수준은 국·공립대학은 5.0% 인하, 사립대학은 2.9% 인하
- 소비자물가상승률(2015=100) 반영 '11년 대비 '18년 실질등록금(불변가) 수준
  - 국·공립대학은 16.4% 인하, 사립대학은 11.8% 인하
  - '18년 평균등록금 수준은 국·공립대학은 2005년, 사립대학은 2001년보다 낮은 수준임

<표 IV-7> 설립유형별 연도별 평균 대학등록금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증감률     |         |
|-------|------|-------|-------|-------|-------|-------|-------|-------|-------|-------|-------|---------|---------|
|       |      |       |       |       |       |       |       |       |       |       |       | '08년 대비 | '11년 대비 |
| 물가인상률 | 4.7  | 2.8   | 2.9   | 4.0   | 2.2   | 1.3   | 1.3   | 0.7   | 1.0   | 1.9   | 1.9   |         |         |
| 국립    | 경상가  | 4,099 | 4,151 | 4,247 | 4,291 | 4,040 | 4,026 | 4,010 | 4,031 | 4,037 | 4,042 | 4,076   |         |
|       | 인상률  | 8.8   | 2.4   | 1.5   | -0.1  | -5.5  | -0.2  | -0.7  | -0.2  | -1.6  | 0.1   | 0.8     | -0.6    |
|       | 불변가  | 4,893 | 4,876 | 4,808 | 4,618 | 4,270 | 4,206 | 4,124 | 4,086 | 3,999 | 3,927 | 3,860   | -21.1   |
|       | 인상률  | 3.9   | -0.3  | -1.4  | -3.9  | -7.5  | -1.5  | -1.9  | -0.9  | -3.0  | -1.8  | -1.7    | -16.4   |
| 사립    | 경상가  | 7,140 | 7,206 | 7,289 | 7,399 | 7,100 | 7,076 | 7,086 | 7,107 | 7,127 | 7,143 | 7,184   |         |
|       | 인상률  | 6.2   | 1.0   | 1.5   | 1.6   | -3.8  | -0.3  | 0.0   | 0.1   | 0.2   | 0.2   | 0.6     | -2.9    |
|       | 불변가  | 8,151 | 8,014 | 7,900 | 7,714 | 7,264 | 7,150 | 7,060 | 7,017 | 7,059 | 6,939 | 6,803   | -16.5   |
|       | 인상률  | 1.5   | -1.7  | -1.4  | -2.4  | -5.8  | -1.6  | -1.3  | -0.6  | -1.3  | -1.7  | -2.0    | -11.8   |

주 1) 대상: 국·공·사립 4년제 일반대학교(교육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제외됨),  
 2) 특수대학교와 특별법법인 제외, 광주가톨릭대학은 전체학생 전액장학으로 제외  
 3) 사립대학의 2015년~2018년 평균등록금은 학과별 입학정원 변동에 따라 인상된 자연인상으로 볼 수 있음  
 4) 인상률은 평균 등록금의 전년대비 인상률이며, 불변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였을 때 인상률임  
 자료: 대학정보공시  
 출처: 이성은(2018), 고등교육재정 및 대학재정 현황, 대교협 내부자료

□ 사립대학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규모 감소

- 사립대학의 '11년 대비 '17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명목금액과 불변금액 모두 감소
  - 명목금액 : 5.1% (5,601억원) 감소
  - 불변금액 : 12.6% (1조 4,765억원) 감소
- ※ 대학의 등록금 수입 감소 사례(학부등록금 결산자료)
  - \* 고려대: ('11년 2,779억 → '17년 2,217억 : 562억 감소)
  - \* 원광대: ('11년 1,277억 → '17년 1,073억 : 204억 감소)
  - \* 영남대: ('11년 1,693억 → '17년 1,525억 : 168억 감소)

<표 IV-8> 사립대학교 교비회계 세입결산 현황(자금계산서)

(단위: 억원, %)

| 구분                        | 연도   | 수입합계    |         |                   |        |              |               |                     |                |              |                 |                |
|---------------------------|------|---------|---------|-------------------|--------|--------------|---------------|---------------------|----------------|--------------|-----------------|----------------|
|                           |      | 운영수입 합계 |         |                   |        |              |               |                     |                |              | 자산및<br>부채<br>수입 | 전기<br>이월<br>자금 |
|                           |      |         |         | 등록금및<br>수강료<br>수입 | 전입금    | 기부금          | 국고<br>보조금     | 산학협력<br>단및학교<br>기탁금 | 교육<br>부대<br>수입 | 교육외<br>수입    |                 |                |
| 명목<br>금액                  | 2011 | 177,214 | 149,559 | 110,681           | 12,247 | 4,038        | 7,108         | 2,059               | 6,861          | 6,565        | 15,735          | 11,920         |
|                           | 2012 | 181,443 | 156,615 | 108,223           | 14,115 | 3,817        | 14,603        | 2,124               | 7,903          | 5,830        | 11,904          | 12,924         |
|                           | 2013 | 182,402 | 158,793 | 107,718           | 13,356 | 3,726        | 19,141        | 2,005               | 8,428          | 4,420        | 11,763          | 11,846         |
|                           | 2014 | 190,522 | 164,678 | 108,815           | 13,099 | 3,979        | 23,165        | 2,385               | 8,889          | 4,346        | 16,880          | 8,964          |
|                           | 2015 | 188,728 | 166,412 | 108,097           | 14,790 | 3,800        | 25,357        | 1,989               | 9,102          | 3,276        | 14,759          | 7,557          |
|                           | 2016 | 188,757 | 168,743 | 107,232           | 14,594 | 4,161        | 28,435        | 1,971               | 9,417          | 2,932        | 13,236          | 6,778          |
|                           | 2017 | 187,338 | 166,755 | 105,080           | 14,647 | <b>4,303</b> | 28,701        | <b>1,801</b>        | <b>9,423</b>   | <b>2,801</b> | 13,488          | 7,094          |
| 불변<br>금액                  | 2011 | 187,098 | 157,900 | 116,854           | 12,930 | 4,263        | 7,505         | 2,173               | 7,244          | 6,931        | 16,613          | 12,585         |
|                           | 2012 | 187,462 | 161,811 | 111,813           | 14,583 | 3,944        | 15,088        | 2,195               | 8,165          | 6,023        | 12,299          | 13,353         |
|                           | 2013 | 186,033 | 161,955 | 109,862           | 13,621 | 3,801        | 19,522        | 2,045               | 8,596          | 4,508        | 11,997          | 12,081         |
|                           | 2014 | 191,869 | 165,842 | 109,584           | 13,192 | 4,007        | 23,329        | 2,401               | 8,951          | 4,377        | 16,999          | 9,027          |
|                           | 2015 | 188,728 | 166,412 | 108,097           | 14,790 | 3,800        | 25,357        | 1,989               | 9,102          | 3,276        | 14,759          | 7,557          |
|                           | 2016 | 186,944 | 167,122 | 106,202           | 14,454 | 4,121        | 28,162        | 1,952               | 9,327          | 2,904        | 13,109          | 6,713          |
|                           | 2017 | 182,005 | 162,008 | <b>102,089</b>    | 14,230 | 4,180        | <b>27,884</b> | 1,749               | 9,155          | 2,721        | 13,104          | 6,893          |
| '11년<br>대비<br>'17년<br>증감률 | 명목   | 10,124  | 17,197  | <b>△5,601</b>     | 2,400  | 265          | 21,593        | △258                | 2,562          | △3,764       | △2,247          | △4,826         |
|                           |      | (5.7)   | (11.5)  | <b>△(5.1)</b>     | (19.6) | (6.6)        | (303.8)       | △(12.5)             | (37.3)         | △(57.3)      | △(14.3)         | △(40.5)        |
|                           | 불변   | △5,093  | 4,108   | <b>△14,765</b>    | 1,300  | △83          | 20,379        | △424                | 1,911          | △4,210       | △3,509          | △5,692         |
|                           |      | △(2.7)  | (2.6)   | <b>△(12.6)</b>    | (10.1) | △(1.9)       | (271.6)       | △(19.5)             | (26.4)         | △(60.7)      | △(21.1)         | △(45.2)        |

주. △은 (-)감소를 의미함

자료: 대학정보공시 4년제 일반대학교 기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출처: 이성은(2018), 고등교육재정 및 대학재정 현황, 대교협 내부자료

- 사립대학의 1교당 평균 학부등록금 수입 감소 규모는 '11년 대비 '17년에 명목금액 (경상가)으로 평균 19억 2,200만원 감소
- 소비자물가상승률(2015=100) 반영 '11년 대비 '17년 실질등록금(불변가)으로 평균 66억 1,400만원 감소

<표 IV-9> 연도별 사립대학 학부등록금 수입 결손액 추정

(단위:백만원,%)

| 구분                | 2011(A)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B) | 증감률(A-B) |         |
|-------------------|---------|--------|--------|--------|--------|--------|---------|----------|---------|
|                   |         |        |        |        |        |        |         | 금액       | 비율      |
| 학교 수              | 156     | 154    | 156    | 156    | 154    | 154    | 150     |          |         |
|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 94.7    | 96.8   | 98     | 99.3   | 100    | 101    | 102.9   |          |         |
| 경상가               | 56,333  | 55,124 | 54,424 | 54,972 | 54,797 | 54,131 | 54,410  | △1,922   | △(3.4)  |
| 1교당 평균 인상률        |         | △(2.1) | △(1.3) | (1.0)  | △(0.3) | △(1.2) | (0.5)   |          |         |
| 학부등록금 수입          | 59,475  | 56,953 | 55,508 | 55,361 | 54,797 | 53,611 | 52,861  | △6,614   | △(11.1) |
| 불변가 인상률           |         | △(4.2) | △(2.5) | △(0.3) | △(1.0) | △(2.2) | △(1.4)  |          |         |

주 1) △은 (-)감소를 의미함

2) 인상률은 전년대비 인상률이며, 불변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였을 때 인상률임

자료: 사립대학 회계정보시스템

출처: 이성은(2018), 고등교육재정 및 대학재정 현황, 대교협 내부자료

□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총액 규모 감소

- 국고보조금에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교비회계 수입총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 '17회계연도 기준 국고보조금은 5.0%로 8,293억원에 불과

<표 IV-10> 사립대학교의 실질국고보조금 규모

(단위: 억원, %)

| 연도   | 교비회계 수입총액 |        |           |        |           |           | 교비회계<br>실질수입총액 | 실질국고보조금 |       |
|------|-----------|--------|-----------|--------|-----------|-----------|----------------|---------|-------|
|      | 국고보조금수입   |        |           |        |           |           |                |         |       |
|      | 국가장학금     |        |           |        |           |           |                |         |       |
|      | (A)       | (B)    | (B/A*100) | (C)    | (C/A*100) | (C/B*100) |                |         |       |
| 2014 | 190,522   | 23,165 | (12.2)    | 17,971 | (9.4)     | (77.6)    | 172,551        | 5,194   | (3.0) |
| 2015 | 188,728   | 25,357 | (13.4)    | 19,742 | (10.5)    | (77.9)    | 168,986        | 5,616   | (3.3) |
| 2016 | 188,757   | 28,435 | (15.1)    | 20,508 | (10.9)    | (72.1)    | 168,249        | 7,927   | (4.7) |
| 2017 | 187,338   | 28,701 | (15.3)    | 20,408 | (10.9)    | (71.1)    | 166,930        | 8,293   | (5.0) |

주. 국가장학금의 지원경로는 대학을 경유하여 학생들에게 배분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수입에 포함됨

자료: 대학정보공시 4년제 일반대학교 기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사립대학 재정정보시스템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출처: 이성은(2018), 고등교육재정 및 대학재정 현황, 대교협 내부자료

□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감소 규모

- 입학금 폐지에 따른 대학재정 감소규모는 국.공립대학은 118억원 감소, 사립대학은 2,109억원 감소
  - 4년제 대학의 경우 많게는 50억원, 평균 약 13억원의 수입이 감소

<표 IV-11> 2017년도 기준 대학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감소 규모

(단위: 천원)

| 구분   |      | 학생 1인당 입학금 |    |       |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감소금액 |           |         |           |
|------|------|------------|----|-------|--------------------|-----------|---------|-----------|
|      |      | 평균         | 최소 | 최대    | 개별 대학 수준           |           | 총계(억원)  | 전체 총액(억원) |
|      |      |            |    |       | 평균                 | 최대        |         |           |
| 대학   | 국·공립 | 141        | 0  | 250   | 269,838            | 840,010   | 117.7   | 3,506.7   |
|      | 사립   | 722        | 0  | 1,024 | 1,329,067          | 5,061,700 | 2,109.2 |           |
|      | 전체   | 605        | -  | -     | 1,112,785          | -         | 2,226.9 |           |
| 전문대학 | 전체   | 613        | -  | -     | 947,987            | -         | 1,279.8 |           |

주 1) 특별법법인, 사이버대학, 각종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폴리텍대학) 제외

2) 입학금 총액 = Σ(대학의 당해연도 입학자 수×입학금)

자료: 대학정보공시

출처: 이성은(2018), 고등교육재정 및 대학재정 현황, 대교협 내부자료

#### □ 교육여건 재정투자 규모 위축

- 대학재정의 수입 감소, 지출 증가로 기계기구매입비, 연구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교육비의 지출을 위축, 교육의 질적 저하 초래
- 사립대학의 '11년 대비 '17년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규모는 8.5%(1,495억원) 감소

<표 IV-12> 교육여건 관련 재정 투자규모의 증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2011(A)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B) | 증감(B-A) |         |
|--------------|---------|---------|---------|---------|---------|---------|---------|---------|---------|
|              |         |         |         |         |         |         |         | 금액      | 비율      |
|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 110,285 | 107,828 | 107,718 | 108,815 | 107,734 | 107,232 | 104,975 | △5,310  | △(4.8)  |
| 교육<br>지출     | 학생지원비   | 3,133   | 3,450   | 3,456   | 3,433   | 3,473   | 3,649   | 515     | (16.4)  |
|              | 기타학생경비  | 1,871   | 1,965   | 1,828   | 1,740   | 1,787   | 1,888   | 64      | (3.4)   |
|              | 연구비     | 5,397   | 5,346   | 5,145   | 4,863   | 4,664   | 4,470   | △927    | △(17.2) |
|              | 실험실습비   | 2,145   | 2,076   | 2,088   | 2,048   | 1,953   | 1,937   | △209    | △(9.7)  |
|              | 기계기구매입비 | 3,622   | 3,219   | 2,829   | 2,796   | 2,571   | 2,978   | △711    | △(19.6) |
|              | 도서구입비   | 1,511   | 1,480   | 1,480   | 1,411   | 1,402   | 1,283   | △227    | △(15.1) |
|              | 소계      | 17,680  | 17,537  | 16,826  | 16,292  | 15,850  | 16,185  | △1,495  | △(8.5)  |

주. 1) 학생지원비: 교내신문발행, 교내방송, 대학지 발간, 학생서클보조 및 학생행사보조 등 비용

2) 연구비: 연구비와 연구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임

3) △은 (-)감소를 의미함

자료: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출처: 이성은(2018), 고등교육재정 및 대학재정 현황, 대교협 내부자료

□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인하에 따라 사립대학 적립금의 당기인출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당기적립액은 감소하는 경향
- 적립금의 인출(사용) 대비 적립금액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을 기점으로 2015년부터 인출액이 적립액을 초과
- 누적 적립금 총액도 2015년부터는 증가율이 (-)로 나타남

<표 IV-13> 사립대학교 연도별 사용 대비 적립 현황

(단위: 억원, %)

| 회계연도 | 적립금 사용(A) |        | 적립금 적립(B) |        | 사용 대비 적립 |           |
|------|-----------|--------|-----------|--------|----------|-----------|
|      | 인출액       | 증감률    | 적립액       | 증감률    | (B-A)    | (B/A*100) |
| 2010 | 7,384     | 623    | 13,273    | -818   | 5,889    | (179.7)   |
| 2011 | 12,508    | 5,124  | 15,377    | 2,104  | 2,868    | (122.9)   |
| 2012 | 9,493     | △3,016 | 10,213    | △5,164 | 720      | (107.6)   |
| 2013 | 8,775     | △718   | 9,989     | △224   | 1,214    | (113.8)   |
| 2014 | 11,296    | 2,521  | 11,347    | 1,359  | 52       | (100.5)   |
| 2015 | 11,542    | 247    | 10,674    | △673   | △868     | (92.5)    |
| 2016 | 10,286    | △1,256 | 9,684     | △990   | △602     | (94.1)    |
| 2017 | 10,360    | 74     | 10,144    | 460    | △216     | (97.9)    |

주 1) 대학원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또는 원격대학), 각종학교는 제외

2) △은 (-)감소를 의미함

자료: 대학정보공시

출처: 이성은(2018), 고등교육재정 및 대학재정 현황, 대교협 내부자료

□ 인건비 대비 등록금 비율 대학 현황

-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인하에 따라 사립대학의 인건비 대비 등록금 비율이 100% 이상인 대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표 IV-14> 연도별 인건비 대비 등록금 비율 대학 현황

| 구분   | 200% 이상 | 200% ~ 100% | 100% ~ 90% | 90% ~ 80% |
|------|---------|-------------|------------|-----------|
| 2010 | 4개교     | 7개교         | 4개교        | 3개교       |
| 2011 | 4개교     | 8개교         | 3개교        | 2개교       |
| 2012 | 4개교     | 10개교        | 1개교        | 3개교       |
| 2013 | 4개교     | 9개교         | 1개교        | 6개교       |
| 2014 | 4개교     | 12개교        | 1개교        | 7개교       |
| 2015 | 5개교     | 10개교        | 3개교        | 7개교       |
| 2016 | 5개교     | 9개교         | 5개교        | 7개교       |
| 2017 | 6개교     | 11개교        | 3개교        | 11개교      |

출처: 김병주 외(2019).

□ 교내 장학금 규모의 증가

- 국가장학금제도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감면률)이 큰 폭으로 증가
  - 국.공립대학은 27.2%('11년) → 65.8%('17년)로 증가
  - 사립대학은 21.6%('11년) → 52.9%('17년)로 증가

<표 IV-15> 연도별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단위: 천원, %)

| 구분        | 회계연도    |        |        |        |        |        |        |        |        |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전체 평균 장학금 | 973     | 1,163  | 1,393  | 1,398  | 1,523  | 2,211  | 2,676  | 3,066  | 3,305  | 3,464  | 3,588  |
| 국.공립      | 장학금(A)  | 701    | 862    | 1,081  | 1,114  | 1,168  | 1,833  | 2,193  | 2,545  | 2,576  | 2,659  |
|           | 등록금(B)  | 3,744  | 4,099  | 4,151  | 4,247  | 4,291  | 4,040  | 4,026  | 4,010  | 4,031  | 4,037  |
|           | A/B*100 | (18.7) | (21.0) | (26.0) | (26.2) | (27.2) | (45.4) | (54.5) | (63.5) | (63.9) | (65.8) |
| 사립        | 장학금(A)  | 1,025  | 1,223  | 1,452  | 1,454  | 1,595  | 2,290  | 2,775  | 3,173  | 3,456  | 3,775  |
|           | 등록금(B)  | 6,719  | 7,140  | 7,206  | 7,289  | 7,399  | 7,100  | 7,076  | 7,086  | 7,107  | 7,143  |
|           | A/B*100 | (15.3) | (17.1) | (20.2) | (19.9) | (21.6) | (32.3) | (39.2) | (44.8) | (48.6) | (52.9) |

주 1) 재학생 1인당 장학금 = (교내장학금합+교외장학금합)/재학생 수

2) 교육대학교, 대학원대학교, 기술대학, 사이버대학(또는 원격대학), 각종학교,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인 제외

자료: 대학정보공시 등록금 현황 및 장학금 수혜 현황

출처: 이성은(2018), 고등교육재정 및 대학재정 현황, 대교협 내부자료

□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에 따른 대학의 재정 부담 가중

-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에 따른 등록금 동결·인하와 교내 장학금 규모 지속적인 확대는 이중으로 대학의 재정 부담을 가중
  - 교내장학금 규모는 '11년 대비 '17년에 25.5%(3,243억원) 증가
  - '17회계연도 기준 학부등록금 수입의 19.5%를 학부 교내장학금으로 배정
- '18학년도부터 대학의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 조건으로서 대학 지원 산식을 개편하였으나, 이미 지난 6년간 증가된 교내장학금 규모가 등록금 수입의 19.5%에 이르고 있어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함
  - 교내등록금 지원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전년도 수준의 유지·확충을 전제로 하는 것은 형평과 대학의 상황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
    - ※ 교육부는 '18학년도부터 과거 3개년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률, 장학금 지급률(총 장학금/총 등록금) 반영으로 추가적인 재정 확충보다는 대학의 지속적인 지원 노력(적어도 3년 유지)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편

<표 IV-16> 사립대학의 연도별 교내장학금 배정 현황

(단위: 천원, %)

| 회계<br>연도 | 교비회계 총액 |              |           |        | 장학금 총액 |           |        |           |        |        |
|----------|---------|--------------|-----------|--------|--------|-----------|--------|-----------|--------|--------|
|          | (A)     |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           |        | (C)    | (C/A*100) | 교외장학금  |           | 교내장학금  |        |
|          |         | (B)          | (B/A*100) | 국립장학금  |        |           | (D)    | (D/B*100) |        |        |
|          |         |              |           |        |        |           |        |           |        |        |
| 2010     | 165,035 | 106,602      | 84,863    | (51.4) | 15,001 | (9.1)     | 3,922  | 3,101     | 11,079 | (13.1) |
| 2011     | 177,214 | 110,681      | 87,879    | (49.6) | 17,096 | (9.6)     | 4,402  | 3,508     | 12,694 | (14.4) |
| 2012     | 181,443 | 108,223      | 84,890    | (46.8) | 25,278 | (13.9)    | 11,595 | 10,536    | 13,683 | (16.1) |
| 2013     | 182,402 | 107,718      | 84,901    | (46.5) | 31,128 | (17.1)    | 16,575 | 15,475    | 14,553 | (17.1) |
| 2014     | 190,522 | 108,815      | 85,756    | (45.0) | 35,738 | (18.8)    | 20,218 | 19,135    | 15,519 | (18.1) |
| 2015     | 188,728 | 108,097      | 84,388    | (44.7) | 38,013 | (20.1)    | 22,448 | 21,442    | 15,565 | (18.4) |
| 2016     | 188,757 | 107,232      | 83,362    | (44.2) | 38,943 | (20.6)    | 23,141 | 22,090    | 15,802 | (19.0) |
| 2017     | 187,338 | 105,080      | 81,615    | (43.6) | 39,281 | (21.0)    | 23,344 | 22,249    | 15,938 | (19.5) |

주 1) 교비회계 총액과 등록금및수강료수입에는 대학원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수입이 포함된 금액임

2) 학부 등록금 수입=학부 입학금+학부 수업료+계절학기수강료

자료: 대학정보공시, 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출처: 이성은(2018), 고등교육재정 및 대학재정 현황, 대교협 내부자료

## 다.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개선과제

### □ 재정규모의 단계적 확충

- 고등교육 재정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 재정 확충을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법적 기반 구축 등 2 Track 으로 추진
    - ※ (단기) 대학 일반지원사업비(대학혁신지원사업비) 규모 확대 : 신규사업 추진
    - ※ (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법적 기반 구축으로 안정적 규모 확대
- 장기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법적 기반 구축
  -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학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지속적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고등교육 재정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기준 내국세의 8.5% 수준에 해당하는 24조 1,600억원까지 단계적 예산 확충 필요
    - ※ 5년간 내국세 비율을 0.45%씩 증가시켜 2019년에는 1조 6,710억원에서 2023년에 2조 1,880억원을 단계적으로 확보

<표 IV-17>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 추계 2019~2023년

(단위: 십억원, %)

| 구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고등교육재정지원법<br>신설에 따른<br>추가재정소요<br>(내국세의 8.5%) | 내국세                      | 238,734 | 249,739 | 260,228 | 271,158 | 282,547 |
|  | 내국세 8.5% 해당<br>고등교육예산(A) | 20,292  | 21,228  | 22,119  | 23,048  | 24,016  |
|  | 고등교육예산(B)                | 14,667  | 15,018  | 15,378  | 15,747  | 16,125  |
|  | 추가재정소요(A-B)              | 5,626   | 6,210   | 6,742   | 7,302   | 7,892   |
| 교부율에 대한 특례<br>적용에 따른<br>추가재정소요               | 단계적 교부율                  | 6.70    | 7.15    | 7.60    | 8.05    | 8.50    |
|  | 교부율 적용 예산 규모             | 15,995  | 17,856  | 19,777  | 21,828  | 24,016  |
|  | 연도별 추가 확충예산              | 1,671   | 1,861   | 1,921   | 2,051   | 2,188   |

주 1) 내국세는 '국회예산정책처(2016).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함

2)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은 '19~23년까지는 교육부의 중기 재정투자 계획에 따른 고등교육 연평균 증가율 2.7%를 적용하여 산출함

3) 고등교육예산 중 타부처 및 지자체 예산은 2015년 대비 2016년 증가율 1.7%를 적용함

□ 지출규모 축소를 통한 재정 확충

○ 사립대학의 국가유공자 학비 면제분 전액 보전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의 주체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음. 또한, 교육지원의 적용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사립대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립인 대학 등이 국가유공자 본인의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대학이 100% 전액을,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의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에는 대학이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사립대학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업료 등의 면제에 대해 국가가 그 면제금액을 전액 보전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 (1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액 보전

※ (2안) 국가유공자(및 그 가족과 유족)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을 통해 지원

\*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지원에 사립대학 1개교당 연평균 1.7억원 정도가 교비로 지원되고 있음(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143개 사립대학기준으로 연평균 약 240억원 정도 부담)

○ 학술정보자료 지원사업

- 학술정보자료의 확보가 대학 뿐만 아니라 교수 및 학생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므로 국가적 차원의 학술정보자료 지원체계의 확충이 필요

※ 대학 재정난 악화로 도서관 예산 감소, 해외 학술 DB 구독 종수 축소

\* 최근 4년간 대학 자료구입비 : 2,158억 → 2,060억으로 98억 감소, 4년간 KESLI



컨소시엄 DB 평균 인상률은 7.2%

- \* 학술정보자료 중 전자자료 구입비는 565억원('08년) → 1,627억원('17년)으로 188%의 증가폭을 나타냈고, 2017회계연도 기준 전체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총액의 65.4%를 차지함
- 연구수행주체 중 대학이 SCI급 논문 성과의 3/4 이상을 발표하고 있어 국내 투자비 대비 연구 성과의 비중이 두드러짐
- ※ 전자저널을 대학라이선스로 도입할 경우 연구자가 논문 작성에 참고하는 저널의 활용도가 약 9.4%(Wiley Online기준) ~ 19.2%(Science Direct기준) 향상
- \* KCI 등재 학술지 논문의 참고문헌(해외학술논문: 4,532종) 중 Science Direct 는 약 868종(19.2%), Wiley Online은 약 428종(9.4%) 각각 활용됨
- \* 학술DB 대학 라이선스의 활용도는 약 13.4% (28종 전체 기준, 1종당 0.48%)
-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는 핵심 전자저널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이미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

<표 IV-18> 전자저널 국가지원 해외 사례

| 구분      | 영국  | 프랑스   | 인도  | 헝가리   | 우크라이나   |
|---------|---|---|---|---|---|
| 지원 기관   | 초등교육 및<br>고등교육 기금위원회  | 고등교육부   | 인적자원부   | 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                                       |
| 참여 기관 수 | 500개 기관<br>(대학도서관)  | 240개 기관<br>(대학, 공공도서관 등)                      | 209개 기관<br>(대학도서관)  | 185개 기관<br>(대학, 공공도서관 등)  | 60개 기관<br>(대학, 연구도서관)                         |
| 지원 내역   | 전자자료 26종<br>제공(21종 무료, 5종<br>소액 유료)   | 205종 공동구매<br>컨소시엄 운영                          | 36종의 전자자료<br>대학구독료를<br>UGC에서 부담<br>* Science Direct,<br>Wiley, BlackWell,<br>Nature 등 | 50종의 전자자료<br>제공<br>* Science Direct,<br>Web of Science,<br>SciFinder 등 제공 | Scopus, Science<br>Direct 패키지 제공              |
| 특이 사항   | Science Direct<br>국가컨소시엄 체결<br>(2017-2021 계약)   | Science Direct<br>국가컨소시엄 체결<br>(2014-2018 계약) | Science Direct<br>국가컨소시엄 체결<br>(연도 마공개)   | Science Direct<br>국가컨소시엄 체결<br>(2013-2017 계약)                             | Science Direct<br>국가컨소시엄 체결<br>(2013-2017 계약) |
|         | ※ Elsevier의 Science Direct가 국가별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Science Direct의 국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 . 서비스 운영 중 |   |   |   |   |

- 전기·가스 등 비용 감축
  - 대학에서 사용되는 전기·가스 등의 비용도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요금체계 개선 등을 통해 비용을 감축하도록 한다면 대학의 재정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
    - ※ 전기요금의 경우, 교육용으로 별도 분류체계가 있지만 학교에서 수업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시간대가 요금이 높은 '최대부하 시간대'로 분류되어있어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용 요금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사립대에 대한 세제 적용을 국립대와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개편
  - 사립대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바, 세제 적용에서 국·사립 차별은 불합리
  - 학교 재산에 대한 지방세 등 면제 일몰기한 부여 폐지 및 항구적 면제 필요
    -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등 면제조항이 2021년말까지 일몰기한이 부여되어 향후 대학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됨
  - 대학의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입
    - ※ 교비회계에서 교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큼
  - 대학 내 위탁·임대운영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과세 개선
    - ※ 후생복지시설을 위탁·임대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판단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을 과세하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 필요
    - ※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사시설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후생복지시설을 명문화하는 항목 신설 필요
  - 외국인교원 숙소에 대한 과세 개선
    - ※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사시설에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등이 부속시설로 규정되에도 불구하고 교외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외국인교원의 숙소인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어 교사시설에 대해서는 위치에 관계없이 비과세 처리 필요
    - ※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위 주택, 아파트, 공관 등을 기존의 교지 이외의 위치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필요

□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재정 확충

- 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마련
  - 규모로 선발된 박사학위를 받은 자에게 국가의 재정으로 지원하고, 재정을 지원받은 자는 개별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
    - ※ 예) 프랑스는 국립학술연구센터(CNRS)를 통해 연구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학문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CNRS는 연구자 인건비, 연구실 공간임대료, 기자재 구입비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이 외부 기관에 응모하여 연구비를 수주하도록 지원함(2014년 기준 32,544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연구원 11,116명, 엔지니어 13,631명 등)
    - ※ 또한, 프랑스에서는 CIFRE 제도를 통해 예비박사학위 취득자, 박사후과정연구원과 같은 신진연구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프랑스 기업의 연구원으로 활동하도록 예비 박사학위취득자-대학(연구실)-기업이 연계·협력하여 지원
  - 강사처우개선지원사업비 288억원은 사립대학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지원이라는 이례적인 성과이기는 하지만, 향후 재정 규모 확충과 지속적인 지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함
    - ※ 강사들에게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대학이 부담하여야 할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산출한 결과, 1년 이상 임용계약에 따른 방학 중 임금은 총 2,308억원으로 추정됨
      - \* 4년제 대학은 국립 570억원, 공.사립 1,199억원으로 총 1,768억원 가량 추가 비용 소요
      - \* 전문대학은 국립 3억원, 공.사립 537억원으로 총 540억원 가량 추가 비용 소요
    - ※ 또한, 시간강사로 차등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교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강사와 다른 기존 정규 교원과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문제제기가 예상되는 바, 강사법 시행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 필요
- 교육 교류망 구축 사업
  - 국내 대학들간, 교육참여주체간에 협업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교과/비교과) 등의 연동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시설 자원의 공유를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
    - \* 예) 서울총장포럼의 공유대학플랫폼 등
- 대학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 교육환경 및 시설의 노후화되고 있으나 대학재정의 어려움으로 대규모 개선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임. 특히, 지방대학의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균형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실험실습 및 연구시설·장비가 정부출연연구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시설 및 장비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인력과 운영비 지원도 함께 포함되어야 함

※ '16년 기준 연구시설장비 투자현황에서 전체 구축 수는 정부출연연구소(38.4%), 대학(27.2%)로 나타나며, 구축액은 정부출연연구소(42.8%), 지자체출연연구소(18.2%), 대학(13.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5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3천만원 이상의 연구 장비 구축 현황

\* 구축 수 : 지자체출연연구소 25.7%, 정부출연연구소 24.1%, 대학은 0.8%

\* 구축액 : 정부출연연구소가 32.5%, 대학은 1%에 그침

○ 대학생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 대학생의 정신건강 위기를 극복하고, 성폭력, 자살 등을 미리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 우리나라 자살률: 인구 10명당 25.6명(OECD 국가 중 1위), 20대 청년층 사망 원인 1위: 자살

※ 대학생 2,600여명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오혜영 외, 2018): 관계적응 어려움(73.3%), 불안증상(74.5%), 우울증상(43.2%), 자살위기 경험(34.2%)

- 대학생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학 및 지역별 체계적 관리·지원 필요, 이를 위해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및 개별 대학의 상담센터 지원 필요

※ 대학 상담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권역별 거점센터를 선정·운영하며, 거점센터교의 인프라 활용과 재정지원을 통해 권역내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관리

\* (초·중등교육 분야) 'Wee클래스(학교)-Wee센터(지역교육청)-Wee스쿨(시·도 교육청)'의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연계 통합지원 서비스망이 구축되어 있음

○ 기초학문분야 역량강화 사업

- 기초학문분야의 기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지원

- 교양교육 강화를 통한 기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지원 등

□ 국가장학금 개선

○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통합(2유형 폐지)

- 국가장학금제도 본래의 도입 취지인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 하도록 1유형과 2유형을 통합하여 운영

※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이 교내장학금을 확충을 통해 등록금 부담완화에 동참하자는 취지인 바, 현재 교내장학금이 학부 등록금회계의 19.5%('17회계연도)에 이르고

있을 만큼 기본취지를 충분히 따르고 있음

※ 또한 국가장학금 통합을 통해 지급기준을 단순화하고,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여, 연말에 국가장학금 2유형의 추가배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

○ 등록금 동결 인정 범위 조정(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 2012년부터 등록금은 동결·인하되었으나, 학교운영경비 또는 관리운영비의 지출항목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지출비용이 증가하였기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동결을 인정해야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록금 수준에 대하여는 인하율을 반영한 배분기준 개선 필요

□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

○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국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의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학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안정적, 지속적 재정지원'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과 같이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

※ 한시적으로 '고등교육경쟁력강화지원 특례법' 등 도입

○ 고용보험기금의 일부를 대학에 투자

- 대학의 직업·평생교육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기금을 고등교육기관 전반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대학은 직업능력개발, 재직자 직업훈련, 실업예방 및 고용안정 등 사용 목적에 맞는 교육서비스 확대

○ 민간자원의 대학 유입경로 확대

- 대학기부금에 대해 개인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방식 중 선택하게 하거나, 대학기부금에 대한 소득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기부자 저변 확대

- '고등교육발전기금' 조성 등 도입

## 2. 대학평가 부담 완화

### 가. 교육부 소관 대학 대상 평가 현황

#### □ 대학 대상 평가 현황

○ (교육부 소관) 대학 대상 약 44개 평가 실시

- (유형별) 종합평가 4개, 재정지원사업 평가 26개, 실태조사 및 점검 9개, 인증 5개
- (대상별) 종합평가·실태조사 및 점검·인증(18개)은 대부분 전체 대학 대상, 재정지원사업 평가(26개)는 사업 지원(선정) 대학 대상

※ 단, 국립대학 육성사업, 국립대학 BTL 기숙사 사업, 국립대학 시설 공간활용 평가, 국립대학 교육시설 사업관리 평가는 국립대학만을 대상으로 함

- (시기별) ①종합평가, 3~5년 주기, ②실태조사 및 점검·인증, 매년\*, ③재정지원사업 평가, 사업 주기(3~6년) 내 연도별 선정·성과평가\*\* 실시

\* 단, 실태조사 및 인증의 성격에 따라 3~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예.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5년 주기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3년 주기 등)

\*\* 재정지원사업 평가 체계 : 선정평가 → 연차평가 → 중간평가 → 종합평가

<표 IV-19> 교육부 소관 대학 대상 평가

| 종합 평가                  | 재정지원사업 평가                  | 실태조사·점검                 | 특정분야 인증                    |
|------------------------|----------------------------|-------------------------|----------------------------|
| 대학기본역량진단               |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 대학 학생 정원 조정 요건 충족 이행점검  | 고등교육 학문분야 평가인증             |
|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 이행점검 | 공학교육인증                     |
|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 국립대학 육성사업                  | 대학도서관평가                 |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및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 대학 기관평가인증 ((전문)대교협 주관) | 인문한국[HK]/인문한국플러스[HK+]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성과 점검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
|                        | BK21 플러스                   |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
|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LINC+)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                            |
|                        |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BRI DGE+) 지원    | 국립대학 교육시설사업관리 평가        |                            |
|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 대학정보공시 현장점검             |                            |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 대학 정보보호 수준 진단           |                            |
|                        |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                         |                            |
|                        | 대학창업펀드 조성                  |                         |                            |
|                        | 실험실험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                         |                            |
|                        | 파란사다리 사업                   |                         |                            |
|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지원 사업            |                         |                            |
|                        | 학교기업 지원사업                  |                         |                            |
|                        |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              |                         |                            |
|                        |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           |                         |                            |
|                        |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 사업        |                         |                            |
|                        | CAMPUS ASIA                |                         |                            |
|                        |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                         |                            |
|                        | 글로벌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원사업          |                         |                            |
|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                            |
|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                         |                            |
|                        | 국립대학 시설 공간활용평가             |                         |                            |
|                        | 국립대학 BTL 기숙사               |                         |                            |

## 나. 대학 평가 간소화

□ 대학 현장에서 진단과 인증 이원화로 평가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 '21년은 진단·인증 모두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진단·인증 간 공통·유사지표를 통일하여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 진단·인증 지표 현황

- 일반대학 대상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는 15개, 기관평가인증 지표는 30개
  - 정량 지표 중 산출식 동일/유사 지표 4개, 정량적 정성 지표 중 하위요소 유사 지표 6개
  - 정량 지표는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대학의 평가 준비 부담은 적은 편, 보다 실질적인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량적 정성 지표 중심으로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표 IV-20> 진단·인증 정량·정량적 정성 지표 비교

| 구 분             |                   | 지 표   |
|-----------------|-------------------|---|
| 정량<br>지표        | 산출식<br>동일 또는 유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전임교원 확보율, ② 장학금 지급률, ③ 교사 확보율, ④ 시간강사 보수수준 등</li> </ul>  |
|                 | 산출식 또는<br>하위요소 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비 환원율 (산식 차이: 진단은 사립 총 교육비에 건축비 일부 포함)</li> <li>▸ 신입생·재학생 총원율 (산식 차이: 진단은 주간, 인증은 주·야간 포함)</li> <li>▸ 졸업생 취업률 (하위요소 차이: 졸업생 취업률은 공통, 진단은 유지 취업률 포함, 인증은 졸업생 진학·창업 현황 포함)</li> <li>▸ 법인채무성 (산식 차이: 법인전입금비율 산식 다름, 하위요소 차이: 진단은 법정부담금부담율과 법인전입금비율 중 높은 점수 반영, 인증은 법인전입금비율 외 등록금 의존율, 기부금 비율 포함)</li> <li>▸ 강의규모의 적절성 (산식 차이: 진단은 강의규모별 가중치 부여, 인증은 전체 교양강의 중 101명 이상 대규모 교양강의 비율)</li> <li>▸ 연구 성과(인증만 연구 관련 지표 포함)</li> </ul> |
| 정량적<br>정성<br>지표 | 하위요소<br>동일 또는 유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발전계획 및 특성화, ② 교양·전공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 ③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④ 학생 학습 역량, ⑤ 진로·심리 상담 지원, ⑥ 취·창업 지원, ⑦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li> </ul>  |
|                 | 지표 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만 있는 지표) 구성원의 참여·소통</li> <li>▸ (인증만 있는 지표) 교·직원 관련 지표(교직원 처우·복지, 인사제도, 전문성 개발 등), 학생지원(안전 관리, 소수집단학생 지원), 교육 시설</li> </ul>  |



□ 평가 시, 진단·인증 지표 연계 방안 검토

- (유사지표) 진단·인증의 정량적 정성 지표 중 동일·유사한 하위요소에 대한 보고서 작성 서식\* 등을 통일하여 공통으로 활용
- (진단) 구체적 작성 서식 제공, (인증) 별도 작성 서식 없이 대학이 개별 작성
- 진단(15개)·인증(30개) 지표 중 7개 지표의 유사 하위요소를 공통으로 활용

<표 IV-21> 진단·인증 정량적 정성 지표 중 유사 하위요소

| 연<br>번 | 지 표                    |                    | 유사 하위요소   |
|--------|------------------------|--------------------|---|
|        | 진단(7/15)               | 인증(7/30)           |   |
| 1      | 발전계획의 수립·추진·성과         | 발전계획 및 특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계획 수립·추진) 대내·외 여건 분석, 구성원 의견수렴 반영, 발전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집행, 추진 실적 및 성과</li> <li>■ (발전계획 환류) 주기적 점검·환류 실적</li> </ul> |
| 2      | 교육과정·강의 개선             | 교육과정 개선 체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양·전공 교육과정 개선 관련 규정·절차 준수, 환류 노력</li> </ul>  |
| 3      | 교양·전공 교육과정             | 교양·전공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내·외 여건과 연계한 교양·전공 교육과정 편성 체계, 규정·절차 준수, 운영 실적</li> </ul>  |
| 4      |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 수업, 성적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 학생 성적 관리 관련 규정·절차 준수, 후속조치</li> </ul>  |
| 5      | 학생 학습역량 지원             | 교수·학습 지원과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프로그램 지원 체계, 운영 및 환류 실적</li> </ul>   |
| 6      | 진로·심리 상담 지원<br>취·창업 지원 | 학생 상담 및<br>취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준수, 지원 체계, 지원 인력의 전문성</li> <li>■ 프로그램 운영 현황, 환류 실적</li> </ul>   |
| 7      | 교육 수요자<br>만족도 관리       | 교육 만족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족도 관리 체계, 조사의 체계성(대상, 내용, 방법), 환류 실적</li> </ul>   |

- (개선지표) 진단·인증 간 일치하지 않는 지표 및 하위요소의 경우, 진단·인증 모두 지표 및 하위요소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지표를 간소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단·인증 지표 간 연계 가능성을 연내 검토
- (재검토 시 고려 사항) 정량적 정성 지표(요소)의 경우 ① 지표(요소)의 변별력, ② 다른 지표(요소)와의 중복성, ③ 대학의 수용도 등을 고려

## 다. 대교협 대학 인증 및 평가 간소화 방안

### □ 평가지표 연계(안)

-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준거별 결과 활용을 위한 평가지표 연계(안)
  - 평가범위: 대학기관평가인증(교육, 연구, 사회봉사) > 대학 기본역량진단(교육)
  - ※ 정부 재정지원사업: 인증여부(신청자격) + 재정지원사업별 평가지표
  -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교육 관련 평가준거 중 진단 활용 지표 명시
  -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교육 관련 평가준거별 결과 활용하여 재정지원 여부 선별

<표 IV-22> 평가지표 연계(안)

| 평가명       | 평가범위 |    |      | 최종 판정   |
|-----------|------|----|------|---|
| 대학기관평가인증  | 교육   | 연구 | 사회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거→부문→영역의 상향식 판정</li> <li>• 최종 인증 유형 판정</li> </ul> |
| 대학 기본역량진단 | 교육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거별 판정 결과 종합</li> <li>• 상대적 순위 집계</li> </ul>       |

-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평가인증 추진(안)
  - 대학 기본역량진단: 2021년 일괄 평가
  - 대학기관평가인증: 2021년 일괄 평가

<표 IV-23> 평가지표 연계에 따른 기능 구분(안)

| 평가명       | 기능  |
|-----------|---|
| 대학기관평가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 여건 확인</li> <li>•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으로 활용</li> </ul> |
| 대학 기본역량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지원가능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선별</li> </ul>                           |

### □ 공통지표 운영(안)

- 평가지표명과 하위 평가요소가 같은 공통지표 설정
  - 평가지표 및 평가요소 같은 5개 지표 우선 검토(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산출식, 보고서 작성내용, 근거자료, 평가 용어 등을 통일하여 부담 완화
  - ※ 정량지표: 산출식                      \* 정성지표: 보고서 작성내용, 근거자료

<표 IV-24> 공통지표 운영(안)

| 구분      | 대학 기본역량진단                       | 대학기관평가인증          | 검토 여부                     |
|---------|---------------------------------|-------------------|---------------------------|
| 정량지표    | 교사 확보율                          | (필수평가준거) 교사 확보율   | 검토                        |
|         | 장학금 지원                          | (필수평가준거) 장학금 비율   |                           |
| 정성지표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 5.1.3 교육만족도       |                           |
|         | 진로·심리상담 지원                      | 4.2.1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                           |
|         | 취·창업지원                          | 4.2.1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                           |
| 정성+정량지표 | 법인 책무성(1단계),<br>재정·회계의 안정성(2단계) | 1.2.1 대학재정 확보     | 진단 단계별로<br>적용<br>추후 검토 예정 |

-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평가인증 추진(안)
  - 대학 기본역량진단: 2021년 일괄 평가
  - 대학기관평가인증: 3주기(2021~2025년) 내 대학별 신청에 따라 평가

### 3. 규제개선 및 대학미래비전

#### 가. 2019년 상반기 대학 규제개선 및 과제 검토

□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는 학문적 창의성과 연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대학의 역량을 소모적인 규제행정 대처에 낭비하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완화 필요.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여 제도개선 및 관련법령 개정 등 규제개선 도모

□ 2019년 상반기 대학 규제개선 및 과제 논의 현황

- 2019년 50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TF를 통한 검토 결과, 조치완료 3건, 수용 19건, 일부수용 6건, 신중검토 20건, 현행유지 2건임. 단, 규제개선 검토과제 중 조치완료는 이미 법률 공포된 내용임. 규제개선 검토과제 중 수용 과제는 교육부에서 수용하였으나 관련부처 협의와 검토 등이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령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등으로 법제화되기 이전 과정임.
- (조치완료) 3건 : 후생복지시설 설치 시 용도변경 절차 면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범위 확대, 산학협력중점교수 겸직 허용 등

- (수용) 19건 : 대학 산학협력 관련(교육부 수용이나 관련 부처 협의 필요), 사립대학 임면보고개선,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시 처분 조건 개선 및 완화 등
- (일부수용) 6건 : 대학·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 요건 개선안, 교육부의 행정 제재와 전문대학원개설 불가를 연계한 규제, 국립대학 공용차량 교체 제도 개선 등
- (신중검토) 20건 : 국립대학 교직원 인사제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대학시설조직 확충 등
- (현행유지) 2건 : 교육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 후생복지시설 사용목적으로 부동산임대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부과 기준 등

<표 IV-25> 2019년 상반기 대학 규제개선 과제 검토 현황

| 구분            | 건의사항 주요내용 및 TF 논의요약   | 검토 결과   |
|---------------|---|---|
| 대학인사<br>(교직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법령 개정</li> <li>- 대학 교원에 대한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이외 겸직 금지 규정으로 산업체와의 교류 저하</li> <li>-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연계활동 촉진 차원에서 기업체의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에 대해서도 겸직 허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교원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벤처·중소기업 등 영리 사기업체의 임직원 겸직 허용 가능(조치완료)</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대학 임면보고 개선</li> <li>-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됨으로써 사립대 교원 임용 시 관할청 보고 기일을 7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완화 조치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대학 교원 임용 보고 기한을 7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완화</li> <li>-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범위에 강사가 포함됨에 따른 교원 임용시 행정업무 부하의 경감을 위해 수용 필요(수용)</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대학 대학행정인력 선발제도 개선(행정직렬/교육행정직류)</li> <li>- 6급 이하 행정인력(행정직렬-교육행정직류)의 적기수급 및 결원에 따른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선발권(공채 및 경채)을 대학의 장에게 부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에 따라 대학 자체 공채 시험실 는 불가하며,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따라 경채의 방법을 통한 선발 가능(신중검토)</li> </ul>                                  |

| 구분 | 건의사항 주요내용 및 TF 논의요약   | 검토 결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대학 필수보직기간 제도 개선</li> <li>- 필수보직기간을 완화(3년→2년)하고, 위임 전 결 사항 확대를 통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승인 권한을 국립대학의 장에게 위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보직기간 및 필수보직기간 중 전 보사전 승인권자를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자체 필수보직기간 완화 및 승인권 위임이 불가</li> <li>-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개정('15.9월)으로 필수보직기간이 강화되었으며, 기간 완화 또한 법령 개정사항임</li> <li>-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라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할 경우 소속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장관이 아닌 국립학교장(총장) 또는 사무국장 등에게 필수보직 기간 내 사전승인 권한의 위임이 불가함('17. 교육부 인사감사 지적사항)(신중검토)</li> <li>※ 승인대상 전보사유: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7항 제4호, 제10호, 제12호, 제16호</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대학 교직원의 부가적 업무수행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li> <li>- 운영수당(210-06목) 지급제외 대상인 '자기소관사무'의 범위를 부서단위로 축소하여 교직원에게 수당지급 확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대학의 사무까지 포함(신중검토)</li> </ul>   |

| 구분           | 건의사항 주요내용 및 TF 논의요약   | 검토 결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 연장근로 특례업종에 대학(입시업무) 산업요청</li> <li>- 대학의 입학 업무 특성상, 고교수업에 지장이없도록 고교 대상 입시 전형 및 박람회, 입시설명회 등을 주말에 진행하고 있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주 12시간 초과연장근로제한)과 상충될 가능성 높음</li> <li>- 고교교육 정상화 및 고3 학생의 학습권 보장, 원활한 입시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해 학기 중에는 현행과 같이 주말에 입시 전형 및 박람회 등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입학 업무에 대한 주 12시간 초과 근로 근거 규정 마련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입시부서 포함)의 경우 고용노동 지방청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시 행 사까지 제도기간 부여 가능 ('19.6.20. 고용부발표)</li> <li>-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될 경우 입시부서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신중검토)</li> </ul>   |
| 대학정원<br>(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요건 개선(안)</li> <li>- 대학 학생정원 자체조정 요건을 순증의 경우와 같이 일정 기준(예, 교원확보율 00% 이상 유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기준 제시 필요</li> <li>- 대학원은 교원확보율 65% 이상인 경우에도 자체조정이 가능하므로, 학부 및 대학원 정원 자체조정 요건 통합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정원 자체조정 요건(교원확보율 전 년도 이상)을 일정 기준 제시로 개선</li> <li>- 최소한의 교육여건 확보 차원에서 교원확보율 충족요건 유지 필요</li> <li>- 미래 인력 수요 대비, 융합형 학사조직 설치 및 정원 조정을 하는 경우, 자체조정 요건 완화 검토 가능(일부수용)</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학과 입학생 정원기준 시설 정원 산정시 제외</li> <li>-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학과는 야간 또는 주말에 강의를 실시함에 따라 별도의 교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동 학과의 학생정원은 교사기준 면적 산정에 필요한 시설정원(입학생 기준)에 포함되어 기준에 따른 교사를 확보*해야 하므로 시설정원에서 제외 요구</li> <li>* 계열별 학생정원(입학생기준) × 1인당 교사 기준면적(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3)</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현행대로 계열별 입학생정원 기준으로 시설 정원 산정 필요</li> <li>-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최소한의 교사면적 확보를 위해 주야간과 관계없이 계열별 학생정원에 따라 교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야간 과정만 운영하는 타 학과(학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학생 정원 산정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 필요(신중검토)</li> </ul> |

| 구분                | 건의사항 주요내용 및 TF 논의요약   | 검토 결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학 등록 포기 및 환불 신청에 관한 제도 개선</li> <li>-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합격 통보 마감일 이후에도 합격자의 환불 신청이 가능하여 추가합격 통보 마감 이후 예비합격자 등록 포기 또는 환불 요구로 인해 미충원 인원 발생</li> <li>- 추가합격 마감 시점과 환불 마감 시점 일치시키거나 최초 합격자에 한해서는 환불 마감 시한을 추가합격 통보 시작 시점 이전으로 조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학 등록금 반환* 시기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li> <li>*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 포기 시 등록금 전액 환불</li> <li>- 미충원 전원을 이월할 경우 일부 대학의 정원 증대효과로 지방대학의 미충원 문제 가속화 우려</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입학여석 산출시 4대 요건 확보율 산정방법 개선</li> <li>- 편입학여석 산출시 국·공립대학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4대 요건에서 제외되나 사립대학의 경우 국·공립과 달리 법인지표인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이 포함되는 등 산출 방법이 달라 사립대학에 불이익 발생</li> <li>- 여석 산정방법</li> <li>* (전년도 1, 2학년 총 결손인원 × 4대 요건 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 +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인원</li> <li>* 국공립대 :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으므로 3대 요건 확보율을 적용 <math>\Rightarrow</math> (교지확보율+교사확보율+교원확보율)×0.33</li> <li>* 사립대 : 4대 요건 확보율 적용 <math>\Rightarrow</math> (교지확보율+교사확보율+교원확보율+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0.25</li> <li>- 사립대 4대 요건 확보율 중 ‘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에 따른 불이익 개선을 위해 국공립대와 같은 3대 지표만으로 산출하도록 개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제외 시 대학의 편입학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신중검토)</li> </ul>  |
| 대학설립<br>운영/<br>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구내의 후생복지시설 설치 시 용도변경절차 면제</li> <li>- 후생복지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 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교육연구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변경해야 함에 따라 후생복지시설 설치·운영의 효율성 저하</li> <li>-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상 허용되는 교육용 부대시설이므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절차 면제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내 휴게음식점은 용도변경절차 없이 설치 가능(‘14년 개정)</li> <li>- 참고로, 문구점 등도 교사의 부속시설로 용도변경절차 없이 설치 가능(조치완료)</li> </ul>  |

| 구분 | 건의사항 주요내용 및 TF 논의요약  | 검토 결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인 허용범위 확대</li> <li>- 정원감축 등으로 유휴 미활용 교육용 기본재산 증가에 대한 관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하므로, 적극적인 임대계약을 통해 수익금은 전액 교비로 세입 조치하는 조건의 임대 허용 필요</li> <li>- 종전 “구성원 후생복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임대 제한 부분을 해소하여 교비수익 확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휴 미활용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허용여부는 학교장 재량 사항으로 현재도 교육부 허가 없이 활용 가능(조치완료)</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시 처분 조건 개선 및 완화</li> <li>-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대금을 대체 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li> <li>-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처분대금은 보전계획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처분대금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경우</li> <li>- 별도의 보전계획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수용)</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허용 규제 개선</li> <li>- 지역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대학-지자체 보유 자산의 공동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나 행정재산 활용을 위한 법령 충돌로 사업 추진 불가</li> <li>* 지자체가 국립대학부지에 건물을 축조할 경우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할 수 있는데 이를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 불가능</li> <li>※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행정재산의 처분 제한)</li> <li>- 국가-지자체 간의 자산 공유 활용을 위한 규제 법률 개선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유 재산 활용도 향상 및 국공유 재산 간 공유 활용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수용)</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된 교지에 대한 규제 완화</li> <li>- 각 대학에서 교지 부족으로 분리된 교지를 추가 확보하려는 경우,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교지기준면적을 확보하여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예외 적용</li> <li>- 기존 교지와의 거리가 2킬로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교육연구 공간 부족으로 새로운 교지 확보에 대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인정 요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지에 대한 기준 변경은 중요한 사항으로 관계부처(국토부)와의 협의, 전문가 면담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수용)</li> </ul>                       |



| 구분 | 건의사항 주요내용 및 TF 논의요약   | 검토 결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재정 수입 창출을 위하여 학교 교내에서 자사광고 이외의 옥외광고 허용</li> <li>- 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거지역에 위치하거나 학교의 경우에는 자사광고 이외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특히 옥상건판의 경우에는 4층 이하 16층 이상의 특별시 소재 건물에는 설치 불가</li> <li>- 학교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재정 수입 증대를 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로서, 재정위기에 처한 대학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광고물(옥상건판 등) 설치 허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법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 등과 협의(수용)</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li> <li>- 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도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특별한 규율이 따로 없어서 학교가 속한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이 서로 다르게 적용됨</li> <li>- 학교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용적률 규제적용 완화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건폐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협의(수용)</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에 대한 주차장 확보율 규제 완화</li> <li>- 교사 신축 시 「주차장법」에 의하여 학생용 기숙사는 시설면적 400㎡당 부설주차장 1대, 나머지 교사는 300㎡당 부설주차장 1대(서울시는 200㎡당 부설주차장 1대)를 설치해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신축비용 발생</li> <li>- 학생용 기숙사 외에도 모든 교사에 대해 400㎡당 부설주차장 1대 설치로 규제를 완화 요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절감 및 효율적 교지 활용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수용)</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의 행정 제재와 전문대학원 개설 불가를 연계한 규제</li> <li>- 전문대학원 설립 전제조건인 최근 3년간 행정 제재 미해당 여부는 법령에 없는 규제로서 개선 건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원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설치 요건(관련 특수대학원 폐지, 행정제재 미해당 여부) 충족 필요</li> <li>- 단,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학년도부터 행정제재 요건 완화(일부수용)</li> <li>※ 최근 3년간 → 최근 1년간 행정제재 미해당 대학</li> </ul> |

| 구분 | 건의사항 주요내용 및 TF 논의요약   | 검토 결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확충 신규사업(신증축)행정절차 간소화 (안)</li> <li>- 신규 사업에 대한 공공센터 사전 협의 기능을 교육부 총사업비 심의로 대체하여 행정 소요 일수 단축</li> <li>- 비슷한 제도의 통합 및 개선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불필요한 행정인력 낭비 개선과 예산절감 도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육부 총사업비 심의와 국토교통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제도 통합은 수용불가하나,</li> <li>- 교육부에서는 신규 사업 절차이행 기간 단축을 위해 총사업비 심의시기 조정 및 확대 시행 조치(신증검토)</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시설 확보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교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조정</li> <li>- 현행법상 학교가 매입한 토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준비기간(최대 3년) 동안 취득세는 면제되지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li> <li>- 교육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면제될 수 있도록 기준 조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면제 기간(취득 후 3년)이 경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교사 신축 등)가 있는 경우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li> <li>- 취득세 면제를 위한 학교(학교법인)의 적극적인 소명 필요(현행유지)</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을 임대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li> <li>- 복사실, 식당, 편의점 등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li> <li>- 후생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li> <li>- 이러한 후생복지시설은 교육사업 본질을 벗어난다고 할 수 없으며, 수익성이 있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및 재산세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과여부가 결정</li> <li>- 세금 면제를 위한 학교(학교법인)의 적극적인 대응과 합리적인 재산관리가 필요(현행유지)</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 범위 확대</li> <li>- 초·중등학교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건축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특별히 적용되지만, 대학교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음</li> <li>- 초·중등학교에 적용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 범위를 대학교까지 확대하여 교사(校舍)의 신축이나 개축에 관한 행정절차 간소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법령은 적기 개교(개학)를 위한 절차 간소화 법으로 대학에 적용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반함(신증검토)</li> </ul>   |

| 구분                | 건의사항 주요내용 및 TF 논의요약  | 검토 결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에 대한 안전점검 규제 완화</li> <li>- 「건축법」상 점검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점검 등 안전점검 중복 시행으로 행정 인력 및 재정 낭비</li> <li>- 교육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독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교육부로 이전 및 2개의 점검 제도를 1개로 통합하여 규제 간소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모든 시설은 국토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li> <li>- 안전점검 제도는 일원화되어 관리중임('19.4.30. 법령 제개정)(신중검토/관련 법 재개정됨)</li> </ul>   |
| 대학행재<br>정제도<br>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경찰청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시스템) 성범죄 경력조회 시스템 활용 확대</li> <li>- 사립대학도 온라인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활용 기관 확대: 온라인 시스템 활용을 통해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 개선효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대학까지 온라인 성범죄 경력 조회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행안부, 경찰청)에 건의(수용)</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대체경비 기관의 수익금 일부 적립방안 필요</li> <li>- 수입대체경비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목적사업비(시설보수비 등)에 한하여 수입액의 일부(10% 범위내)를 적립할 수 있도록 대학회계 기본지침 개정 필요</li> <li>- 냉난방시스템 교체 또는 건물 리모델링 등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당해 예산으로 조치 어려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대체경비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 당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규모가 같아야 함</li> <li>- 수입대체경비는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li> <li>- 세출예산은 수입대체경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비목에 한정*하여 반영해야 하므로 수입금을 적립하는 것은 불가(기재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7)(신중검토)</li> </ul> |

| 구분 | 건의사항 주요내용 및 TF 논의요약  | 검토 결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대학 차실의 설치범위 확대 요청</li> <li>- 입학 부서 위상 강화를 위해 현행 '입학본부'에서 법정조직인 '입학처'로 조직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 「국립학교 설치령」 상의 대학 하부조직(차·실) 범위 확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 담당부서 위상강화를 위해 부서 명칭을 '입학본부'에서 '입학처'로 변경하는 것은 국립학교설치령상의 하부조직(차·실)의 설치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귀결</li> <li>- 차실의 설치범위 확대는 행정수요 증가, 대학기능 확대 및 기관 규모(학생 수, 교직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과팀, 실무인력 증원과도 연동되어 있어 신중검토 필요(신중검토)</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회계의 예산 및 결산 절차 개선</li> <li>-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학교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학교 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 침해</li> <li>-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을 본래 설치 목적인 등록금 책정 심의에 한정함으로써 학교법인 이사회의 학교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보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의 지출항목이 상당수 중복되어 규모가 큰 등록금회계에만 지출이 집중될 우려</li> <li>- 등록금회계에 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등심위의 모니터링 필요(신중검토)</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법인의 전용계좌 사용의무 면제</li> <li>-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 사용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 천분의 5 등의 가산세 부과</li> <li>- 전용계좌 사용의무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나, 학교법인의 경우에 '회계투명성'은 이미 다른 규제(사립학교법·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특례규칙 및 관할청의 지침 등)에 의하여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에 대한 전용계좌 사용의무 면제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재부에서 동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세제개혁 등 타공익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단한 사안이므로 현행 제도를 준수할 필요(신중검토)</li> </ul>   |

| 구분   | 건의사항 주요내용 및 TF 논의요약   | 검토 결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수업 운영기준 규제 완화</li> <li>- 학기 중간의 폭설 등 기상문제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캠퍼스가 아닌 관할 구역에서 정규 교과목 등 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미비로 지속적인 휴교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 발생</li> <li>- 지리적 특성에 따른 캠퍼스 여건을 감안하여 이동수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수업 운영 확대의 필요성 및 교육의 질 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동수업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신중검토)</li> </ul>  |
| 산학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산학협력단 장애인 고용 기준 개선</li> <li>- 산학협력단은 연구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이를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li> <li>- 연구과제 참여인력은 학생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어 장애인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과제 참여인력을 산학협력단 상시 고용인력에서 제외하여 장애인 고용부담 완화 필요</li> <li>- 장애인 고용부담 및 부담금 부과기준을 4대 보험 가입자 수에서 상시 인원인 대학정보공시 기준으로 변경을 소관 부처(고용노동부)와 협의(수용)</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개선</li> <li>-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주요 부서임에도 별도 사업자로 분류되어 대학본부와 별개로 자체적인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하는 등 이중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단은 대학과는 별도의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의 하부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동일건물을 사용하므로 안전·보건에 대하여는 대학본부와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리의 일원화 필요</li> <li>- 산학협력단을 대학의 부서로 인정하여 안전·보건 관리를 대학 내 중앙관리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수용)</li> </ul> |

| 구분 | 건의사항 주요내용 및 TF 논의요약  | 검토 결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 조항의 일몰적용 배제</li> <li>-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에 대한 관련 조항이 일몰예정(2019.12.31.)</li> <li>- 조특법의 일몰기한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인세 및 주민세가 과세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을 유지하여 대학의 연구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일몰적용 배제 필요</li> <li>- 조세감면을 통한 수익이 대학의 연구개발 수준향상을 위해 투입되어 대학에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기업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므로 이에 대한 일몰적용 배제를 소관부처(기획재정부)와 협의(수용)</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단의 지방세 적용의 차별과세 개선</li> <li>-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나, 산학협력 단의 경우 75% 경감에 그치고 있음. 또한 학교는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을 면제받고 있으나, 산학협력단은 과세되고 있음</li> <li>- 산학협력단의 경우 대학에서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된 법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교와 동일한 감면규정의 적용이 필요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별도의 법인이지 만 실질적으로 대학의 하부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방세 면세 필요</li> <li>- 산학협력단의 설비배경 및 법적 지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부처(행정안전부)와 협의 추진(수용)</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단의 교육서비스업을 비수익사업으로 구분</li> <li>-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나목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회계에 편입됨</li> <li>- 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운영차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가능함</li> <li>- 따라서 학교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제3호의 각목에 산학협력단을 추가하여 비수익사업으로 편입되게 요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단은 대학과는 별도의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의 하부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산학협력 연구진흥 활동으로 대학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큼</li> <li>- 산학협력단 교육서비스업을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도록 소관부처(기획재정부)와의 협의(수용)</li> </ul>   |

| 구분 | 건의사항 주요내용 및 TF 논의요약   | 검토 결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단의 기술현물 출자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요청</li> <li>-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로의 지식재산권 현물출자시 기술지주회사는 현물로 출자금을 수령하며, 부가세를 별도로 산학협력단에 지급하여야하나, 출자단계에서의 자금부족으로 매출세액입금이 불가능하며, 과세당국에서도 출자기업의 매입세액으로 환급처리되므로 과세실익이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재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예외 규정 적용이 필요한 사항임</li> <li>- 산학협력단으로 납부되는 부가세는 기술지주회사로 다시 환급되는 사항으로 기술현물 출자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와 관련하여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요(수용)</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단이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실비변상적 급여를 신설</li> <li>- 현재 산학협력단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9조 라목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1년 의 기간으로 수행되고 있어 일시적 제 공여부 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li> <li>-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 위)의 각호 신설요청 연구관련 종사자가 소속 연구기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li> <li>- 참여연구원들이 연구기관 외 학회참석 또는 연구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급여 성격으로 비과세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관련 경비의 기타소득 부여는 대학의 연구비 집행을 산학협력단이 관리를 위탁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필요경비는 비과세대상이 되도록 소관 부처 (기획재정부)와 협의(수용)</li> </ul>   |

| 구분 | 건의사항 주요내용 및 TF 논의요약  | 검토 결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내 산학협력 및 창업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관련 규정 개정</li> <li>-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창업보육을 위해 부동산을 활용할 때에 지방세를 면제(또는 감면)해주고 있으나, 면제규정 유효기간 만료(각 2021.12.31., 2020.12.31.)에 따른 기간 연장 필요</li> <li>-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법률상 대학과 별도 법인이라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학협력 및 기술 개발 등 대학이 해야 할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 제41조 제2항의 ‘학교 등’에 대학뿐만 아니라 그 산하의 ‘산학협력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지방세 등의 면제 정책 유지 필요, 면제 혜택이 무기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li> <li>- 산학협력단의 설립배경 및 법적 지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부처(행정안전부)와 협의 추진(수용)</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발명의 보상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li> <li>-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설정 및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및 혁신의지 저하</li> <li>- 직무발명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복원하고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등 세제혜택 확대 요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 상상을 위해 관계부처(기재부, 과기부, 특허청 등)와 지속적으로 협의(수용)</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이전 관련 규제 완화(통상실시 원칙 완화)</li> <li>- 우리나라는 국유·공공 IP에 대한 기술거래사업화 시 통상실시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국내 중 소·중견기업 우선원칙, 참여기업 실시원칙 등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저해</li> <li>- 통상실시 원칙, 중소·중견기업 우선원칙, 참여기업 우선실시 원칙 등 완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실시권) 1년 이내 통상실시권을 받을 기업이 없는 경우 전용실시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중산업부 소관)</li> <li>- (중소기업) 대학 기술은 연구개발 참여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참여기업 이전 시 공익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우선 이전 필요(과기부 소관)(신중검토)</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관에 연구비 환수금 1차적 납부책임 부과</li> <li>- 연구비 환수금의 1차적 납부책임을 대학 등 연구기관에 부과하는 규정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책임)자가 책임을 연구기관에 전가할 공식적 명분 제공</li> <li>- 귀책사유에 따라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에 환수금을 부과되, 연구(책임)자에게 1차적으로 환수금 납부책임 부과 후, 2차적으로 연구기관에 귀책을 묻도록 절차 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상 규정된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의 취지에 따라 대학(대학)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비 관리 책임이 있음(신중검토)</li> </ul>  |



| 구분  | 건의사항 주요내용 및 TF 논의요약  | 검토 결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칭)연구개발비 밀당 제도 조속한 시행 요청</li> <li>- 연구 장비 등을 구입시 연구비에 대한 제한이 많으므로, '연구개발비 밀당 자금(가칭, 약 2백억원 규모)'제도를 통해 미리 연구계획을 설정하고, 과제를 안정적·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시행 요청</li> <li>- 단계 연구비 이내의 범위에서 이월 및 차년도 예산 당겨쓰기를 허용하여 연구개발비 탄력적 운용 및 연구자 자율성 제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원칙 및 국가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li> <li>- 필요시, 대학 자체 재원으로 연구비를 선(先)지급하여 건의 취지 달성 가능(신중검토)</li> </ul>   |
| 평가  | ○ 교육부 기본역량 진단과 대교협 기관인증평가의통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진단과 인증은 실행주체 방식,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인증의 평가준거, 판정기준 등의 적정성 검토·개선 필요</li> <li>- 진단과 인증의 공통유사지표에 대해 정량지표의 산출식과 자료기준일, 정량적·정성 지표의 세부요소 등을 통일하는 방안 검토(일부수용)</li> </ul>   |
|     | ○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 일원화  |   |
|     | ○ 교육부 기본역량 진단과 대교협 대학기관인증 평가 통합 운영   |   |
| 등록금 | ○ 국가장학금 II유형 제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분야의 재정 확충 필요성은 공감하나, 등록금 인상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한 검토 필요(신중검토)</li> </ul>   |
|     | ○ 등록금 현실화(인상)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li> <li>- 공무상 출장에 따른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각 개인별로 별도 관리·운영함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미흡사항이 다수 발생<br/>※ 누락, 오류 수정, 마일리지 활용 부적절 등<br/>항공마일리지의 적·합·활·용 단위를 공무원 개개인이 아닌 소속 기관 차원으로 확대 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합·활·용 단위 출장자(개인별)가 아닌 소속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li> <li>-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단위 확대(개인→기관)를 위해 소관부처(인사혁신처)와 항공사 간 협의 필요(수용)</li> </ul> |

| 구분 | 건의사항 주요내용 및 TF 논의요약   | 검토 결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재정지원사업신설</li> <li>- 공영형 사립대학 지원 사업</li> <li>-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신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지원 사업 도입 추진: 사학의 지역사회 공적 역할 및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지원 사업 도입 추진(수용)</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대학 공용차량 교체 제도 개선</li> <li>- 공용차량 관리규정 내 정수 외 공용차량 교체 근거 마련</li> </ul> <p>대학의 공용차량 운행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정수 차량만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관련 규정의 제도 개선 요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의거, 교체기준을 충족하고, 차량 구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수 신청 절차를 거쳐 신규차량 구입 가능(일부수용)</li> </ul>          |

출처: 대교협, 2019년 대학 규제개선 건의과제 추진 경과 및 현황

## 나. 미래대학 혁신과제

- (디지털형 교육으로의 전환) 대학의 교육여건(교지, 교사, 시설)이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않음. 학생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교육여건을 갖추는 것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혁신대학처럼 사회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아날로그식 교육방식을 교육적 활동과 성과에 집중하는 디지털형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교원 충원 및 대학목적별 특화) 대학교육의 질은 교원의 확보와 질에 달려있음.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하기 위해 교원 충원을 확대하고, 교원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의 종합대학들을 대학운영 목적에 따라 분류(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직업교육중심대학 등)함으로써 특화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학운영의 자율성 및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존 방식(1년 단위 국고지원)에서 다년 단위 교육기금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획일화된 기존의 교육과정을 다각화하여 개편하고,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자율적, 탄력적 구조조정) 모집정원 2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 전문대학도 건실하게 운영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대학은 학생자원이 급감하더라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대학 스스로 퇴출을 선택하지 않을 것임. 또한,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율이 낮으면 불이익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학생 정원을 줄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규모대학하면 부실대학으로 인식되기 쉽고, 또 상황이 호전되거나 학생 모집 가능성이 높은 학과나 전공을 개발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정하고 있는 교지, 교사,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전체 정원을 기준으로 100퍼센트 확보해야 하므로 정원을 일단 줄이면 다시 증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임. 따라서 모집 정원 유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표 IV-26> 혁신과제 아이디어 및 제안

| 구분                             | 내용   |
|--------------------------------|--|
| 고등교육 재정지원<br>총괄 조사·분석 센터<br>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조사·분석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 고등교육 재정지원 총괄 조사·분석 센터’ 설치</li> <li>- (주요 기능) 중앙정부, 지자체가 대학에 투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조사·분석, 정보시스템 운영</li> </ul>  |
| 책무성 기반 공영형<br>사립대학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대학이 지역사회의 공적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에 대하여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 확대</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 공영형 사립대학의 공적 역할(예시) 》</b></p> <p><b>(지역사회 문제해결)</b>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등 인적자원 지원</p> <p><b>(지역주민 역량 강화)</b> 지역산업의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지역문제해결 역량 강화</p> <p><b>(공간·시설자원 제공)</b> 대학의 문화·여가공간(도서관·다목적홀·체육시설)을 지역에 개방하거나,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간(창업사무실 등) 제공</p> <p><b>(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개방)</b> 공영형 사립대학을 거점으로, 권역 내 사립대학과 네트워크 구축, 공동 연구·사업 수행, 교육과정 공유 등</p> <p><b>(지역경제 활성화)</b> 캠퍼스타운 조성, 대학의 지역물품구매 운동 등</p> </div> |

| 구분                                   | 내용   |
|--------------------------------------|--|
| 폐교대학 청산 지원 및<br>유휴 자원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교 교직원 재취업 및 연구활동 등 지원, 폐교자산 유지·관리, 폐교 기록물 관리 등을 위해「폐교대학종합관리사업(신규)」추진</li> <li>- 폐교대학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폐교 대학 구성원 재취업연수 지원, 학술인재 연구활동 지원, 법인자산 유지 및 청산 지원 등</li> <li>※ 교육부 장관이 법인 해산 명령 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 및 기록물 관리전담기관으로 지정(「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 개정(안) 계류 중)</li> </ul>  |
|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br>강화를 위한 자율혁신<br>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대학이 설립목적 및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산학협력에서 자율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li> <li>* '19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추진사업 주요내용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역사회 기여</b> : 지역 특화 인재양성, 지역현안 해결 등</li> <li>■ <b>고등교육 기회 보장</b> : 취약계층 지원, 장애학생 학습환경 개선 등</li> <li>■ <b>기초·보호학문 육성</b> : 연구자 및 학문후속세대 지원, 지역학 연구 등</li> <li>■ <b>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b> : 공동교육과정 운영, 협력강의, 교원교류 등</li> </ul> </div> </li> <li>○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초·보호학문을 육성하고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대학원 단계의 강점 연구 분야 지원</li> <li>○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간 협력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국립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개방·공유하도록 유도</li> </ul> |
| 국립대 교육·연구<br>혁신을 위한 인프라<br>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격교육, 가상현실(VR) 등 교육·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 및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 등 정보화 기반 확충</li> <li>○ 미래사회 대응 첨단·조정밀 분석 기자재를 확충하고,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안전장비 확충 등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li> <li>* 국립대 보유 기자재 중 11년 이상 된 노후 기자재가 전체의 44.4%에 해당</li> </ul>   |
| 융·복합형 인재 양성을<br>위한 유연한 학사제도<br>운영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컨설팅) 개선된 학사제도('16.12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현장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대학이 유연한 학사 조직(학부·학과)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제공</li> <li>- 융합전공 등 학사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하고 학사제도와 교육과정 연계 등 적용 방법론 컨설팅, 담당자 연수 등 역량개발 지원</li> </ul>  |
| 혁신 융합인재 양성<br>지원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대학의 학사조직 유연화, 미래 혁신 선도 산업 인력양성 수요 연계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등 교육혁신을 총체적으로 지원</li> <li>○ (방식) 100% 상향식으로 대학이 혁신·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형 전공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제안하면 심사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li> <li>* 미국의 FIPSE(Fund for the Improvement of Post-secondary Education), 학부·교육에 관심 있는 소규모 교수모임 또는 학부(과)가 혁신적 학부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상향식으로 제안</li> </ul>  |

| 구분                                  | 내용  |
|-------------------------------------|---|
|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br>확대 및 사회진출<br>다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역량이 높은 박사 후 연구자들에 대한 안정적 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유도하고, 학문후속세대 육성에 기여</li> <li>○ 인문사회 박사급 인력들이 강연, 출판, 융합 콘텐츠 등 사회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가칭)‘인문사회연구자지원센터’ 설립</li> <li>※ 사례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사업(’13~)’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운영 컨설팅 등 지원</li> <li>○ 학문후속세대가 지역 대학을 거점으로 대학 평생교육원, 지자체 공익시설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강좌 개설</li> </ul> |
| 건강하고 책임 있는<br>대학 연구윤리 확립<br>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연구윤리지원센터’ 설치로 연구윤리 교육 확대·강화 지원 및 연구윤리 상담·정보공유 활성화로 대학의 연구윤리 관리 역량 강화</li> <li>○ 대학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공개(매년) 및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에 연구윤리 항목 도입 검토(’21~) 등 대학의 책무성 확보방안 마련</li> <li>* 대학 내 연구윤리 제도·조직·예산, 연구윤리 교육 현황 및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처리 현황 등</li> </ul>  |
| 지역<br>교육·연구(R-HR&D)<br>혁신체제 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지자체 주도의 컨소시엄(지자체·대학·지역 산업체·연구기관 등)을 구성하여, 지역 전략산업 기반의 혁신체제*를 설계·운영하도록 지원</li> <li>* 교육·취업 중심의 인재양성,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중심의 R&amp;D 종합적 지원 포함</li> <li>○ (지원체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지원하되,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성공 모델 마련</li> </ul>   |
| 산학협력<br>거점으로서의<br>‘국가산학협력위원회’<br>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 산하 국가산학협력위원회 활성화로 각 부처 및 지자체 차원의 산학협력 정책분석·연계로 정책의 체계성·효과성 제고</li> <li>- ‘(가칭)산학협력지원센터’를 지정, 기존 정책추진상황의 체계적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등 효과적인 정책추진 뒷받침</li> </ul>   |

## V. 요약 및 제언

- 교육정책은 교육활동의 목표·수단·방법 등에 관한 최적의 대안을 의도적·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교육정책의 형성과정은 교육문제의 제기, 정부귀속과 교육정책 의제화, 교육정책의 목표 설정, 정책 대안의 탐색과 선택, 정책 대안의 심의 결정과 합법화단계를 거침. 교육정책의제 설정은 교육정책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성격을 지니며, 우선적인 정책의제로 선정된다면 다른 정책문제보다 좀 더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교육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관련 집단이나 개인이 참여하여 해결 가능성과 함께 집단 간의 갈등 가능성이 발생함.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인 참여자와 비공식적인 참여자가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당면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
- 2019년 2월에 교육부 장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에서 제안했던 고등교육정책 공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음. 교육부-대교협 공동 태스크포스(TF) 정부-대학-고등교육전문가 등이 정책결정의 공동 주체자가 되어 고등교육과 관련한 사회 문제화된 교육문제를 정부 귀속 및 정책의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함. 정부-대학-고등교육전문가 공동 태스크포스(TF)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정책 형성 및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실시함
- 교육부-대학 공동 TF 구성은 대교협 회장(위원장), 부회장, 사무총장, 대학관계자,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실장, 국장, 과장, 그리고 고등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교육부-대학 공동 TF 운영은 구체적인 분기별 보고회 운영계획과 논의 안건을 공유하고 토의하기로 함. 교육부-대학 공동 TF 회의 일정은 초반에는 약 2주마다 만나 고등교육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찾아 나가기로 함
- 공동 TF의 주요 안건은 대학의 평가부담 완화 방안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비롯한 재정 지원 현안, 각종 규제 완화임

- 교육부-대학 공동 TF는 2019년도에는 9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차수별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차 전체 회의 내용
    - 교육부와 대학의 공동 주체가 되어 제도와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진단하기 위해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2차 전체 회의 내용
    - 교육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신규 재정지업 사업 발굴(안)에 대해 교육부, 대학 관계자, 고등교육 전문 위원 등이 질의·응답과정을 통해 논의함
  - 3차 전체 회의 내용
    - 고등교육재정 투자 확대 방안으로는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대학 재정 문제의 현실을 설명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규모 확대를 통한 재정 확충을, 중장기적으로는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 재정 확보 방안을 제안함. 고등교육재정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함
    - 규제개선을 통한 간접적 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등록금 동결·인하, 교내장학금 유지·확충을 국가장학금 2유형의 수혜 조건으로 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안, 사립대학의 국가유공자 학비 면제분 국고 전액 보전 문제의 해결안, 사립대에 대한 세제 적용을 국립대와 동등하게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4차 전체 회의 내용
    - 대학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관인증평가 중심의 대학평가 일원화'의 필요성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3주기 기본역량진단과 기관평가인증을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함
    -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은 비용 절감 및 수익 창출 방안, 신규 재정지원사업 검토함
    -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차기 진단의 운영 연계를 위해 기관평가인증과 기본역량진단의 평가지표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함
    -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중·단기 과제를 설정함. 단기과제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사업비)의 규모 확대,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함. 중장기 과제로는 고등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법률(안), 고등교육재정을 OECD평균(GDP 대비 1.1%)에 해당하는 내국세의 8.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논의함
  - 5차 전체 회의 내용
    -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차기 진단의 운영 연계를 위해 평가방식,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함

- 일반재정지원사업 재정확충을 위하여 교육부와 대교협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6차 전체 회의 내용
  -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차기 진단의 운영 연계 방안은 교육부와 대교협은 논의를 통해 진전된 협의 성과를 도출하기로 함
  -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 조건 및 적용 산식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2유형 개선(안)을 대교협과 논의하여 진전된 성과를 도출하기로 함
  - 산학협력 규제 개선 건의안, 대학정원 관련 개선 건의안, 대학인사 관련 개선 건의안, 대학설립운영/시설 관련 개선 건의안 검토함
- 7차 전체 회의 내용
  - 교육부 소관 대학 평가 중 개선 필요 사항(지표 간소화 등)에 대한 대학의 의견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함
  - 기본역량진단의 개선 방안,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안함
  - 규제개선 건의 28과제 검토함
  - 미래대학 혁신과제로 디지털형 교육으로의 전환, 교원 충원 및 대학 목적별 특화, 대학운영의 자율성 및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제안함
- 8차 전체 회의 내용
  - 공동 TF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대학혁신방안으로는 기초학문 분야 및 실용학문 분야 육성 제안, 대학 간 연계 플랫폼 구축,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사후평가제도 도입, 다빈치형 인재양성,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사감사 지양에 대해 논의함
- 9차 전체 회의 내용
  - 대학 규제개선 22건 과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함. 산학협력 5건, 대학설립 운영/시설 10건, 대학 행·재정 제도 개선 3건, 대학정원 2건, 대학인사 2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 추가 발굴한 대학 규제개선 과제는 관련부처와 검토하여 협의하기로 함.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의 국회 및 대정부 건의, 정책제안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대학 혁신 장애요인으로 전공, 강사법, 교육플랫폼,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 등록금 등과 관련한 문제를 제시하고 논의함

□ 구체적인 공동TF 운영 성과는 다음과 같음



- 국가장학금 2유형 개선 및 사립대학 국가유공자 등록금 보전을 통하여 대학재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함
- 기본역량진단과 기관평가인증의 정량·정성 지표 연계 방안 마련하기로 함
- 50여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검토 결과, 조치완료 3건, 수용 19건, 일부수용 6건, 신중검토 20건, 현행유지 2건의 결과 도출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개선 필요성
  - 대학혁신지원사업비가 등록금 결손액을 보전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위하여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 작성 필요
  -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재정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1년 단위 평가는 폐지되어야 함
  - 기관평가인증의 결과와 정책지표, 특성화지표,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학혁신을 위한 규제 방안으로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초학문 분야 및 실용학문 분야 육성 제안
  - 거점 국립대는 기초학문 분야를 육성하고(무상교육), 사립대는 설립 목적 또는 특성화 방향에 따른 실용학문 분야(자율적 운영)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제안함
  - 거점 국립대가 기초학문분야를 집중육성하게 되면 대학의 정량지표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육성 정책과 대학평가와 연계되어야 함
- 대학 간 연계 플랫폼 구축
  - 대학 간 연계 플랫폼은 복수전공 학생들의 학사관리를 위한 좋은 대안임. 학생들의 수업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구축·운영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 대학 간 연계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대학 간 인력 교류 및 자원 공유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이 시급함
-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사후평가제도 도입
  - 학생 선발, 모집단위, 정원관리 등을 대학의 의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함
  - 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전평가에서 사후평가체계로 전환하고, 평가체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자율적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이월 집행을 보장해야함
- 다빈치형 인재양성,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사감사 지양

- 미래사회에서는 다방면에 뛰어난 다빈치형 인재양성이 지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형식주의, 실적주의 재정지원사업에서 탈피하여 교육적 본질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지향하는 재정지원사업이 수행되어야 함
- 학사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학사감사는 지양되어야 함
- 대학혁신 의견 수렴 필요
  - 미래교육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 필요

## 참고문헌

- 교육부, 대교협(2019). 고등교육정책 TF 1~9차 회의 자료집.
- 김병주 외(2019).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영철 외(2018). 고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국가교육회의
- 김영철(2019). 대학재정 관점에서 본 학자금 제도. 한국장학재단 창립10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 김운태(2000). 교육행정 경영 및 정책의 탐구. 동문사
- 대교협. 2019년 대학 규제개선 건의과제 추진 경과 및 현황
- 이균현(1987). 한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14(1), 229-244.
- 이성은(2018). 고등교육재정 및 대학재정 현황, 대교협 내부자료.
- 정일환(1996). 교육행정학 이론과 적용. 중앙적성출판사.
- \_\_\_\_\_(2000). 교육정책론-이론과 적용. 원미사.
- 최준렬(2002). 학교 교육정책 형성과정 이해. 지방교육경영, 7, 9-25.

## 부 록

### 부록 1. 규제개선 관련 근거자료

#### 가. 산학협력 규제개선 건의과제 세부내용

##### 1) 대학 내 산학협력 및 창업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관련 규정 개정

###### □ 규제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창업보육을 위해 부동산을 활용할 때에 지방세를 면제(또는 감면)해주고 있음(동법 제41조 제2항, 제60조 제3항 1호의2)
- 그런데 위 면제규정의 유효기간의 만료(각 2021.12.31., 2020.12.31.)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규정들의 면제(또는 감면) 기간을 연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함(영구적으로 면제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동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등’에 ‘산학협력단’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산학협력단을 학교와는 별도의 법인이라고 보는 데에서 비롯된 것임.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제41조 제2항의 ‘학교등’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함

######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제60조 제3항 1호의 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 건의 내용

### ○ 지방세 면제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 대학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서 더 나아가 기술 연구, 산학협력,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해나가는 것으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및 제60조 제3항 1호의2에서 ‘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활용하는 경우 지방세를 면제(또는 감면)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임
- 현 정부는 ‘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 아래 고교 무상교육 시행, 입학금의 점진적 폐지,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 교육 분야에서의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며 교육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해오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원보다는 지방세 과세 등 재정 부담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면서, 사립학교가 세수 확보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음
-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수익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와 같은 고정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새로운 투자를 축소하거나 기존 재산을 처분하는 등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받게 됨. 결국 대학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교육과 연구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감소시킴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와 등록금 인상 요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임. 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동법 제41조 제2항 및 제60조 제3항 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면제(또는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영구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일부 사립대학 교직원의 교비 부정사용 등의 문제가 부각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학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이러한 대학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시기임

### ○ 산학협력단을 ‘학교등’과 구별하는 것의 부당성

-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법률상 대학과 별도의 법인이라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학협력 및 기술 개발 등 대학이 해야 할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동법 제41조 제2항의 ‘학교등’에 대학뿐만 아니라 그 산하의 ‘산학협력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함
- 대학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고등교육을 수행해오

고 있음. 따라서 대학에 대해서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행정기관과는 다른 기준으로 지방세 부과 원칙을 수립 및 적용하여, 대학이 교육과 연구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함

- 현재 산학협력을 위해 대학 내에 기업이 입주하여 임대료를 내는 때에도 이는 최소한의 공간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에 그침. 오히려 이 경우는 해당기업과의 공동연구 진행, 특허기술의 이전, 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는 교육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함. 산학협력단의 활동을 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산학협력'의 본래의 의미를 오해하는 데서 기인한 것임
- 현재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과 학령인구의 감소로 존폐의 기로에 서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산학협력 활동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학 재정 악화 및 법인의 진출 부담만 초래하게 되고 이는 대학이 산학협력을 기피하는 풍조를 확산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동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의미는 학교의 역할과 전혀 무관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수익을 달성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
- 덧붙여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 연구 및 재정지원을 주관하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대학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줄 필요가 있음

#### □ 기대효과

- 대학의 연구, 산학협력, 창업지원 활동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임
- 지방세 면제(또는 감면)분을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재투자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제고됨

## 2) 기술이전 관련 규제 완화(통상실시 원칙 완화)

#### □ 규제 내용

- 우리나라는 국유·공공 IP에 대한 기술거래·사업화 시 통상실시 원칙, 국내 중소·중견기업 우선원칙, 참여기업 실시원칙 등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해외 주요국은 통상실시 원칙 규정이 없으며 공공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전용실시권 인정, 국내 중소·중견기업 우선원칙 등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함

<표 1> 주요국의 공공기술이전 관련 제도 현황 비교

| 구분              | 한국                                      | 미국                       | 일본 | EU |
|-----------------|---|--------------------------|----|----|
| 통상실시 원칙         | 예외적인 경우에만<br>전용실시, 양도 허용                | 없음                       | 없음 | 없음 |
| 국내기업<br>우선원칙    | 국내의 실시능력이<br>있는<br>중소·중견기업을<br>우선적으로 고려 | 독점적 실시계약 시,<br>국내생산의무 부여 | 없음 | 없음 |
| 중소·중견기업<br>우선원칙 |   | 독점적 실시계약 시,<br>소기업 우선    | 없음 | 없음 |

출처: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안), 2019.1.8. 3면.

□ 근거 법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기술이전법) 제24조 제5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 ⑤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제2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4. 11. 28., 2016. 7. 22.>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2015. 8. 24.>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건의 내용

- **(통상실시 원칙 완화)** 전용실시를 위한 절차 및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규정상 모호한 부분에 대한 기준 제시(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개정)
  - 공공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통상실시 우선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고 이후 전용실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2호)
  - 현행 규정상 모호한 부분(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3호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세부기준을 제시(지침 제정 등)
  - 또는, 공공기술의 특성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통상·전용실시를 전략적으로 선택·운용하는 방안으로 관련규정 전면 삭제하는 방안 검토(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관련 규정 삭제)
- **(중소·중견기업 우선원칙 완화)**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계약대상자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공동관리규정 상의 ‘국내 중소·중견기업 우선 고려’ 대상을 완화하는 단서 규정의 신설 검토 (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1항 개정)
  - 계약대상자의 국내 소재보다는 국내 실시 가능 여부로 해석할 수 있도록 국내 실시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제시



- 원칙적으로 계약대상자에 제한을 두지 않되,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중 소·중견기업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하는 방안 검토
- **(참여기업 우선실시 원칙의 완화)** 특정 기간 내에 참여기업이 공동관리규정 제21조 제2항 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자의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2항 개정)
- 기술이전법(제24조제5항)에서는, 공공기술 개발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소명 절차 없이) 1년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동관리규정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

### 3) 직무발명의 보상에 대한 과제제도 개선

#### □ 규제 내용

-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이전을 유인\*하기 위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연구 및 논의가 지속
  - \* 직무발명 보상이 기업의 특허가치 및 사업화 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일본기업 대상 선행연구 존재(Incentive Pay or Windfalls: Remuner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in Japan, Owan 외, 2010)
- 우리나라는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중 재직 중에 지급받는 부분은 ‘근로 소득’, 퇴직 후 지급받는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고, 기타소득 → 근로소득으로 전환 등 연구자의 과세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움직임
    - \*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 및 과도한 보상금 지급을 통한 조세회피 발생 등을 이유로 ‘17년 소득부터 ‘등록특허’에 한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 설정 (등록이전의 특허에 대한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불인정)
- 이에, 연구자들은 현행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연구의욕 및 혁신의지가 저하된다고 비판하고, **직무발명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복원하고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등 세제혜택 확대를 요청
  - 특히, 직무발명보상금(근로소득)이 기술자문(기타소득) 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여 연구자들이 기술이전에 소극적이 될 우려가 있음

□ 건의 내용

- (1안: 기타소득 전환) 공평과세 원칙 하에서 동일 성격의 직무발명 보상금(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의 과세가 바람직하므로 근로소득 → 기타소득으로 과세 변경 검토
- (2안: 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액 증액) 현행과 같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기업·대학 등의 발명의욕 고취 및 R&D 촉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 한도액에 대한 검토 및 조정 필요

#### 4) 연구기관에 연구비 환수금 1차적 납부책임 부과

□ 규제 내용

- 참여제한에 따른 연구비 환수금의 1차적 납부 책임이 대학 등 연구기관에 있음을 명시 ('19년 상반기 과학기술혁신본부 행정규칙)

|  |
|--|
| 제6절 사업비 환수 중 1. 환수 대상  |
| 사업비 환수는 협약 등에 근거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 단체, 기업 중 환수사유 발생에 귀책이 있는 기관, 단체, 기업에 부과함 |

-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1차 책임은 연구기관이 아닌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규정에 연구기관의 연구비 환수 책임 등을 명시할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책임)자가 책임을 연구기관에 전가할 공식적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음
- 혁신본부는 기관에서 선대납하고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는 입장이나, 경험 상 연구기관에서 대납한 후, 연구(책임)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쉽지 않음

□ 건의 내용

- 귀책사유에 따라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에 환수금을 부여하되, 연구(책임)자에게 1차적으로 환수금 납부 책임을 부과 후, 2차적으로 연구기관에 귀책을 묻는 것이 처리 절차상 명확함

#### 5) (가칭)연구개발비 밀당 제도 조속한 시행 요청

□ 건의 내용

- 단계 연구비 이내의 범위에서 이월 및 차년도 예산 당겨쓰기를 허용하여 연구개발비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

‘연구개발비 밀당 자금’ (가칭, 약2백억원 규모)을 마련하고 연구개발비를 자유롭게 당겨 쓸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장비를 사고 싶으나 연구비가 제한되어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비 밀당 자금 제도를 통해 미리 연구계획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과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한 제도 시행을 요청함

## 나. 대학설립운영/시설 규제개선 건의과제 세부내용

### 1) 분리된 교지에 대한 규제 완화

#### □ 규제 내용

- 기존 교지와외의 거리가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교지의 경우 그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단일 교지로 인정하지 않음. 기숙사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단일 교지로 인정해주고 있음

#### □ 근거 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교지) ① 대학은 별표 4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기준면적을 충족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1. 교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 경계선(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 ④ 대학이 기존의 교지 밖에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학생 주거용 시설의 부지는 기존의 교지(기존의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주거용 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2. 15., 2019. 4. 2.>

○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2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2] <개정 2019. 4. 2.>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 제1항 관련)

| 교 사 시 설   | 구 분  |                   |   |
|---|--|-------------------|---|
| 교육기본시설  |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체육관(체육관으로 병용되는 형태의 강당을 포함한다)·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br>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br>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                   |   |
| 지 원 시 설   | 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                   |   |
| 연 구 시 설   |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                   |   |
| 부 속 시 설   | 공통   |                   |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
|   | 농학계열   | 농학에 관한 학과         | 농장·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
|   |  | 축산학에 관한 학과        |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
|   |  | 임학에 관한 학과         | 학술림·임산가공장   |
|   | 공학계열   | 공학에 관한 학과         | 공 장   |
|   |  | 항공학에 관한 학과        | 항공기·격납고   |
|   | 수산·해양계열  | 어로학·항해학에 관한 학과    | 실습선   |
|   |  | 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      | 수산가공장   |
|   |  | 증식학에 관한 학과        |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
|   |  | 기관학에 관한 학과        | 기관공장  |
|   | 약학계열   | 약학에 관한 학과         | 약초원·실습약국  |
|   |  | 제약학에 관한 학과        | 제약실습공장  |
|   | 의학계열   | 의학·한의학·치의학에 관한 학과 | 부속병원  |
|   |  | 수의학과              | 동물병원  |
| 비 고 : 대학 또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                   |   |

#### □ 건의 내용

- 각 대학에서 기존 교지(교사 포함, 이하 같음)가 부족해서 그와 분리되어 있는 교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각각에 수용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교지기준면적(교사기준면적 포함, 이하 같음)을 확보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하지만 “교지 경계선(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는 위의 규정의 예외사항에 해당됨
- 기존 교지와 의 거리가 2킬로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기존 교지로는 교육과 연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새로운 교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함
  - 한편, 학생기숙사는 학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단일 교지로 인정되는바, “학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를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나중에 학생정원이 대폭 감축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교지의 처분이 어려워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학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라는 기존의 조건을 폐지하여 모든 학생기숙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단일 교지로 인정해주어야 함
  - 또한 기존 교지에서 분리하여 설치할 필요성이라는 것은 학생기숙사의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각 대학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 점에서 실험실습실 등 기숙사가 아닌 다른 교사시설에 대해서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단일 교지로 인정해야함

#### □ 기대효과

- 기존 교지가 협소하여 더 이상 교육시설을 확충할 수 없는 대학들이 동일 지역 또는 권역 내에서 교지를 추가 확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폭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2) 교육시설 확보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교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조정

#### □ 규제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교육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할지라도 교육시설 구축 및 행정 처리 등에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면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

- 동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매입한 토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준비기간 동안에는 취득세를 면제해줌. 단, 준비기간이 3년을 경과한다면 이는 과세 범위에 해당됨

####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2. 31.,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 □ 건의 내용

-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용으로서의 사용여부를 판단해서 면제하거나 부과하고 있음. 교지를 매입하더라도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임을 인정하여 취득세를 면제해주면서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와도 상치되는 것임. 따라서 교육용 토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지가 협소한 대학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사 신축 등 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건축허가 등 절차상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조항은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대학이 토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면제되어야 함

□ 기대효과

- 교육용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완화되면 학교가 부족한 교지를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이 절감되어 적극적으로 교지를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이는 세금으로 부과되는 비용을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시설 증설에 큰 도움이 됨

3)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을 임대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규제 내용

- 복사실, 식당, 편의점 등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을 위탁 운영 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됨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2. 31.,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 건의 내용

- 복사실, 식당, 편의점 등의 후생복지시설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편의를 위해 필수적임. 후생복지시설을 직영할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이 많이 발생되어 경상비의 지출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음
- 과세관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사실, 식당, 편의점 등의 후생복지시설을 위탁 운영 할 경우 위탁운영보증금 및 위탁 운영료를 취득한다고 하여 교육사업의 직접 사용이 아닌 수익사업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복사실, 식당, 편의점 등의 후생복지시설은 교육사업의 본질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할 수 없으며, 수익성이 있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면제되어야 함

□ 기대효과

-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면 반값 등록금 실현에 기여하게 되고 등록금 인상요인이 줄어들어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 이는 지속적인 교육 투자 확대에 이어질 수 있음

**4) 학교 구내의 후생복지시설 설치시 용도변경절차 면제**

□ 규제 내용

- 후생복지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해서 운영할 때,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해서, 교사(校舎)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등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음

□ 근거 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①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별표 2] <개정 2019. 4. 2.>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관련)

| 교 사 시 설 | 구 분  |                       |   |
|---------|--|-----------------------|---|
| 교육기본시설  | 강의실 · 실험실습실 · 교수연구실 · 행정실 · 도서관 · 학생회관 · 체육관(체육관으로 병용되는 형태의 강당을 포함한다) · 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br>1. 열람실 · 정기간행물실 · 참고도서열람실 · 서고 및 사무실<br>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                       |   |
| 지 원 시 설 | 강당 · 전자계산소 · 실습공장 ·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                       |   |
| 연 구 시 설 | 연구용 실험실 · 대학원 연구실 · 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                       |   |
| 부 속 시 설 | 공통   |                       | 박물관, 교수 · 직원 · 대학원생 · 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
|         | 농학계열   | 농학에 관한 학과             | 농장 · 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
|         |  | 축산학에 관한 학과            |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
|         |  | 임학에 관한 학과             | 학술림 · 임산가공장   |
|         | 공학계열   | 공학에 관한 학과             | 공 장   |
|         |  | 항공학에 관한 학과            | 항공기 · 격납고   |
|         | 수산 · 해양<br>계열  | 어로학 · 항해학에 관한 학과      | 실습선   |
|         |  | 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          | 수산가공장   |
|         |  | 증식학에 관한 학과            |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
|         |  | 기관학에 관한 학과            | 기관공장  |
|         | 약학계열   | 약학에 관한 학과             | 약초원 · 실습약국  |
|         |  | 제약학에 관한 학과            | 제약실습공장  |
|         | 의학계열   | 의학 · 한의학 · 치의학에 관한 학과 | 부속병원  |
|         |  | 수의학과                  | 동물병원  |

비 고 : 대학 또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 건의 내용

- 음식점, 문구점, 판매점 등과 같은 후생복지시설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대시설로서, 교육사업을 위해서는 그 설치와 운영이 필수적임. 이러한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원만한 설치와 운영이 어려움
- 교사(校舍)에 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교육법령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는 만큼, 후생복지시설은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만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절차는 면제해야 함

□ 기대효과

- 교사(校舍)를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후생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어 학생들과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5) 교육재정 수익 창출을 위하여 학교 교내에서 자사광고 이외의 옥외광고 허용

### □ 규제 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거지역에 위치하거나 학교의 경우에는 자사광고 이외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특히 옥상간판의 경우에는 4층 이하 16층 이상의 특별시 소재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음

### □ 근거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1. 3. 29.]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4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9. 4. 30.>

1.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다. 나무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

가.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3.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미터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다.

가.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나.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다. 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라. 군(시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가.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로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나. 제3호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2) 간판의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하일 것

3)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4)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라.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른 공장 및 그 부속건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제외한다)로서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제외한다.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2017. 12. 29.>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자.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차.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타.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2.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 기둥  
 라. 가로수  
 마. 동상 및 기념비  
 바.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사.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아. 전망대 및 전망탑  
 자. 담장(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차. 재배 중인 농작물  
 카.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6.>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 다.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 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7.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 나.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표시방법은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 10. 10.]  
 [제10조에서 이동 <2011. 10. 10.>]

□ 건의 내용

- 반값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대학 입학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이 시점에서 대학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교육재정 수입 확대가 당면 과제가 되고 있음. 교육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여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옥외 광고물 설치임
-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에 위치하거나 학교의 경우에는 자사광고 이외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특히 옥상간판의 경우에는 4층 이하 16층 이상의 특별시 소재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음
- 광고물(특히 옥상간판) 설치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재정 수입 증대를 할 수 있는 여러 사업 중에 하나임. 따라서 주거지역 및 학교를 광고물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에서 예외로 하고, 옥상간판의 경우 층수 제한없이 특별시 소재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함

□ 기대효과

- 교육재정 수입 확대로 인하여 반값 등록금 실현에 기여하고, 교육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임

6) 학교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 규제 내용

- 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별한 규율이 따로 없어서 학교가 속해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라 그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이 정해짐. 따라서 같은 성격의 학교라도 그 학교가 속해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인가에 따라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이 서로 다름

□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자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
| <p>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p> <p>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p> <p>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p> <p>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p> <p>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p> <p>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p> <p>3. 농림지역</p> <p>4. 자연환경보전지역</p> <p>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lt;개정 2011. 4. 14., 2013. 3. 23.&gt;</p> <p>[전문개정 2009. 2. 6.]</p> |
|--|

#### □ 건의 내용

- 학교는 넓은 면적을 가지는 복합시설인 점에서 그에 인접한 개별 건축물(주택, 상가)과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는 그 공익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교육부에서 소관부서(국토교통부 등)에 업무협의를 요청하여 학교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 기대효과

- 건폐율,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면 그만큼 교육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7) 교사에 대한 주차장 확보율 규제 완화

#### □ 규제 내용

- 교사를 신축할 경우에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 구체적으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교사 중에서 ‘학생용 기숙사’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400㎡당 부설주차장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나머지 교사에 대해서는 300㎡당 부설주차장 1대를 설치하여야 함. 특히 「서울특별시 주차

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제20조 제1항 [별표2]에서 ‘학생용 기숙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에 대해 200㎡당 부설주차장 1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거 법령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10. 21.]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 <p>「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 &lt;개정 2019. 3. 12.&gt;</p> <p>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p> |                            |
|---|----------------------------|
|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 9. 학생용 기숙사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 10. 그 밖의 건축물  |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비고>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 제1항 별표2

| <p>「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개정 2013.10.4)</p> <p>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p> |   |
|--|---|
| 시설물  | 설치기준  |
| 9. 그 밖의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li> <li>◦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 당 1대</li> </ul> |

<비고> 10. ‘대학생기숙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주거를 위해 대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 건의 내용

- 「주차장법시행령」은 제6조 제1항 [별표1]에서 교사 중 ‘학생용 기숙사’에 한하여 400㎡당 부설주차장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교사에 대해서 400㎡당 부설주차장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함

□ 기대효과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완화되면 불필요한 부설주차장 신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공간을 교육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 범위 확대

### □ 규제 내용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특별히 적용되어, 교사(校舍)의 신축이나 개축에 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어 있음
- 이와 달리 대학교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아, 교사의 신축이나 개축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음

### □ 근거 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塋地)·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치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독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에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감독청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고 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 그 시행지 안에 제10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으면 그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감독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마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이하생략

#### □ 건의 내용

- 현재는 대학교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은 다음에 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 최근 자치단체장이 일부 주민의 터무니없는 반대민원(예: 캠퍼스 인근 하숙집 주민들의 기숙사 신축 반대)이 있음을 이유로 부당하게 교사의 신축·개축 허가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규제권한을 자치단체장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이전하여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 기대효과

- 만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적용된다면 교육부장관이 시설계획 승인을 하고 그에 이어 건축 승인만 하면 대학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므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대학교에서 교육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9) 교사(校舍)에 대한 안전점검 규제 완화

#### □ 규제 내용

- 현재 교사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유지관리점검’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제6조) 및 ‘정밀안전진단’(제7조)이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건축법」상 점검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점검은 일부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질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를 달리하여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근거 법령

- 건축법 제35조 : 2020년 삭제됨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7.>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7., 2016. 2. 3.>

제35조 삭제 <2019. 4. 30.>[시행일 : 2020. 5. 1.] 제35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⑤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거나 제출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현황을 확인한 후 시설물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시설물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그 밖에 시설물관리계획의 관리주체별 수립시기·내용 등 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 □ 건의 내용

- 하나의 대학 캠퍼스가 다수의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 보편적인 오늘날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점검을 받게 하는 것은 학교 인력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등록금으로 유지되는 학교 재정에도 중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음
- 다수의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는 대학 캠퍼스의 경우, 서로 다른 2개의 점검 제도를 1개의 특수한 점검 제도로 통합하여 규제를 간소화하고 감독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교육부로 이전함으로써 교육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점검에 내실을 기해야함

□ 기대효과

-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점검이 시기를 달리해서 중복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학교 행정의 인력과 재정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
- 교육부에서 교육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점검의 횟수는 줄어 들겠지만 오히려 내실 있게 점검을 할 수 있음

## 10)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범위 확대

□ 규제 내용

- 대학구조개혁 정원감축 등으로 교육용 기본재산 중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시설의 관리비용 등을 교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근거 법령

-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 제29조 제2항, 제6항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①학교법인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3.>

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1., 2011. 7. 25., 2013. 1. 23.> ③ ~ ⑤ <생략>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13. 12. 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건의 내용

- 연수시설로 활용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은 추가적인 관리 비용 등이 발생하여 교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임대계약을 통해 수익금은 전액 교비로 세입 조치하는 조건의 임대허용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을 추진할 경우 일반적으로 매각 여부 및 시기 등이 불분명하므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종전은“구성원 후생복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정원 감축 등으로 유휴 미활용 교육용 기본재산 증가에 대한 관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어 동 재산의 임대 제한 부분을 해소하여 교비수익을 높일 수 있음

#### □ 기대효과

- 대학설립운영규정 교사시설 구분에 부속시설로 되어 교사확보율에 포함되지 않는 유휴 시설인 경우 위·수탁 운영계약을 맺어 홍보 및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대학등록금 인상이 없는 대학의 재정운영에 교비수익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

### 다. 대학행·재정 제도개선

#### 1) 학교회계의 예산 및 결산 절차 개선

##### □ 규제 내용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원래 등록금 책정을 심의할 목적에서 설치된 기구이며, 이에 대해 「고등교육법」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교법인 이사회가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함
-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회계의 예산과 결산에 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반드시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사·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근거 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31조 제3항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 건의 내용

-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이 없으면 학교법인 이사회가 학교회계의 예산과 결산에 관하여 심사·의결을 할 수가 없음. 이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등록금 책정 심의라는 원래의 설치 목적을 넘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임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맞게 등록금 책정의 심의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고, 학교회계의 예산과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처럼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면 충분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관여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은 어디까지나 자문에 그쳐야 함
- 학교회계에서 등록금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나 학교회계는 엄연히 등록금 재원의 등록금회계와 등록금 외 재원의 비등록금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그 예산과 결산에 관하여 심사·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면 대학의 정당한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불필요한 학내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축 중 하나는 학생 대표인데, 대학에서 학생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이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 운영자가 아니기에 대학의 운영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학생 대표에게 학교회계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심사·의결 권한까지 부여하는 현행 제도는 향후 정상적인 대학 운영에 본질적인 장애가 될 것임

#### □ 기대효과

- 대학 운영에 관한 잘못된 절차를 시정함으로써,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원래의 설치 목적인 등록금 책정의 심의에 충실할 수 있게 함. 또한 학교법인 이사회는 대학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학교회계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음

## 2) 학교법인의 전용계좌 사용의무 면제

#### □ 규제 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 등이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를 개설, 사용하도록 함



-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가령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등의 가산세를 부과함

#### □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또는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으로서 본문에 따라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 □ 건의 내용

- 전용계좌 사용의무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나, 학교법인의 경우에 '회계투명성'은 이미 다른 규제(사립학교법·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특례규칙 및 관할청의 지침 등)에 의하여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임

- 예를 들어, X 학교법인은 전용계좌의 개설을 최초로 신고할 때 300건 정도의 계좌명세를 작성하고 여기에 해당 은행계좌 사본 300부를 첨부하여 신고했는데, 그 이후에도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새로 개설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여 매월 약 30~50건의 계좌명세를 작성하고 여기에 해당 은행 계좌 사본을 일일이 첨부하여 변경·추가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이러한 어려움은 학교법인의 대부분이 공통으로 겪는 것인데, 이에 반해 종교법인의 경우에는 전용계좌의 개설의무가 면제되는바, 형평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음

#### □ 기대효과

- 많은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종교법인과 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 3) 이동수업 운영기준 규제 완화

#### □ 규제 내용

- 현황
  -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도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수목적기금(폐특기금 약 1,200억)을 투자하여, '09년 도계읍에 조성
  -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재학생 2,522명('18.4.1.기준) 중 1,938명(76.8%)은 읍내 생활관 또는 자가 거주\*로 통학 실시
    - ※ 도계캠퍼스와 도계읍 간 거리 : 약 8.8Km / 도계캠퍼스 최고해발고도 : 890m
    - \* 캠퍼스 외부 거주 현황 : 읍내 생활관(2개동) 54.5%, 기타(자취, 통학 등) 22.3%
- 문제점

- 폭설과 캠퍼스 입지여건이 맞물려 학사일정 차질 발생
- 2020년 도계읍내에 복합교육연구관을 개관할 예정이나 이동수업 관련 규정 미비

- 강원도 영동지역 특유의 폭설이 3월에도 지속되는 경우, 캠퍼스 외부 거주 학생들이 등하교 시 안전사고 등 문제로 휴교 사례 지속 발생
- 따라서 학생 등하교 안전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계읍내에 복합교육연구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20년 3월부터 활용 예정
- 그러나, 도계캠퍼스가 아닌 도계읍내에서 정규 교과목 등 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미비\*\*
  - \* 삼척시에서 기금 등 재원 마련을 통해 연면적 2,000㎡, 3층 규모의 복합교육연구관을 신축 진행 중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관련 ‘이동수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이동수업 대상은 특정 직군의 학생(군인, 국가대표 등)이며, 학위과정 또한 체육계열 학사학위, 전문·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등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도계읍내 복합교육연구관에서의 이동수업 근거 마련 필요

#### □ 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제2항

#####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①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8. 5. 28.]

- 교육부 자료, 이동수업 운영기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관련 이동수업 운영기준(2018.7.기준)

##### ❖ 이동수업 기본원칙

-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역이나 직장 위치 등 문제로 대학 통학이 어려운 특정직군 학습자의 학업 계속을 위한 경우에 제한적 허용
  - 주말 수업이나 집중이수제 등을 활용해 학습기회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학 소재지에서 수업 실시가 원칙
- 설립·인가된 대학 소재지에서의 수업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점을 고려, 이동수업은 한시적·제한적 범위에서 허용
  - 대학 소재지의 강의실 부족이나 일반학생의 통학 편의 등 목적으로 이동수업 실시 불가
- 학습 희망자 근무지 등의 인근에 통학 가능한 대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에서의 이동수업 불가

##### ❖ 이동수업 대상(요약)

- 이동수업 대상은 특정 직군의 학생(군인·경찰 등, 국가대표 선수 등)이며, 학위과정 또한 체육계열 학사학위, 전문·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등에 일부 허용

□ 건의 내용

- 학생 이동수업 실시 근거 마련
  - 지리적 특성에 따른 캠퍼스 여건을 감안하여 이동수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라. 대학정원(학생)

1) 신입학 등록 포기 및 환불 신청에 관한 제도 개선

□ 규제 내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합격 통보 마감일 이후에도 합격자의 환불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추가합격 통보 마감일 이후에 예비합격자가 등록 포기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대학은 모집인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상태로 입학 전형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됨
- 결국, 추가합격 통보 마감일 이후에 미충원 인원이 발생함에 따라 ①‘해당 대학에 입학할 희망했던 수험생은 그 기회를 빼앗기고’, ②‘해당 대학은 인적 재원의 손실로 인해 대학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됨
- 대학입학전형 시 최초 합격자와 추가 합격자 모두 추가합격 통보 마감일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에는 매년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또한 미충원 인원의 경우 차차년도로 이월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연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만 모집이 가능하도록 제한함. 이는 수험생에게는 기회 박탈로, 대학에게는 인적재원의 감소로 이어지게 됨

□ 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제34조의5

**[고등교육법 34조의 5]**

-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

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1.]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4. 23.>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약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약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약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본조신설 2014. 1. 1.]

[시행일 : 2019. 10. 24.] 제34조의5

#### ○ 「고등교육법시행령」제32조, 제42조

##### 고등교육시행령 32조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약체(이하 "학교협약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약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7. 31.>
  1.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학교협약체는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약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학교협약체는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

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9.]

#### 고등교육시행령 42조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①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28., 2002. 5. 27., 2008. 6. 11.>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 6. 11.>

③ 제1항에 따라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 6. 11.>

④ 제1항에 따른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2조의2에서 같다)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 IV. ○○○○학년도 대학입학전형

##### 3. ○○○○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세부사항

###### 마. 등록

- 수시모집 등록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시모집 등록 -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 등록금 환불

- 등록 포기(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 포기를 표시한 경우) 등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함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0. 12. 2.]

[별표] <개정 2010.12.2>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교육부고시 제2017-134호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32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71조의2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 1~3호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에 적용(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한다.

②본 고시는 신입생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편입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적용 절차) ①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종료 이후에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신청 및 초과모집 인원 현황을 제출받아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또는 초과모집에 따른 감축조치를 받은 대학은 차차년도 신입생 모집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기준) ①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국공립대학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 이내로 한다.

2.사립대학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 이내로 한다.

②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의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정원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동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정원외 입학정원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폐과 및 다른 모집단위로의 미충원 인원 이월은 불가하며 다수 모집단위(학교 및 전공 등)의 통합 및 단일 모집단위(학부 등) 분리의 경우에는 미충원 인원 이월이 가능하다.

④승인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인정하며,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건의 내용

- 대학과 입시가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학생들의 진로와 향후 경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학문에 정진할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도록 입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함
- 따라서 ①추가합격 마감 시점과 환불 마감 시점을 일치시키거나, ②최초 합격자에 한해서는 환불 마감 시한을 추가합격 통보 시작 시점 이전으로 함으로써 미등록 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함. 또한 미충원 인원 ‘전원’을 차차년도에 모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진학 기회를 넓혀주어야 함

□ 기대효과

- 대학의 미충원 인원 발생에 따른 수험생 대학 진학 기회 감소 최소화하고,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관련 대학의 업무가 경감됨
- 미충원 인원의 차차년도 이월 허용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수험생의 진학 기회가 확대되고, 대학의 인적 재원 확보가 용이해짐

2) 편입학여석 산출시 4대 요건 확보율 산정방법 개선

□ 규제 내용

- 편입학 여석 산출시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의 편입여석 산출 방법이 다름<sup>1)</sup>
  - 여석산정 방법

- (전년도 1, 2학년 총 결손인원×4대 요건 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  
+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인원

- 4대 요건 확보율 산정방법

- 국·공립대: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으므로 3대 요건 확보율을 적용  
⇒ (교지확보율 + 교사확보율 + 교원확보율) × 0.33
- 사립대: 4대 요건 확보율 적용  
⇒ (교지확보율 + 교사확보율 + 교원확보율 +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 0.25  
※ 4대 요건 확보율 중 100% 이상인 요건은 100%까지만 인정

- 국·공립대학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이 4대 요건에서 제외되나 사립대학의 경우 국·공립과 달리 법인지표인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이 포함되어 있어 편입여석 산출시 불이익이 있음

1) 교육부(2017. 11.) “2018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 「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의 경우 대학법인이 대학을 설립한 후 재정적으로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표이나, 현실적으로 대학법인이 수익용기 본재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할 방법이 없음 이로 인해 중도 탈락발생 시 편입생 충원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이는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져 대학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됨
- 이로 인해 중도 탈락발생 시 편입생 충원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이는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져 대학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됨

#### □ 근거 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및 8조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10. 25., 2011. 6. 27., 2015. 7. 24., 2017. 4. 11.>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00억원
2. 전문대학 200억원
3. 대학원대학 100억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0. 25.>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1.>

④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가장 가까운 감정평가 기준일(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한정한다)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그 가액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 6. 1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 건의 내용

- 편입학 여석 산출 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편입여석 산출 지표를 국·공립과 같은 3대 지표만으로 산출하도록 개정 요청

| 구분     | 개선전(4대 기준)                             | 개선 후 (3대 기준)                |
|--------|--|-----------------------------|
| 국·공립대학 | (교지확보율+교사확보율+교원확보율)× 0.33              | (교지확보율+교사확보율+교원 확보율) × 0.33 |
| 사립대학   | (교지확보율+교사확보율+교원확보율+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 0.25 |                             |

마. 대학인사(교직원)

1) 대학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법령 개정

□ 규제 내용

- 현재 대학 교원은“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이외에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산업체와의 활발한 교류가 어려움

□ 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제15조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 7. 21.]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3. 14., 2011. 7. 21.,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본조신설 2002. 12. 5.]

□ 건의 내용

-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된 교수들이 보다 활발한 산업체와의 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에 대해서도 겸직을 허가해야 함
- 현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바, 이 조항들을 통합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에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에 대해서도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함

□ 기대효과

-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된 교수들이 활발하게 산업체 연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써 산학연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2) 근로기준법상 주12시간 연장근로 특례업종에 대학(입시업무) 산업 요청**

□ 규제 내용

- 대학에서는 정상적인 고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기 중 주말(토, 일)에 입시 전형 및 박람회, 입시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만일,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주중에 입시전형 및 박람회 등을

진행하게 될 경우 고교교육 정상화 및 고3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충돌할 소지가 있음. 또한 주말에 입시 전형 및 박람회 등이 진행된다면 근로기준법상 3개월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더라도 전형 준비, 진행 및 입시정보 제공을 위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填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 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의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시행일 : 2018. 7. 1.] 제59조  
 [시행일 : 2018. 9. 1.] 제59조제2항

□ 건의 내용

-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교육 서비스업(고등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입학 업무에 대한 주 12시간 초과 근로 근거 규정 마련

□ 기대효과

- 고교교육 정상화 및 고3학생의 학습권 보장, 원활한 입시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해 학기 중에는 현행과 같이 주말에 입시 전형 및 박람회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제한)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부록 2. 대학혁신 장애요인 및 혁신안

| 1   | 제안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무처장 전종섭 |
|---|-----|-------------------|
| <p>□ 혁신 장애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내부의 과도한 학과/전공 지키기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관계자들에게 ‘대학혁신 장애요인’을 찾으라 하면 교육 정책이나 법령 등 외부 요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대학 사회 내부의 과도한 학과/전공 지키기가 대학의 변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 요인이라 판단됨</li> </ul> </li> </ul> <p>□ 제안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내부의 과도한 학과/전공 지키기는 ‘기초 학문이나(실용성이 떨어지는) 순수 학문 보호’,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계승할 학문 후속세대 보호’, ‘대학의 존재 가치에 대한 (고전적) 믿음’ 등을 명분으로 지탱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학 혁신과 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과 간 탄력적 정원 운영 어려움</li> <li>- 학과/전공 내 융복합 교과목의 개설과 운영 어려움</li> <li>- 교양대학 이수학점의 경직된 운영으로 학생의 자율적 수업 선택권 침해</li> <li>-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을 획일적인 가치 속에 가두는 문제</li> <li>- 혁신 분야의 교수 채용이 어려움</li> </ul> </li> </ul> <p>□ 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내부의 과도한 학과/전공 지키기는 단순히 ‘그러지 말라고 권고’하거나 ‘대학의 존재 가치에 대한 끝장토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가 대학 혁신의 심각한 장애요인이라면 결국 정책적으로 풀어 가야할 필요가 있음</li> <li>○ 고등교육정책 제안: 아래 제안은 대학 입장에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될 소지가 크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내부에 존재하는 대학 혁신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개입으로 생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자율 설계 전공을 ‘제 1 전공’으로 (부분적) 확대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는 학생 자율 설계 전공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도 많지 않으며, 시행하더라도 이중전공/부전공 영역에서만 허락하고 있음</li> </ul> </li> <li>- 교수의 다중 소속 적극 권장: 미국의 경우 교수의 다중 소속은 ‘오래된 대학 문화’로 보임</li> <li>- 각종 대학 평가에서 다음 사항을 중요 지표로 활용: 학과 간 탄력적 정원 운영;</li> </ul> </li> </ul> |     |                   |

|   |
|---|
| <p>학과/전공 내 융복합 또는 특이 교과목 개설 현황; '제 1 전공 이수 학점'을 학생의 소속 학과 외부에서 이수하는 비율; 전통적 영역의 교수 충원을 혁신 분야 교수 임용으로 대체하는 현황; 교양 학점 이수에서 학생들의 수업 선택 자유도 등</p> <p>○ 이상과 관련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첨언:</p> <p>- 적어도 대학에 교부된 혁신지원사업비는 3~4년 단위의 중장기 평가 시스템 속에서 '대학 혁신'에 '제대로' 사용했는가를 정성적으로 면밀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짧은 시간에 총액에 맞추어 급조한 사업 계획서에 발목이 잡혀 이후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내도 '기존 계획서'의 틀 속에서 실행할 여유조차 없는 경직성을 풀어주셔야 함</p> |
|---|

| 2   | 제안교 | 대구가톨릭대학교 |
|---|-----|----------|
| <p><input type="checkbox"/> 혁신 장애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사법의 무리한 시행</li> </ul> <p><input type="checkbox"/> 제안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개정 후 시행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 부족으로 대학 현장 혼란 초래</li> <li>○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1년 미만 임용 허용 조건이 너무 제한적</li> <li>○ 비전임교원까지 공개채용 적용은 대학 자율 침해</li> <li>○ 강사법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지 전에 평가 관련 지표에 강사 채용 인원을 적용</li> </ul> <p><input type="checkbox"/> 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사법 적용에 대한 대학 현장과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 해결</li> <li>○ 강사와 역할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 겸임교원 제도를 정비하고 교원확보율에 강사를 포함</li> <li>○ 전문경력인사초빙사업(한국연구재단) 등 개인 자격으로 각종 사업에 선정되거나,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특정 기업과의 협약체결로 임용이 필요한 비전임교원의 경우는 공개채용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법령 또는 매뉴얼에 추가</li> </ul> |     |          |

| 3  | 제안교 | 영산대학교 |
|--|-----|-------|
| <p><input type="checkbox"/> 혁신 장애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 플랫폼에서 온라인 중심의 교육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법령에 문제가 있음</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용 수익용 기본재산, 교사, 교수 등의 확보 규제</li> <li>- 온라인 수업비율 제한 (현재 원격 수업 20% 이내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네르바스쿨은 온라인 기반 교육 플랫폼임</li> </ul> </li> <li>○ 지방대학이 서울지역 학습센터 개설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함</li> </ul> <p>□ 제안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대학은 대학 교육의 질보다는 지리적인 입지가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서울, 수도권 학생 편중 심화</li> </ul> </li> <li>○ 지방 인구 격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진행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 학령인구의 부족으로 대학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학생확보 불가능</li> </ul> </li> </ul> <p>□ 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 플랫폼에서 온라인 중심의 교육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를 철폐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격 수업 비율 제한 폐지</li> </ul> </li> <li>○ 일부 규제완화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지역 학습센터 개설 완화를 통하여 서울에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확보방안 마련</li> <li>* 1~2학년은 본교, 3~4학년은 서울지역 학습센터에서 수강 가능</li> </ul> </li> </ul> |
|--|

| 4  | 제안교 | 전북대학교 |
|--|-----|-------|
| <p>□ 혁신 장애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국립학교 설치령의 국립대학의 하부조직 설치범위*는 대학의 규모 및 역할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는 국립대학에 둘 수 있는 처·실, 처·실·국 및 부속시설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를 정함</li> </ul> </li> <li>○ 대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처·실·국 및 과·담당관의 수를 대학 규모 및 역할에 따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령 :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li> </ul> </li> </ul> <p>□ 제안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부족으로 국립대와 사립대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립대학의 하부조직 설치 범위를 시대에 맞도록 개선하여 동등한 경쟁 유도</li> </ul> |     |       |



- 비슷한 규모의 처·실·국 수를 가진 국립대학 간 비교를 보면 재학생 및 전임교원의 수가 최고 3배 이상 차이 발생

(2018.4.1. 기준)

| 학교명   | 재학생 수  | 전임교원 수 | 처·실 |    | 과·담당관 |    |
|-------|--------|--------|-----|----|-------|----|
|       |        |        | 현재  | 환산 | 현재    | 환산 |
| 전북대학교 | 18,046 | 1,052  | 3   | 6  | 11    | 12 |
| 전남대학교 | 19,657 | 1,259  | 4   | 7  | 16    | 14 |
| 제주대학교 | 10,244 | 638    | 3   | 3  | 11    | 7  |
| 안동대학교 | 6,130  | 276    | 3   | 2  | 10    | 4  |
| 순천대학교 | 7,007  | 323    | 3   | 2  | 10    | 5  |

※ (재학생 수에 따른 환산 방법) 재학생 수 기준으로 하부조직의 설치범위를 정하는 경우, 재학생 3,000명당 처·실 1개, 과·담당관 2개로 환산, 다만 중·소규모 대학 및 대학 통합 등을 이유로 캠퍼스가 다수인 경우는 대학의 규모와 역할에 따라 별도 예외 기준 마련 필요

#### □ 개선 방안

- 국립대학의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제 국립대학 규모와 역할에 맞는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행정 현장에서의 하부조직 운영 상 불법적 요소 제거
  - 국립대학의 재학생 수 또는 전임교원 수 등 대학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표에 따라 하부조직 설치범위를 개정
  - 대학 규모를 반영하여 설치범위를 정하더라도 대학 특성 및 발전계획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절차\*를 거쳐 조직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성 확대

※ 2017~2018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다수 대학이 하부조직 수를 따르지 않아 지적 받은바 있음

\* 교육부 검토 및 위원회 승인 등

| 5   | 제안교 | 한국교통대학교 |
|---|-----|---------|
| <p><input type="checkbox"/> 혁신 장애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되고 있는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이하 교연비) 책정 및 집행의 대학 자율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중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에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이하 교연비)을 책정하여 집행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내 현안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제안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의 교연비 최초 허가이후 집행 및 수요대응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변경 기회를 부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내 교연비는 교육부의 최초 허가 이후 변경 불가능</li> <li>-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학 내 현안문제 및 정책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초 승인된 총액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 신청 및 증액은 현행대로 교육부 허가제를 유지하고 승인된 총액내에서 변경은 신고제로 변경</li> </ul> |     |         |

## [대학 재정]

| 6   | 제안교 | 가천대학교 |
|---|-----|-------|
| <p><input type="checkbox"/> 혁신 장애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2018년부터 대학 입학금 80%를 5년에 걸쳐 감축하고 있음</li> <li>○ 정부는 시행 당시 입학금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가장학금 2유형을 확대·지급하고,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li> </ul> <p><input type="checkbox"/> 제안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학교 재정 여건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li> <li>○ 입학금 감축에 따른 대학의 재정 손실은 매년 10억~40억 수준으로, 학생교육에 대한 대학의 재정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고등교육 발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li> </ul> <p><input type="checkbox"/> 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금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대학 재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요망(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증액 등)</li> </ul> |     |       |

| 7  | 제안교 | 광주대학교 |
|--|-----|-------|
| <p><input type="checkbox"/> 혁신 장애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사립대 등록금 제한 문제</li> <li>○ 중복성이 높은 대학평가(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기본역량진단 등)로 인한 대학 행정력 낭비 문제</li> <li>○ 국가장학금 2유형 문제</li> </ul> <p><input type="checkbox"/> 제안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혁신을 추진하는 기초 동력은 개별 대학의 재정 능력으로 볼 수 있는데 사립대 특히 지방에 위치한 지방 사립대는 대학등록금이 사실상 10년간 동결되고 국가장학금 2유형 관련하여 예산 손실이 커지고 있어 혁신 추진의 현실적 어려움이 큰 상황임</li> </ul> <p><input type="checkbox"/> 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대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거나 법적으로 등록금 인상을</li> </ul> |     |       |

|   |
|---|
| <p>허용하는 범위를 정해놓고 범위 내의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불이익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교내장학금 규모 증가 및 등록금 인하를 해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대학의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국가장학금 2유형은 폐지해야 함</li> <li>○ 정부가 실시하는 대학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유사 지표가 많아 대학에서는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두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해야 함</li> <li>○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등의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현황을 바탕으로 대학별 맞춤형 특성화 및 혁신을 통한 자율적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 정부는 일원화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li> </ul> |
|---|

| 8   | 제안교 | 동양대학교 |
|---|-----|-------|
| <p><input type="checkbox"/> 혁신 장애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정책을 선거 또는 대중 인기 영합의 한 방편으로 인식하는 경향</li> <li>○ ‘반값 등록금’으로 교육의 질(質) 저하, 교수의 사기저하를 초래. 대학의 활력 상실로 이어지고 결국 학생들의 사기 저하로 나타남</li> </ul> <p><input type="checkbox"/> 제안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경쟁력은 대학에서 나오는 것인데, 현재 우리 대학에서 경쟁력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 사소한 일까지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고 일부 사립대의 비리를 전체 사립대학의 부패로 몰고 가는 것부터 지양(止揚)해야함</li> <li>○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사립대학을 동반자(同伴者)가 아니라 마치 ‘적(敵)’으로 간주한다는 점. 그러나 필요할 때는 ‘대학 책임론’으로 압박. 예를 들면, 취업도 대학 책임으로 몰고 감</li> <li>○ 현재 한국 대학의 상황이 최악으로 침체된 상태인데, 이런 아마추어 선수들로 프로선수(선진국 대학들)들을 상대하라는 것은 무리</li> </ul> <p><input type="checkbox"/> 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을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임을 재인식할 것. 또 사립대학을 ‘정책적 동반자’로 인식하여 대학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것 ○ 인기영합의 교육정책을 지양하고 ‘대학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li> <li>○ 등록금을 현실화하여 ‘대학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li> </ul> |     |       |

| 9  | 제안교 | 청주대학교 |
|--|-----|-------|
| <p><input type="checkbox"/> 혁신 장애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여 년 가까이 이어진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재정 위기</li> </ul> <p><input type="checkbox"/> 제안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 위기라는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 혁신을 위한 여력이 모자란 대학이 다수 존재</li> <li>◦ 특정 대학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다수 지역 사립대학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안</li> </ul> <p><input type="checkbox"/> 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 확대</li> <li>◦ 등록금 동결정책 재고 요청</li> </ul> |     |       |

| 10  | 제안교 | 한라대학교 |
|---|-----|-------|
| <p><input type="checkbox"/> 혁신 장애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재정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느 대학이나 대학을 혁신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문제임. 교육과정 개선, 인프라 구축 등 학생들에게 우수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위기는 교육목표 실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학생의 수와 상관없이 학습자에게는 양질의 교육이 균등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함</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제안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재정 제한 및 정부 사업 취득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사업은 소위 상위권 대학을 지원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방 사립대의 경우에는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음. 올해 가장 치열했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 각 대학마다 얼마나 많은 교수와 직원들이 보고서 작성에 시간과 열정을 쏟았는지 사업을 준비해본 대학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임. 정부가 굳이 칼자루를 쥐지 않아도 가까운 미래에 많은 대학은 정리될 것이므로, 정부 사업으로 인하여 대학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함.</li> </ul> </li> </ul> |     |       |

□ 개선 방안

-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공평한 재정 지원 필요
  - 강원도의 경우 국립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큰 규모의 대학들이 모든 재정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 자리는 절대 다른 대학이 넘볼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렸음. 큰 규모의 대학들이 잘 할 수 있는 점이 있듯이 소규모의 대학들도 밀착형 학생 지도와 같이 큰 규모의 대학에서 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는 균질한 교육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공평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규모에 의한 대학 분류 필요
  - 현재 정부의 사업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한 뒤, 지역으로 묶어서 경쟁하도록 구도를 만들어 놓았음.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에 근거한 대학의 규모면에서 경쟁해야 함. 입학생이 1만 명이 넘는 대학의 결과 지표와 1천 명이 채 안되는 대학의 결과 지표는 당연히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임. 따라서 학생 수에 근거한 대학 분류를 제안함.

## [대학 평가]

| 11   | 제안교 | 대구가톨릭대학교 |
|--|-----|----------|
| <p><input type="checkbox"/> 혁신 장애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평가 중복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가 진행하는 대학에 대한 유사한 평가가 중복되고 있음</li> <li>-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법적 근거 미비</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제안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평가가 나타나고 평가지표가 변경되는 등 평가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짐에 따라 소모적인 경쟁과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자주성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있음</li> <li>○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모두 비수도권 대학의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으며, 그 결과 정원 감축 비율이 높아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비판을 받음</li> <li>○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 교직원,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대학 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대학전반에 대한 정량 및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 조건부 인증, 인증유예, 불인증 등으로 공개하고 대학재정지원에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등 대학 전반에 대한 평가로 활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으며,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있음</li> </ul> <p><input type="checkbox"/> 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전반에 대한 평가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으로 통합</li> </ul> |     |          |

| 12   | 제안교 | 한국교통대학교 |
|--|-----|---------|
| <p><input type="checkbox"/> 혁신 장애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기관인증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각종 재정지원사업 등 외부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의 전 행정력 소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9~2021년까지 3년간 총 143 개교를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과 대학 경쟁력 제고를 꾀함.</li> </ul> </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의 행정력이 소비되어 대학 경쟁력 제고 및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재양성에 매진하기 어려움.</li> </ul> <p>□ 제안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기관인증평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한국연구재단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 복수의 평가 주체가 대학을 평가</li> <li>- 대학기관인증평가는 5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3년으로 평가 주기는 상이하나 중복되는 평가항목이 있는 등 평가 항목의 조정 필요</li> <li>-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 대학이 결정되었으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비가 차등 지급되어 각 대학이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이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부담이 가중</li> </ul> <p>□ 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기관인증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평가항목 조정을 통해 통합하여 현행 2차례의 평가를 1차례 평가하여 대학 부담 축소</li> <li>○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지원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은 계획평가를 제외하고 실적평가를 통해 사업비 지원</li> </ul> |
|--|

| 13   | 제안교 | 한국항공대학교 |
|--|-----|---------|
| <p>□ 혁신 장애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교육부) 주관 획일적이며, 단기적인 성과지표로 진행되는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li> </ul> <p>□ 제안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학평가(기본역량진단, 기관평가인증 등) 및 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LINC, BK 등)은 대학 운영에 있어 매우 영향력이 높음</li> <li>○ 이에, 모든 대학은 모두 정부(교육부) 평가를 대비한 평가지표 위주로 대학 역량을 집중하여 운영함에 따라 대학마다 특징 없이 획일화되고 있음</li> <li>○ 정부(교육부) 평가지표에 대한 부담감 해소 및 대학마다 특성화를 살릴 수 있도록 고등교육 지원금 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성장 역량 집중 도모 필요</li> </ul> |     |         |



☐ 개선방안

- 대학의 특성화 및 특징점을 위주로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교부금 제도 도입·운영(재학생 규모별 차등 지원)
- 기존의 대학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방식은 모든 대학을 특징 없이 획일화하는 부작용이 높음
- 대학이 자발적으로 특성화 및 특징점 위주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교부금을 통한 재정지원 필요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은 우수인재 유치 및 대학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고등교육 교부금을 교육품질 향상 등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제안함

| 14 | 제안교 | 한라대학교  |
|----|-----|--|
|    |     | <p><input type="checkbox"/> 혁신 장애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평가의 단일적인 모형과 획일화된 발전모형</li> </ul> <p><input type="checkbox"/> 제안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획일화된 평가 모형과 발전모형에 갇혀 점점 혁신의 원천인 다양성과 창의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제안함.</li> </ul> <p><input type="checkbox"/> 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사람과 각 나라가 다르듯이 각 대학 고유의 독창적이고 전략과 핵심 성공 요인이 필요하고, 각기 다른 형편과 고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연한 평가모형과 고등교육의 발전모형이 개발되고 제시되어야 함</li> <li>○ 각 대학에 요구되는 조건(고도의 연구성과 중심 또는 실무전문가 양성형 대학 등)이 같지 않음으로 개별 대학, 특히 지방대학의 내적·질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대학의 특수성에 걸맞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평가요소를 달리해야 함.</li> <li>○ 정부가 제시하는 현재의 발전모형과 평가체제가 아예 없어도 된다는 가정도 필요함. 대학교육의 평가는 충원율과 취업률, 취업의 질, 시장의 평가, 사회의 평판 영역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음. 평가지표를 단순히 하면 오히려 개별 대학들이 상이한 환경조건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가지고 고유의 특색과 특정한 경쟁력 계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음.</li> </ul> |

| 15  | 제안교 | 한밭대학교 |
|---|-----|-------|
| <p>□ 혁신 장애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한 평가제도 준비에 따른 대학의 피로도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취지 및 시기가 유사한 기본역량진단과 대학 기관평가인증 평가시행으로 대학의 피로도 증가</li> <li>- 아울러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역선도대학육성시범대학 등등 각종 대외평가 준비로 평가부담 가중</li> </ul> </li> <li>○ 평가항목의 중복과 획일적이고 산출이 어려운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역량진단의 많은 지표들이 기관평가인증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 산출식, 평가기준 등이 달라 대학의 평가업무에 대한 행·재정적 부담 과중</li> <li>- 대학 특성(공과대 중심, 특수목적대 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화된 평가지표로 일부 대학은 평가에 불리하거나 개인 정보보호 등으로 실적반영에 애로 발생</li> </ul> </li> </ul> <p>※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소수자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 새터민 학생 파악 등</p> <p>□ 제안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은 2019년에 시행되어 대학은 이중적 평가 부담으로 단일화 절실</li> <li>○ 유사한 평가 지표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특수성이 훼손되고 대학의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본연의 취지 훼손 및 행·재정적 낭비 초래 우려</li> </ul> <p>□ 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주기 기본역량진단과 대학 기관평가인증의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개의 평가·진단의 통합으로 대학은 평가관련 준비에 따른 부담을 덜고, 대학에 맞는 교육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배려</li> </ul> </li> <li>○ 평가지표의 슬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들이 평가지표의 복잡화·세분화로 인하여 평가를 위한 대학운영의 폐단을 없애고 기본적 평가지표로도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배려 필요</li> </ul> </li> </ul> |     |       |

## [대학 혁신]

| 제안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
|---|-------------------|
| <p>□ 대학의 자율적 질 관리에 기초한 대학구조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령인구의 대폭적인 감소로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임. 다만, 학생수 감소에 맞춰 대학의 수나 정원의 인위적 축소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질 관리를 통해 강소대학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li> <li>○ 대학구조개혁은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평가를 통한 추진방식 보다는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에 기초한 추진방식이 요청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자율적 질 관리 체제인 “대학기관평가인증체제”를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중복 평가에 따른 평가 비용 절감과 대학의 부담을 완화하여 "자체적인 교육에 대한 질 보장 장치와 절차"를 구축하여 시행</li> <li>- 기본취지와는 다른 정부의 정책지표 반영 등 정부정책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성있고 타당성있는 고등교육의 질 평가체제로 구축</li> <li>-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 대학자율평가체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통해 고등교육에서의 국제 통용성 제고를 위한 안정적 질 관리 체제의 정착 필요</li> </ul> </li> <li>○ 단순한 학생수 감축이 아닌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에 근거한 대학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도록 평가체계를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하여 불인증 대학은 퇴출하도록 하고, 인증 자격을 갖춘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각종 비리나 부정행위에 연관된 대학은 엄격하게 윤리기준을 적용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등 정부의 규제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 강구</li> <li>- 이를 통해 정부가 강조하는 “정원감축” 못지않게 중요한 “학사제도, 대학 관행 및 대학 문화 개선, 전반적인 질 제고” 등을 통해 대학평가의 가장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li> </ul> </li> </ul> <p>□ 대학 연계 플랫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의 질 향상과 운영 효율성 극대화, 교육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학연계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등교육의</li> </ul> |                   |

고도화 추진 필요

○ 대학 간 협력 및 공유를 위한 대학연계 플랫폼 구축

- 지역별, 설립별, 특성별, 그리고 향후 전체 대학 간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활용  
해 교육과 활동을 연계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성
- 국내 대학들간, 교육참여주체간에 협업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교  
과/비교과) 등의 연동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시설 자원의 공유
- 예) 서울포럼의 공유대학플랫폼, 국립대학의 온라인강의 플랫폼 등

○ 전문대학-일반대학의 연계를 위한 유연한 학사운영 플랫폼 구축

- 전문대학이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현직 산업  
분야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일반대학이나 산업대학  
등과 연계하도록 편입을 포함한 다양한 학교체제 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  
는 유연한 학습환경을 구축

○ 산-학-관 협력 및 연계를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 대학, 기업, 연구소, 정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산-학-관 협력 및 연계를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필요
- 참여자간의 인적, 물적, 지적 자원 등 자원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통하여 협력네트워크 운영
- ※ 산업계관점 평가 등을 플랫폼으로 하여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등을 산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미스매치 해소, 취업률 제고, 중소기업 연계, 현장실습 인  
센티브 지원 등 지원방안 마련

○ R&D 자금의 재분배를 통한 실질 연계 강화

- 정부의 R&D 연구비가 정부출연연구소에 치중되어 있고, 대기업에도 많은 R&D  
연구자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분배가 필요
- 특히, 출연연구소와 기업연구소가 대학과 연계되도록 하며, 이들이 산-학-관 협  
력네트워크의 중심 대학에 소속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 지역사회를 위한 대학 자원 공유

○ 지역사회 기여활동으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허브  
(education hub)로서 대학의 '대학다운'역할 강화 추진

- 고등교육법 제36조에 의해 “전일제 등록”이 기본적인 대학의 등록 형태이고, 시간제  
등록은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으므로 성인학습자가 수  
업 대부분이 주간에 이루어지는 ‘정규 학위과정’에 진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대학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 혁신

-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제 등록제」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함

※ 현재 시간제등록제는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대학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입학생 외 일반인’이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임

- 많은 선진국에서 대학 입학생들에게 시간제 등록제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므로 성인대학생 비율이 높은 편이고, 고등교육수준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입학정원 관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시간제 등록제 도입이 어려웠지만,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상황에 있으므로 “비수도권 대학”부터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대학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장학금 지원제도의 혁신

- 전일제 학생만이 아니라, 시간제 등록생과 대학운영 자격과정 등록 학생 등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이 고등교육수준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개편 필요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고등교육 수출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증대 기반 위에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과 교육수출의 전환점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 및 가치 제고, 교육부문 서비스 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글로벌 인재 경쟁력을 강화 추진

○ 교육수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과 제도의 개선 및 국가차원의 지원

-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행·재정 지원 강화
- 국제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선진국 등에 지역별, 유형별로 다양한 해외 캠퍼스 설립 추진 전략 수립 및 지원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교비 활용을 통한 진출 허용, 현지 규정에 의한 대학 운영 등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규제 완화

○ 해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 현재 교육수출과 관련된 부서들을 대학이 개별 접촉하여 현안을 해결하는 상황임으로, 이를 효율화하기 위해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
- 교육수출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육성을 통해 국제교육 교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며 업무 전문성 제고

- ODA 자금을 활용하여 후발국 교육지원에 대한 전담기구 역할도 수행
- 대학과 기업들을 연계하여 우수 유학생에 대한 기업 장학금, 인턴십, 취업 등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마련
- ※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 등을 플랫폼으로 하여 해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수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 ※ 해외 사례: 일본(JASSO; 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호주(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뉴질랜드(ENZ; Education New Zealand), 영국(British Council), 프랑스(Campus France) 등

| 제안자   | 송실대학교 장경남 |
|---|-----------|
| <p><input type="checkbox"/> 제안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 국립대 기초학문 분야 교육(무상교육), 사립대는 설립 목적 또는 특성화 방향에 따른 실용학문 분야 교육(자율적 운영)</li> </ul> <p><input type="checkbox"/>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거점 국립대학 무상교육과 기초학문분야 특화는 국가가 기초학문 육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됨. 사립대학은 기초학문 분야가 아닌 실용학문 분야로 특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초학문은 국가가 관리 운영하고, 실용학문은 사학이 관리 운영하는 체제가 됨.</li> </ul> <p><input type="checkbox"/>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 국립대를 선정하여 대학별로 기초학문분야 가운데 어떤 분야를 특화할 것인지 결정하여 운영. 예를 들면 수도권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로 선정한다면 서울대에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특화함. 이를테면 인문학 분야가 가장 강점이라면 인문학 특화 거점 국립대학이 되는 것임</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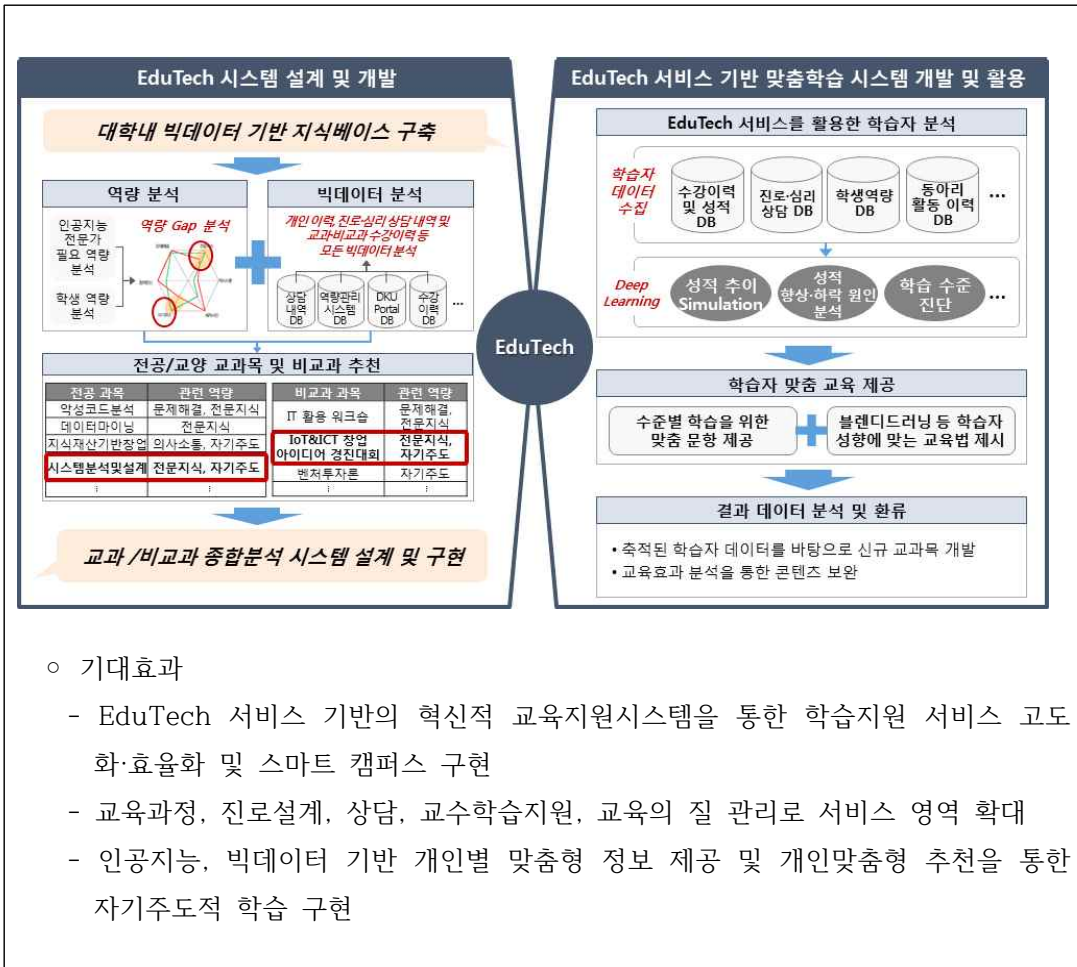
| 제안자   | 단국대학교 박범조 |
|---|-----------|
| <p><input type="checkbox"/> 제안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uTech 서비스 기반의 맞춤형 교육지원 및 교육환경 구축 사업</li> </ul> <p><input type="checkbox"/>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제반기술을 교육에 접목한 EduTech 서비스 기반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으로 각종 교육지원시스템의 고도화 필요성 대두</li> </ul> |           |

-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MOOC를 활용한 지식구성 네트워크의 급격한 변화
- 인터넷, 가상/증강 현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교육혁신 요구
- 개인별 미래 설계 지원 및 맞춤형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 주요내용



- EduTech 시스템 설계 및 개발
  - 빅데이터 기반 지식베이스(Knowledge) 구축, 대학내 방대한 정형·비정형 데이터 분석 및 지속적 학습을 통한 정확도 향상
  - 학생 AS-IS 역량과 TO-BE 역량 간의 Gap 분석 및 연계 활동 추천
- 교과·비교과 종합분석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학생 정보와 시스템 DB 내·외부 정보를 활용, 분석하여 최적의 답변 제공
- EduTech 서비스 기반 맞춤형 학습(Adaptive Learning) 시스템 개발 및 활용
  - EduTech 서비스를 활용한 학습자 분석, 학습자 맞춤 교육·취업 정보 제공, 결과 데이터 분석 및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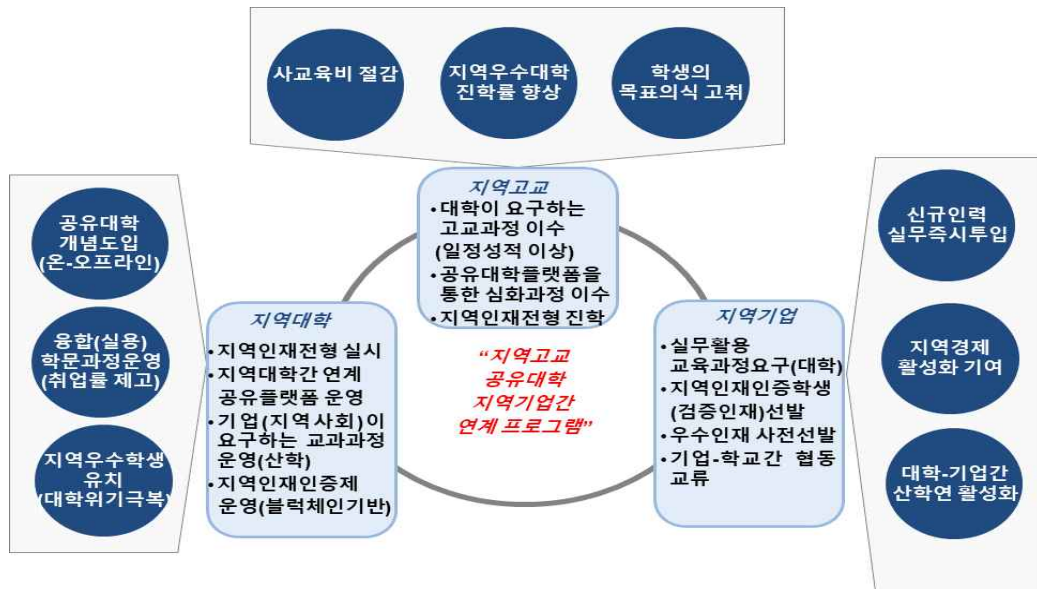


- 기대효과
  - EduTech 서비스 기반의 혁신적 교육지원시스템을 통한 학습지원 서비스 고도화·효율화 및 스마트 캠퍼스 구현
  - 교육과정, 진로설계, 상담, 교수학습지원, 교육의 질 관리로 서비스 영역 확대
  -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 및 개인맞춤형 추천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구현

| 제안자   | 단국대학교 박범조 |
|---|-----------|
| <div> <div>□ 제안명</div> <div>○ 지역고교-공유대학-지역기업 간 연계 프로그램</div> </div> <div> <div>□ 제안이유</div> <div> <div>○ 고교-대학-기업 연계를 통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발굴 및 양성</div> <div>○ 대학 및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고교과정부터 이수함에 따른 사교육 부담 완화</div> <div>○ 공유대학 개념 도입으로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극복 및 지역대학 간 공동발전</div> <div>○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기업 취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학의 취업을 제고</div> </div> </div> |           |



□ 주요내용



○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고교-대학-기업 등이 협업을 통한 지역 내 실무우수 인재 양성

### 부록 3. 대교협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차기 진단의 운영 연계(안)

#### 1 평가단일화를 위한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 설계(안)

##### □ 차기 진단을 대체할 수 있도록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설계

- 평가준거, 평가부문, 평가영역별로 '우수(E)'판정 척도를 신설

(현행) 3개 수준 판정 : - , 충족(P), 미흡(W), 미충족(F)

(변경) 4개 수준 판정 : 우수(E), 충족(P), 미흡(W), 미충족(F)

\* 우수(E: Excellence) : 인증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타대학에 확산할 수준

우수 판정 기준(안)은 추후 정책연구를 통해 확정함

- 또한 대교협은 후속 조치 다양화 등을 통해 질 관리 지속 추진

| 판정 유형(인증기간)* |        |                        | 후속 조치        | 재정지원       | 지원 범위                                  |
|--------------|--------|------------------------|--------------|------------|--|
| 인증           | 우수인증** | 5년                     | 정량지표 중심 모니터링 | 재정지원       | - 재정지원 신청 자격 부여<br>- 재정지원 범위 차등 적용     |
|              | 인증**   | 5년                     | 모든 평가준거 모니터링 |            |  |
|              | 조건부인증  | 2년                     | 보완평가         |            |  |
| 불인증          | 인증유예   | 대학기관평가인증<br>신청 시 평가 실시 |              | 재정지원<br>제한 | - 재정지원 신청 자격 미부여<br>-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 제한 |
|              | 불인증    |                        |              |            |  |
|              | 미인증    |                        |              |            |  |

\* 판정 유형 : 평가준거 → 평가부문 → 평가영역의 상향식 판정에 따라 대학 전체 인증 유형 확정

\*\* 우수인증, 인증의 인증기간은 5년으로 동일하나 후속 조치에 차이를 둠

정량지표 중심 모니터링 : 평가원에서 정량지표 산출 후 기준값 미충족 시 자료 요청

모든 평가준거 모니터링 : 대학 보고서 작성 → 서면평가 → (필요시) 현장 모니터링

<2주기와 3주기(안) 판정 유형 비교표>

| 2주기     |      |       |                        | 3주기(안)  |       |       |                        |
|---------|------|-------|------------------------|---------|-------|-------|------------------------|
| 판정 유형   |      | 후속 조치 |                        | 판정 유형   |       | 후속 조치 |                        |
| 인증      |      |       |                        | 인증      | 우수인증  | 5년    | 정량지표 중심 모니터링           |
|         |      |       |                        |         | 인증    | 5년    | 모든 평가준거 모니터링           |
|         |      |       |                        |         | 조건부인증 | 2년    | 보완평가                   |
| 불<br>인증 | 인증유예 |       | 대학기관평가인증<br>신청 시 평가 실시 | 불<br>인증 | 인증유예  |       | 대학기관평가인증<br>신청 시 평가 실시 |
|         | 불인증  |       |                        |         | 불인증   |       |                        |
|         | 미인증  |       |                        |         | 미인증   |       |                        |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결과 비교>

| 대학 기본역량진단       |       |         | 대학기관평가인증 |       |         |              |         |    |
|-----------------|-------|---------|----------|-------|---------|--------------|---------|----|
| 구분              | 비율(%) | 대학 수(교) | 판정 유형    | 1주기   |         | 2주기(3차년도 기준) |         |    |
|                 |       |         |          | 비율(%) | 대학 수(교) | 비율(%)        | 대학 수(교) |    |
| 자율개선            | 64    | 120     | 인증       | 82.11 | 156     | 66.67        | 64      |    |
| 역량강화            | 20    | 30      | 조건부인증    | 4.21  | 8       | 11.46        | 11      |    |
| 재정지원<br>제한      | 6     | 10      | 인증유예     | 4.21  | 8       |              |         |    |
|                 |       |         | 불인증      | 0.53  | 1       |              |         |    |
| 진단제외            | 9     | 27      | 미인증*     | 8.95  | 17      | 21.88        | 21      |    |
| 계               |       | 187     | 계        | 100   | 190     | 100          | 96      |    |
| 평가 중<br>(2019년) |       |         |          |       |         |              | 상반기     | 18 |
|                 |       |         |          |       |         |              | 하반기     | 69 |
|                 |       |         |          |       |         |              | 계       | 87 |

※ 1주기 대상 대학 : 190개교[폐교된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한중대 제외, 울산과기원 (2014년 인증) 포함]

\* 2019년 4. 24 기준 평가 완료, 평가 중인 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6개 필수평가 준거 미충족 대학

□ 필수평가준거 및 정량지표 기준값 상향 검토

○ 필수평가준거: 6개 필수평가준거 모두 충족 시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대상 대학으로 확정

| 준거명            | 1<br>주기 | 2<br>주기 | 역량진단<br>(만점기준)     | 3<br>주기  | 산출식  |
|----------------|---------|---------|--------------------|----------|--|
| 전임교원<br>확보율    | 61      | 61      | 71.257<br>(사립)     | 상향<br>검토 | $\frac{\text{전임교원 수(명)}}{\text{교원법정정원(명)}} \times 100$ ※ 의학계열은 제외하고 산출함<br>※ 학생정원과 재학생수 기준 중 낮은 값을 사<br>용함 |
|                |         |         | 71.210<br>(국립대법인)  |          |  |
| 정원내 신입생<br>충원율 | 95      | 95      | 99.517<br>(수도권)    | -        | $\frac{\text{정원내 입학자수(명)}}{\text{정원내 모집인원(명)}} \times 100$   |
|                |         |         | 98.774<br>(비수도권)   |          |  |
| 정원내 재학생<br>충원율 | 70      | 80      | 104.702<br>(수도권)   | 상향<br>검토 | $\frac{\text{정원내 재학생수(명)}}{\text{학생정원-학생 모집 정지 정원(명)}} \times 100$ ※ 1주기 → 2주기 기준값 상향                      |
|                |         |         | 97.656<br>(비수도권)   |          |  |
| 교사 확보율         | 100     | 100     | 100                | -        | $\frac{\text{기본시설(m2)+지원시설(m2)+연구시설(m2)}}{\text{기준면적(m2)}} \times 100$                                     |
| 교육비 환원율        | 100     | 100     | 316.037<br>(국공립)   | -        | $\frac{\text{총교육비(천원)}}{\text{등록금(천원)}} \times 100$ ※ 1주기 → 2주기: 총교육비 중 국가장학금 1<br>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외       |
|                |         |         | 312.962<br>(국립대법인) |          |  |
| 장학금 비율         | 10      | 10      | 18.99              | -        | $\frac{\text{장학금(천원)}}{\text{등록금(천원)}} \times 100$   |

\* 필수평가준거 기준값 상향은 추후 정책연구를 통해 확정함

- 정량지표

| 정량지표                          | 1주기      | 2주기     | 3주기(안)    | 비고   |
|-------------------------------|----------|---------|-----------|--|
| [1.2.1] 세입 중 등록금 비율*          | 72%이하    | 72%이하   | 67.95     | 산출식 변경으로 기준값<br>상향 효과*                       |
| [1.2.1] 세입 중 기부금 비율           | 0.4%     | 0.5%    | 0.8       | 기준값 상향. 평가대상<br>확대<br>(국공립대→<br>국공립대/사립대 공통) |
| [1.2.1]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사립대)    | 0.15%    | 0.4%    | 0.51      | 기준값 상향                                       |
| [3.1.2] 시간강사강의료               | 43,000원  | 46,000원 | 51,835.52 | 기준값 상향<br>(물가상승률 반영하여<br>매년 상향)              |
| [3.1.3] 전임교원 1인당교내연구비         | 1,000천원  |         | 1,032.09  | 산출식 변경으로 기준값<br>상향 효과*                       |
| [3.2.1] 직원 1인당 학생수*           | 70명 이하   | 70명 이하  | 54.22     |  |
| [4.1.2] 기숙사 수용률               | 10%      | 11%     | 13.77     | 기준값 상향                                       |
| [4.1.3] 재학생1인당연간자료구입비(결산)     | 50,000원  | 54,000원 | 59,432.74 | 기준값 상향                                       |
| [4.1.3]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   | 1명       |         | 1.08      | 2주기 기준값 유지                                   |
| [5.1.1] 전임교원 1인당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 0.35%    |         | 0.37      |  |
| [5.1.1] 전임교원 1인당SCI급 논문 실적    | 0.05%    |         | 0.05      |  |
| [5.1.1] 전임교원 1인당저역서실적         | 0.07%    |         | 0.06      |  |
| [5.1.1] 전임교원 1인당교외연구비         | 10,000천원 |         | 7500.9    |  |
| [5.1.2] 졸업생의 취업률              | 45%      | 55%     | 60        |  |
|                               |          |         |           |  |

- 산출식 변경 내역: 1주기→2주기

| 평가<br>준거명<br>(2주기<br>기준) | 1주기 산출식   | 2주기 산출식  |
|--------------------------|---|--|
| 1.2.1<br>대학재정<br>확보      | $\text{국공립대} \frac{(\text{입학금} + \text{수업료} + \text{기성회비})(\text{천원})}{\text{세입총액}(\text{천원})}$ | $\text{국공립대} \frac{\text{등록금 수입}(\text{천원})}{\text{세입총액}(\text{천원})} \times 100$ <p>※ 국공립대 분자<br/>- 기성회계 → 대학회계로 변경<br/>- 등록금에 입학금, 수업료만 포함, 기성회비 제외</p> |
| [세입 중<br>등록금<br>비율]      | $\text{사립대} \frac{\text{등록금 수입}(\text{천원})}{\text{교비수입}(\text{천원})} \times 100$                 | $\text{사립대} \frac{\text{등록금 수입}(\text{천원})}{\text{운영수입}(\text{천원})} \times 100$ <p>※ 사립대 분모<br/>- 운영수입=교비수입-(자산 및 부채 수입+미<br/>사용전기이월자금)</p>              |

| 평가<br>준거명<br>(2주기<br>기준)                              | 1주기 산출식   | 2주기 산출식   |
|---|---|---|
| 3.2.1<br>직원<br>인사제도<br>및 확보<br><br>[직원<br>1인당<br>학생수] | <div>(학부 정원 내외 + 대학원) 재학생수(명)</div> <hr/> <div>직원수(명)</div> <div>※ 직원수: 특정직+일반직+기술직+별정직+기능직+계약직</div> | <div>(학부 정원 내외 + 대학원) 재학생수(명)</div> <hr/> <div>직원수(명)</div> <div>※ 직원수: 특정직+일반직+기술직+별정직+기능직+계약직+고용직</div> |

## 2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지표 연계 및 인증 결과 일부 활용(안)

### □ 평가범위: 대학기관평가인증 > 대학 기본역량진단

- 대학기관평가인증: 교육, 연구, 사회봉사
- 대학 기본역량진단: 교육

### 교육 관련 평가준거 연계를 통한 평가 부담 완화

#### □ 평가지표명과 하위 평가요소가 같은 공통지표 설정

- 공통지표 산출식, 보고서 작성내용, 근거자료, 평가 용어 등을 통일하여 부담 완화
  - \* 정량지표: 산출식
  - \* 정성지표: 보고서 작성내용, 근거자료
- 공통지표 설정(안)
  - 평가지표 및 평가요소 같은 6개 지표 우선 검토(상세 비교는 <참고 3> 확인)

| 구분      | 대학 기본역량진단     | 대학 기관평가인증         |
|---------|---------------|-------------------|
| 정량지표    | 교사 확보율        | (필수평가준거) 교사 확보율   |
|         | 장학금 지원        | (필수평가준거) 장학금 비율   |
| 정성지표    |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 5.1.3 교육만족도       |
|         | 진로·심리상담 지원    | 4.2.1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
|         | 취·창업지원        | 4.2.1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
| 정성+정량지표 | 재정·회계, 법인 책무성 | 1.2.1 대학재정 확보     |

### 평가준거별 결과 활용을 통한 평가 부담 완화

#### □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교육 관련 평가 결과 활용

-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교육 기능 관련 평가준거 중 진단 활용 지표 명시
- 재정지원가능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선별에 대학기관평가인증 교육 기능 관련 평가 준거 결과 활용

| 구분        | 평가범위 |    |      | 준거<br>판정        | 최종 판정   |
|-----------|------|----|------|-----------------|---|
| 대학기관평가인증  | 교육   | 연구 | 사회봉사 | 4개*<br>수준<br>판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거→부문→영역의 상향식 판정</li> <li>• 최종 인증 유형 판정</li> </ul> |
| 대학 기본역량진단 | 교육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거별 판정 결과 종합</li> <li>• 상대적 순위 집계</li> </ul>       |

\* 우수(E), 충족(P), 미흡(W), 미충족(F)

### 3 2021년 일괄평가 일정(안)

---

- 평가절차: 현행 대학기관평가인증 절차 적용
  
- 일정 운영(안): 8월까지 결과 판정 완료
  - 보고서 제출(5월) →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6~7월) → 평가결과검증(7월) → 대학별 평가 초안 의견 수렴(7월) → 결과 판정(8월)



## 교육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고등교육 정책 방안 연구

---

발 행: 2019년 10월 15일

발행인: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발행처: 영남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교육부지정)

주 소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중앙도서관 1502호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전화: 053)810-3684

홈페이지: <http://hepri.yu.ac.kr>

인쇄처 대구프린팅(053-811-2580)

---

<비매품>